

• 시민이 분석하는!



제11회 2024 나라예산 토론회



2023. 11.01.(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후솔루션
동물권행동 카라,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플랜 1.5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살기연구소
국회의원 김주영·민형배·양경숙·윤미향·이소영·장혜영·정태호

• 평균기온
• 기후환경
• 동물권
• 공공교통
• 보건지
• 노동
• 종교



•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프로그램

10:00 인사말	국회의원 김주영·민형배·양경숙·윤미향·이소영·장혜영·정태호
10:15 총론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10:30 분야별 평가	기후 분야 플랜1.5 박지혜 변호사
10:37 분야별 평가	동물 분야 동물권행동 카라 조현정 정책기획팀장
10:45 분야별 평가	교통 분야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선임연구위원
10:52 분야별 평가	복지 분야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사무국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훈 간사
11:05 분야별 평가	보건 분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11:12 분야별 평가	노동 분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채은 상임활동가 함께살기연구소 정초원 팀장
11:25 분야별 평가	종교 분야 종교투명성센터 김집중 사무총장
11:35 종합토론	
10:50 폐회	

목차

인사말_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04
인사말_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06
인사말_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08
인사말_윤미향 국회의원	010
인사말_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12
인사말_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014
인사말_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16
총론	018
단체별 평가	025
기획재정위원회	032
환경노동위원회	040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06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4
국토교통위원회	087
보건복지위원회	100
교육위원회	135
행정안전위원회	13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5
정무위원회	150

인사말 1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이 분석하는 2024 나라예산 토론회> 개최에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4,253개 세부사업에서 56.5조 원 감액을, 4,069개 사업에서 74.6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23조 원을 지출구조조정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건전재정을 달성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지출구조조정 23조 원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요구에도 정부는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아 도대체 어떤 내용이, 어떻게 구조조정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깜깜이 예산안을 내놓고는 자화자찬하는 꼴입니다.

023년 본예산 대비 많이 감액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육분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프로그램이 6.9조원 감액됐고, 보건 분야 공공보건의료확충 프로그램이 1.5조원 감액, 890억원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고용창출 프로그램이 1.3조 감액됐으며, 보건 분야 감염병위기대응 프로그램이 85.6%, 1.3조 원 감액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고 ‘건전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계속된 대내외적 정치·경제 위기 상황에서 물가는 오르고 서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내국세는 경기둔화 및 감세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0.1% 감소했습니다. 결국 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실효성이 없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지출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낭비되는 예산을 막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건전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한마디에 예산이 줄줄이 깎여나가는 형식입니다.

올해 세수감소만도 6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법인세 세수평균도 25.4조 원에 이릅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1.2조 원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시민이 분석하는 2024 나라예산 토론회>가 값진 자리인 이유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계획되고 집행되는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야 합니다. 경제위기 속에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인사말 2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는 민형배입니다.

「2024 나라예산 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뜻깊은 행사가 11년째 이어질 수 있도록 애써오신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권자 시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세금을 내는 주체입니다.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가 예산을 점검하고 정부를 향해 따져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 예산 국회에서 그 일을 합니다. 맡겨주신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656조9000억 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총지출액은 올해보다 18조2000억 원 늘었지만, 지출 증가율은 2.8%로 지난 2005년 재정 통계 정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나라 곳간 잠그고 돈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감세로 재벌대기업에 올해 8월까지만 20조 원의 법인세를 깎아주고는 쓸 돈이 없다니 기막힙니다.

3년 연속 세수 추계를 틀린 무능한 기재부는 각 분야 민생예산 삭감에만 혈안입니다. 제가 몸담은 과방위에선 대통령이 R&D‘이권카르텔’을 입에 올리자, 과기부가 내년 R&D 예산을 16.6%(5조1천억 원) 삭감했습니다. 젊은 청년 과학자들이 내년에 연구 과제를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하고 있는 ‘동료지원가 사업’도 예산이 23억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동료지원가)이 다른 중증장애인을 만나 취업을 연계해주는 것인데,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에 참여해온 중증장애인 187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습니다. 청년의 주거 자립을 돕는 월세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예산 442억 원에서 76.5% 줄어든 103억5천만 원만 편성됐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로서 해야 할 공적기능을 포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복지예산도 삭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예산은 집중 삭감됐습니다. 이들을 위한 278개 사업 중 176개(63.3%)가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 정부가 생각하는 재정건전성이고 합리적 재정운용인가 봅니다. 나라의 미래와 주권자 시민, 사회적 약자에겐 돈을 아끼고, 재벌대기업이 주머니 채우도록 감세해 주는 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두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특히 국제정치 경제 상황이 악화돼 국내 경제 상황도 어려운 지금, 국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귀합니다. 노동, 보건, 복지, 공공, 교통, 기후·환경, 동물 분야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들이 어떻게 삭감됐고, 어떻게 복구되어야 하는지 귀한 의견 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목소리 잘 듣고 다가오는 예결위에서 정부를 상대로 민생예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오고 간 논의가 민생예산을 되살리는데 힘이되고 정부가 올바른 재정운용을 하는데 따끔한 회초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을 국회의원 민형배

인사말 3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경숙입니다.

「제11회 2024 나라예산 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토론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뜻깊은 토론을 해주실 발제자, 사회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예산은 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낸 비용이기에 시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간 국가예산의 방향과 쓰임을 정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부 관료 등 정책결정자의 의견만 반영되었을 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적인 예산 결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정상화를 추진하

면서도 민생 사업에 과감한 재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건전재정을 이유로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고, 민생의 어려움과 국가의 미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엄중한 시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불과 3년 전 일이고, 러-우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까지 국제 정세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대내적으로도 심각한 저출생 위기와 팬데믹 이후 불어닥친 경제 불황으로 많은 구조적 어려움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인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막중합니다. 현재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 모두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이 재정의 책무를 담고 있는 예산안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새만금 SOC 개발 사업 예산을 78%나 삭감하여 정치 보복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R&D 예산을 삭감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와 경제위기, 이상 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내년도 예산안이 기후, 인구,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인지 분석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토론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듣고,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분들과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숙고와 논의가 민생을 지켜내는 민주적 예산 편성에 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 경 속

인사말 4



윤미향 국회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녕하세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2024년 나라예산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물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농해수위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번 동물 관련 예산 토론회를 제안해주신 동물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림부와 해수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농해수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후솔루션, 동물권행동 카라,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플랜 1.5,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 살기연구소와 공동주최하신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을 준비해주신 발제자, 사회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한 인구가 1,3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서 동물이 친숙해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유기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반려동물 번식업과 펫숍, 경매장, 동물원, 공장식 축산농장 등에서 각기 다른 많은 동물이 고유의 특성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동물수요에 따라 학대를 방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높아졌는데, 정부는 예산 편성 시 시급성·효과성 등을 따지며 우선순위를 미루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동물복지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예산을 대폭 확대할 시점입니다.

내년 정부의 동물 관련 예산은 2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는 내년도 동물 예산 중 반려동물 산업육성과 해외 수출 예산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 식용 철폐, 반려동물 영업 규제, 유기 및 피학대 동물보호, 입양문화 개선, 동물진료비 수가 등 동물 관련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제쳐두고, 반려동물 산업의 경제적 측면만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동물정책 추진 방향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주의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재정 주권 또한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회가 세입을 정하고, 세출 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을 대표해 세금의 규모와 용처를 정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산 심사는 세금의 주인인 국민이 ‘납세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가감 없는 평가를 가슴 깊이 새기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재정의 의사결정과 운영을 민주화하는 ‘재정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2024 나라예산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동물 관련 예산을 검토하고 고견을 주신 ‘동물권행동 카라’와 ‘기후솔루션’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드립니다. 인간과 동물이 우리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자, 소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부의 정책을 개선하고, 국민의 세금이 동물보호와 복지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1월 01일
국회의원 윤미향

인사말 5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2024 나라예산 토론회’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다른 의원님들과 시민단체 여러분, 그리고 토론회의 발표를 맡아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상이 아무리 숭고하더라도,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고, 그렇기에 예산안은 정부의 ‘진짜’ 관심도와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라 할 것입니다.

작년부터 세계 경제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 침체는 예상과 달리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초 2.6%로 예측했다가 계속 낮춰 잡아 2.2%까지 하락했고, JP모건, UBS, HSBC 등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1%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발발하며 중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는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지난번 글로벌 에너지위기와 같은 사태가 재현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더 혹독한 겨울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나라가 경제·정치적 위기의 갈림길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는 민간 책임’이라는 뚜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657조 원은 작년보다 2.8% 늘어난 규모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율을 기록했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긴축 예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개발(R&D)과 국고보조금 사업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는데, R&D 예산은 7조 원, 국고보조금 예산은 4조 원의 구조조정이 이뤄졌습니다. R&D 예산의 비중은 3.9%로 떨어져, 국정과제에서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던 스스로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셈입니다.

제가 소속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700억 원(26.9%)이 삭감되었고, 그중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360도 카메라, 버스 측면 보호대, 실시간 위치 알림서비스 등 안전장치를 개발하는 R&D 사업이나 장애인 탑승 광역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R&D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통분야뿐 아니라 기후, 복지, 노동 등 분야 전반에서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잡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뿐 아니라 기후위기, 인구위기 등 우리나라가 처한 중대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을 대표해 예산안을 심의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잘 귀담아듣고 취지에 맞게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11월 0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소 영

인사말 6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혜영입니다.

예산안은 국가와 정부의 가치와 방향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지워 어떤 분야에 자원을 투입할지 결정하는 이 모든 과정은 정치의 본령에 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치의 시비와 미래의 상상력이 경합하는 사회적 투쟁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집권 세력이 바뀌었음을 예산안의 형태를 빌어 물리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새 정부의 첫 예산안, 2023년 예산안의 핵심은 세입예산, 즉 엄청난 수준의 감세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 간의 예산의 수준과 밑바탕을 결정하는 데 집중했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에 따라 성공적으로 관철됐습니다. 올해 관철된 감세까지 합해 임기 내 90조 원에 달하는 세입이 축소된 이상, 앞으로의 예산안에서 상당 폭의 긴축은 예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여파는 올해 예산안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겹쳐 부진한 세수에 윤석열 정부는 신앙과도 같았던 재정건전성을 일정수준 포기한 대규모 적자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지출은 엄청난 수준의 사업 감액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지목이 전가의 보도로 활용됩니다. 미래 잠재성장력을 지탱하는 R&D도, 기후재앙을 막아내기 위한 기후대응 예산도, 지역균형을 위한 교부금도, 시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담당하는 사회적 경제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손가락질 한방에 수조 원 예산이 그대로 꺾어나갔습니다. 분노와 고통과 항의의 목소리가 넘쳐나지만, 이 정부는 귀를 틀어막고 강행할 태세입니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행정부의 폭주와 부작위에 대해 국민들의 삶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독재 시절 원조에 의존해 소규모 재정을 영위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국내총생산의 삼 분의 일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현대적 재정운용을 구가하는 국가인 것입니다. 정부는 엄연히 경제를 떠받치는 세 기둥 중 하나로 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입니다.

그렇기에 예산의 편성은 특정 사회 집단의 명운에서부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데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의 눈으로 예산을 바라보고, 의회가 이를 반영해 행정부의 관성적인 예산 편성 권력에 대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 나온 지금, 이러한 노력은 더욱 귀중합니다.

이 토론회는 11회차를 맞습니다. 들여다보기 쉽지 않은 예산안을 매년 살피며 민생의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시하는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꾸준한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준비와 진행에 애써주신 실무진과 관계자분들께 노력에 값하는 성과를 드릴 수 있도록 의견을 경청해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인사말 7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관악구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관악을 국회의원 정태호입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2024 나라예산 토론회>에 함께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12개 시민·사회단체(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후솔루션, 동물권행동 카라,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플랜1.5,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살기연구소)와 김주영·민형배·양경숙·윤미향·이소영·장혜영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휩싸여 정부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깎아먹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59.1조 원의 세수적자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연초 전망했던 국가채무 증가액이 70조 원임을 감안하면 국가채무 증가액도 훨씬 커질 것입니다.

대규모 세수부족에 따라 세수결손 보존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세수부족 상황을 넘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국세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수 부족은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2.8%(18조2000억 원) 증가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지출 증가율 2.8%는 내년 명목성장률 전망 4.7%보다 낮은 수치로, 2005년 총지출 기준 예산 편성 이후로 가장 낮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내년에도 100조 원에 육박할 예정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3.9%로 정부가 재정준칙으로 내세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3% 이내로 제한'도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재정 지출 총량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별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한마디에 R&D예산은 명확한 감액사유도 없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는 무시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R&D, 중소기업 ESG 예산도 대거 삭감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42% 삭감된 반면, 원전 예산은 15배가 늘어났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7개월 연속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일자리 예산도 큰 폭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경제를 포기하고 국민을 포기하고 방치하는 예산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시는 여러 의견들을 귀담아듣고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정부 제출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묻고, 정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태호

총론

재정책임성·재정건전성 두 가치 모두 하락한 2024년도 예산안
경기 둔화·감세로 내년도 총수입 감소,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은
지출구조조정 아닌 지방 이전 재원 감소에 기인
감세·건전재정 두 마리 토끼 잡겠다는 정부 주장 허구성 입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이상민 실행위원

1. 재정의 책임성,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내년도 예산안 규모

내년도 총지출은 23년 총지출(639조 원)보다 2.8% 증가한 657조 원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3%가 넘는 상황에서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하니 실질적 정부지출규모는 감소한다. 재정 운용의 양 날개는 ‘재정의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이다.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의 책임성을 저해한다. 구체적으로 경기둔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R&D 예산, 지방분권 예산, 교육예산, 보건복지예산 등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진다.

일반적으로 재정의 책임성을 희생하면 재정 건전성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년 예산안은 재정의 책임성은 물론 재정건전성도 훼손되었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제한해서 과거의 비정상 예산을 정상예산으로 돌리고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2.8%나 총수입 규모는 2.2% 하락한다. 총수입 규모는 -2.2%, 총지출 규모는 2.8%면 총수입 증가율과 총지출 증가율 차이가 -5%p에 이른다. 총수입보다 총지출 증가율이 -5%p 하락하는 상황은 코로나19 시절 등을 제외하면 예외적인 상황이다. 즉,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의 책임성 악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 차이가 -5%p 벌어지는 상황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의미한다. 즉, 내년 예산안 규모는 재정의 책임성과 재정건전성 두 가치가 모두 하락한 예산안이다.

2. 총수입 -2.2%, 내국세 -10.1% 이유는 경기둔화뿐만 아니라 감세정책에도 영향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2023년)보다 2.2% 감소한다. 특히, 내국세는 올해 358조 원에서 322조 원으로 36조 원(10.1%) 감소한다. 내국세 36조 원 감소 중, 법인세 감소가 27조 원을 차지하니 내년도 수입 감소의 핵심은 법인세 감소다. 내년도 법인세 감소의 이유는 일차적으로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이익 감소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도 큰 영향을 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2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5년간 법인세 감소만 32조 원에 달하고 24년도만 7조 원의 법인세 감소효과가 발생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이후 정부는 반도체 등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추가 감세 정책을 크게 확대하였다. 즉, 내년도 세수 감소는 경기둔화와 정부의 감세정책 모두 중요한 원인이다.

3. 내년도 예산 삭감의 핵심은 지방 이전재원 감소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건전재정으로 만들고자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 리스트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성과 반지성의 차이는 '검증가능성'이다. 정부는 검증가능성이 없이 '보지 않고 믿기'를 원하면 안 된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2.8%로 제한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덕이 아니라 내국세 감소에 따라 자동으로 교부되는 지방이전재원 감소 탓이다.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세와 지방교육청의 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부분(각 19.24%, 20.79%)이 자동으로 교부된다. 그런데 내년도 내국세가 10% 감소되어 자동으로 지방이전재원이 감소된다. 이렇게 자동으로 감소된 지방이전재원 규모가 15.4조원에 달한다.

지방이전재원 15.4조 원 감소는 24년 총지출 증가 규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2.8%로 총지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증가를 기록한 이유는 정부가 '지출구조조정'을 열심히 해서라기 보다는 내국세가 감소에 따라 지방이전재원이 자동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만약, 내년 내국세가 줄지 않고 지방이전재원이 15.4조 원 줄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3%에 달한다.

<표1> 2024년 총지출 증감률

(단위 : 조 원, %)

	23년 본예산	24년 예산안	24년 -23년 차액	24년 증감률	If, 내국세가 정채 이전재원 유지시
총국세	400.5	367.4	-33.1	-8.3%	
내국세	358	321.7	-36.3	-10.1%	
지방교부세	75.3	66.8	-8.5	-11.3%	
교육교부금	75.8	68.9	-6.9	-9.1%	
지방 이전재원 합	151.0	135.7	-15.4	-10.2%	
총지출	638.7	656.9	18.2	2.8%	672.3(5.3%)

4.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통일외교 분야(19.5%, 1.2조 원), 예비비(8.7%, 0.4조 원); 감소율이 가장 큰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7.5%, -0.7조 원), 교육 분야(-6.9%, -6.6조 원)

내년도 총지출은 평균 2.8% 증가하니 2.8%보다 더 높게 증가한 분야는 평균이상 증가한 분야다. 증감률 기준 가장 높게 증가 된 분야는 통일외교 분야로 올해보다 19.5%, 금액기준으로는 1.2조 원 증가한다. 구체적 내용과 의미를 파악해 보면,

- 통일외교 분야(19.5%, 1.2조 원)가 많이 증가된 이유는 ODA 사업증대로 인한 것이며 ODA사업만 3.6조 원에서 5조 원으로 1.4조 원(40%) 증대되었음
- 예비비 분야가 4.6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증액되었음. 예비비 증대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 악화를 의미
- 사회복지 분야는 206조 원에서 223.9조 원으로 17.9조 원(8.7%) 증대되었음.
- 국방 분야는 55.3조 원에서 57.6조 으로 2.3조 원(4.1%) 증대되었음. 이는 항공기 사업에 0.8조 원(32.9%). 인건비가 0.8조 원(4.7%) 증액되었기 때문임.
- 과학기술 분야는 9.9조 원에서 9.1조 원으로 -7.5%(-0.7조 원) 감액되었음. 이는 R&D 감액에 의한 것으로 특히, 출연연구기관 지원이 0.6조 원(-17.2%),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이 0.3조 원(-34.9%) 감액되었기 때문임.
- 교육 분야는 96.3조 원에서 89.7조 원으로 -6.9%(-6.6조 원) 감액되었음. 이는 내국세 감소로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임.
- 보건 분야는 20조 원에서 19조 원으로 -5.1%(-1조 원) 감액되었음. 이는 보건의료 부문 중 코로나19와 관련있는 사업 삭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R&D삭감, 만성질환 예방관리(-48.6%), 국가결핵예방(-29.2%), 국가금연지원서비스(-12.2%), 희귀질환자 지원 (-31.2%),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65.8%), 119구급대지원 사업(34.7%)이 삭감되었기 때문임.

<표2> 분야별 2024년 예산안

(단위 : 십억원, %)

	23년 본예산	24년 예산안	감액된 세부사업액	증액된 세부사업액	순증감액	증감률
총합계	638,728	656,851	-56,492	74,615	18,124	2.8%
교육	96,273	89,655	-12,474	5,857	-6,618	-6.9%
일반·지방행정	112,154	111,262	-11,118	10,226	-893	-0.8%
사회복지	205,976	223,876	-6,392	24,292	17,900	8.7%
국방	55,286	57,572	-4,749	7,035	2,286	4.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004	27,269	-4,305	5,570	1,265	4.9%
교통및물류	20,821	21,773	-3,876	4,828	952	4.6%
보건	20,027	19,006	-3,728	2,707	-1,021	-5.1%
농림수산	24,377	25,377	-2,129	3,129	1,000	4.1%
과학기술	9,862	9,124	-1,609	871	-737	-7.5%
환경	12,249	12,555	-1,608	1,914	306	2.5%
통신	8,985	9,294	-1,360	1,669	309	3.4%
문화및관광	8,606	8,738	-1,247	1,379	132	1.5%
국토및지역개발	4,167	4,362	-738	933	195	4.7%
공공질서및안전	22,931	24,333	-592	1,994	1,402	6.1%
통일·외교	6,409	7,656	-566	1,813	1,247	19.5%
예비비	4,600	5,000	0	400	400	8.7%

출처 : 대한민국 정부, 2024년 예산안

5. 복지 분야 증액의 핵심은 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감액의 핵심은 고용 부문

보건복지 분야는 증액된 세부사업 금액도 24.3조 원으로 크고 감액된 세부사업금액도 6.4조 원으로 큰 규모를 차지함. 감액 사업과 증액사업의 의미를 파악해보면,

- 공적연금 부문이 10조 원 증액되고 0.5조 원 감액되어 9.5조 원 순증(13.4%) 이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노인인구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대(결과)
- 주택 부문이 5.9조 원 증액되고 1.9조 원 감액되어 4조 원 순증(11.8%) 이는 주택 구입 전세자금(유자)사업이 증대되었기 때문임. (의도)
- 노인 부문이 2.4조 원 순증(10.3%) 이는 기초연금이 노인인구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라 증대(결과)

- 기초생활보장 부문이 1.9조 원 증액되고 0.2조 원 감액되어 1.7조 원 순증(8.8%) 이는 기준중위소득기준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기준 완화(중위소득 30%→ 32%) (의도)
- 고용 부문이 1조 원 증액되고 2.4조 원 감액되어 1.4조 원 순감(-5.9%)이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급여 금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임.(의도)

<표3> 보건복지 분야에 속한 전체 부문 예산변화

(단위: 십억 원, %)

분야	부문	23년 본예산	24년 예산안	감액	증액	순증감액	증감률
사회복지	고용	23,632	22,244	-2,426	1,038	-1,387	-5.9%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634	650	-8	23	16	2.5%
사회복지	공적연금	71,325	80,856	-463	9,995	9,532	13.4%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19,135	20,826	-161	1,851	1,691	8.8%
사회복지	노동	10,728	10,749	-262	282	21	0.2%
사회복지	노인	23,229	25,633	-56	2,461	2,404	10.3%
사회복지	보훈	6,247	6,469	-114	336	222	3.5%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1,013	1,049	-46	82	36	3.6%
사회복지	아동·보육	9,848	10,856	-636	1,645	1,009	10.2%
사회복지	여성·가족·청소년	1,530	1,678	-56	203	148	9.7%
사회복지	주택	33,441	37,404	-1,916	5,878	3,963	11.8%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5,214	5,462	-249	497	248	4.8%
보건복지 분야 합		226,003	242,882	-10,121	26,998	16,882	7.5%

6. 결론

정부는 2024년 정부예산안을 건전재정으로 편성했다고 하나 총수입 증대규모(-2.2%)를 고려해 보면 건전재정 편성에 실패하였다. 특히,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제한한 원동력은 지출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이전재원 감소다.

보건복지 분야는 가장 큰 규모의 증액(24.3조 원)과 가장 큰 규모의 의도적 감액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증액은 공적연금 부문, 노인 부문에서 발생한 결과적 증액이 대부분이며, 감액은 보건의료 부문, 고용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발생했다.

다만, 주택 구입·전세자금 프로그램 2조 원 순증(19.1%)과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1.5조 원 순증(9.2%)은 정책적 목적에 따른 증액이다. 반면, 보건복지 분야의 감액의

핵심은 보건의료 부문(3.7조 원 감액, 1.1조 원 증액)과 고용 부문 (2.4조 원 감액, 1조 원 증액)이다.

보건의료 부문 삭감의 이유는 지난 코로나19 사업 삭감 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예산이 0.9조 원 대부분(99.5%)삭감되었기 때문이며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이 상당부분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고용 부문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세부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세부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구직급여로 각각 2830억 원(-23.1%), 2810억 원(-65.3%), 2700억 원(-2.4%)감소되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4.3조 원 감액되고 5.6조 원 증액되어 1.3조 원 순증되었다.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이 감액된 이유는 연구개발(R&D) 삭감이 원인이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비는 전액 삭감된 사업도 많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증액은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졌는데 모두 융자사업이다.

과학기술 분야는 1.6조 원 감액되고 0.9조 원 증액되어 0.7조 원 순감되었는데, 출연연구기관지원,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공공연구성과활성화 프로그램이 감액된 이유는 연구개발(R&D) 삭감이 원인이다.

특히, 전 분야 탄소중립기반구축 프로그램도 1760억 원 순감되었는데 (-28.2%) 기후위기 시대 적합한 감액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우주개발 연구개발진흥 프로그램 연구개발 사업은 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으로 증액되었다.

<표4> 문재인 정부 vs. 윤석열 정부 결산상 통합재정수지 비교

(단위: 조 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의미	문재인정부 첫 추경	문재인정부 본예산 편성 첫해	문재인정부 본예산 편성 둘째해	윤석열정부 첫 추경	윤석열정부 본예산 편성 첫해	윤석열정부 본예산 편성 둘째해
통합재정수지 (결산)	24	31.2	-12	-64.6	-40조원 전망	-44.8 (본예산)

24년 예산안은 -44.8조 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할 정도로 건전재정에서 크게 벗어났다. 23년 약 -40조 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22년의 -64.6조 원의 적자에 이어 건전재정을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2018년, 2019년 코로나19 직전 재정수지보다 재정건전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인세율 등을 인하해도 투자가 증대하고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어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잘못된 예측을 한 추경호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감세조치를 일부 되돌려야 할 것이 필요하다.

만약 감세 조치를 되돌리지 않는다면 최소한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앞으로는 감세를 위해 재정건전성은 희생한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4년도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로 인한 건전재정 달성 실패는 감세와 건전재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교훈을 준다.

단체별 평가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 예산은 올해 4조5,543억 원에서 내년도 3조6,657억 원으로 8,886억 원(19.5%) 줄었음. 정부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을 약 9,405억 원(98.7%) 삭감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음. 이 예산은 코로나19 진료를 한 공공의료기관과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지원금임. 정부는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손실보상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에만 헌신하느라 줄어든 환자 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적자에 시달리며 현재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음. 이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는 예산안은 지방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단계적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건강보험 지원 예산은 올해도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20%를 지키지 않고 14.4%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놓고 법을 어겼음. 일반회계로만 봐도 1조5,738억 원을 덜 편성한 것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운운하면서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지만, 실제로는 법정 예산 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혁신의료기술 실증 등 의료민영화·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음. 비대면 플랫폼 기업 돈벌이를 위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난비를 초래할 예산, 마이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민감한 건강·질병정보를 민간에 통째로 넘기는 데 도움을 줄 예산,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규제완화로 안전보다 기업이익을 앞세우는 예산이 증가했으며 적잖은 규모로 책정됐음.

한국 보건의료는 필수의료 붕괴 등 위기상황임.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상업화 통제이고,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 상황에 OECD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 정부는 반대로 공공의료는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성을 축소시키려 함.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예산안임.

■ 공공운수노조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에서 도로계정 투자가 전체 대비 52.3%로 여전히 절반이상 육박하고 있음. 전체 철도부문 예산은 80,476억 원으로 78,705억 원의 도로부문보다 다소 높았지만 이는 일반회계에서 철도안전부문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임. 기후위기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철도 등의 대중교통 예산이 도로보다 우선적으로 훨씬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코로나19 3년 동안 거리두기와 봉쇄조치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감소하고 버스운행이 축소되면서 철도와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의 지역교통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음.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었지만 지역의 버스교통여건은 여전히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중교통육성과 버스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지 않음. 위기의 지역버스 교통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육성과 버스교통 부문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대도시들에서 교통요금을 파격적으로 할인 및 무상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이러한 흐름과 연동해서 뒤늦게나마 윤석열 정부가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원 대상과 범위가 너무 제한적임.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자가용 이용자의 수요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환급 이용자와 적립률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함.

민자철도운영지원 예산이 8,723억 원으로 2021년 대비 2,623억 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며 곧 1조 원 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임. 앞으로 GTX 등의 광역철도 등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민자철도운영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건설지원 예산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민자사업이 재정을 절감한다는 것은 신화이며 금융자본의 이윤 창출수단에 불과하므로 공공철도 추진이 원칙이 되어야 함.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26.3% 삭감되었고, 이 중 핵심지역 보전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사유지 매수 예산 △71.4%)됨. 이에 비해 국립공원공단 등 출연기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환경당국의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국립공원 사업 예산은 최소 전년도 수준, 최대 그간 증액해 온 수준으로 증액되어야 함. 현재까지 매 해 불용되고 있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은 기존 50인승에서 80인승 공항으로 사업 변경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생태계 훼손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임. 친환경산악벽지용전기열차 R&D사업과 함께 전액 삭감하여 불필요한 사업 대신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

■ 기후솔루션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며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 그리고 특히 화석연료 사용 감축이 핵심인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 보여주었음.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의지를 내보였음에 비해 석탄발전 감축 및 전환을 대비한 예산이 적으며 동시에 구체성이 없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이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해운 탄소배출에 대한 예산의 경우 '녹색해운항로'에 대한 발표에 비해 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감축전략과는 상충하는 LNG 항목이 제외됐거나,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친환경 선박기술 예산이 삭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정합성을 예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LNG 사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필요가 있음.

■ 동물권행동 카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관련 예산은 크게 둘로 나뉘볼 수 있음. 농장동물을 이용·관리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사업 예산과 반려동물을 위시한 동물보호 목적의 사업 예산으로 나뉘며 후자는 극히 적어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이 시급함.

최근인 2023년 10월 국내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과 같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국내 유입돼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으로 신종전염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농장동물 살처분과 농가 피해를 반복하는 99% 공장식 밀집 축산의 과감한 축소 및 전환이 요구됨. 2024년 살처분 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무려 1천억 원을 넘고 이는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예산인 8억 원의 125여 배에 해당함. 현시점에서 원헬스 개념을 바탕으로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농장으로 시설변경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대응 예산을 증액해야 함. 무엇보다 기후위기 시대 과도한 육류와 유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대폭 감액하고 비건 제품 R&D 비용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지난해 ‘태종 이방원’ 촬영에 동원됐다가 목숨을 잃은 ‘까미’로 인해 퇴역 경주마 복지체계 부재가 드러났으나, 현재 퇴역 경주마에 대한 복지 정책이 전무한 가운데 관련 예산 역시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퇴역경주마에 대해 승용, 체험용 등 경제적 이득을 기반한 활용 측면보다 퇴역경주마 보호시설 등과 같은 실질적인 말 복지 향상을 위한 재활 지원과 보호 예산의 추가 편성이 절실함.

반려동물의 경우 양육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 전반의 반려동물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요구됨. 또한,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는 반려동물 유기 및 유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인 중 하나인 실외사육견(마당개)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관련 예산에 대해 동물을 ‘이용’하는 전근대적 예산 기초에서 벗어나 동물의 ‘복지’를 확보해 나가는 선진국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임.

■ 빈곤사회연대

빈곤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대상 선정은 포괄적으로, 급여는 충분하게 지급할 때 정책 목표가 실제 달성될 수 있음. 한국사회 유력한 빈곤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은 타 예산과 비교해 높은 인상안이 제출되었지만, 복지제도 예산은 전체 국민의 임금 인상 등 자연증가분이 매년 반영되며,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와 급여 충분성을 달성하기에 미약한 수준으로, 정부 예산안은 2024년에도 “복지급여 수급자가 되기도 복지급여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수준에 그침.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예상 수급자 수는 인구대비 약 3%로 빈곤층의 20%만을 포괄함. 생계급여 예산에 선정기준이자 최대보장수준을 기준중위소득 30%이하에서 2%포인트 상향, 기준중위소득을 6.09% 인상한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1인 가구 기준 71만원에 불과함.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될 예정임에도 예산이 삭감되었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겪고 있는 높은 비율의 미충족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 주거급여 역시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의 차이를 메우지 못하는 예산이며 빈곤층의 일자리 참여를 강화하겠다면서 자활 일자리 대기자 수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안. 더불어 전 국민의 위기 상황에 개입해야 하는 긴급복지 예산 역시 편협한 수준에 그침.

2024년도 예산안은 약자복지를 주창하며 약간의 정책개선과 더불어 복지제도의 선별성과 조건부과, 엄벌주의를 강화하려는 정부 기조가 드러나는 예산안으로, 이는 현재 한국사회의 심각한 빈곤 문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실제 빈곤 문제를 예방하고 발생한 문제에 즉각 개입 및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을 동반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복지급여 수급권자들이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1=0, 뺑뺑기-갈라치기-혐오정치 철폐를 위한 장애인 예산으로 나가야

정부 및 여당은 중증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연일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예산을 살펴보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그 당연한,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 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마이너스 예산임.

2021년 지역 간 이동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상버스 의무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되었으나 정부는 저상버스 공급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및 광역이동 안정화에 필수적인 운전원 인건비 예산을 아예 포함하지 않았음.

또한 2018년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를 통해 고용노동부 직접 지원사업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진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사업(동료지원가)'은 예산이 아예 전액 삭감됨에 따라 187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국가에 의해 정리해고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활동지원 예산은 여전히 중증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 당사자들의 활동지원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된 탈시설로드맵을 바탕으로 시작된 탈시설 시범사업은 그 이름마저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으로 바꾸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한 탈시설 권리를 전면으로 부정,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보장하지 않고 있음.

교육받을 권리 역시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한 교육부의 반대로 턱없이 부족한 지원과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이 방해받고 있음.

■ 종교투명성센터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현정부의 정책기조에 무색하게 공익법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종교법인에 대한 침묵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현정부가 사찰을 걸고 밀어붙이고 있는 노조회계공시제도를 그대로 종교법인에 적용하면 회계투명성을 둘러싼 종교계의 갈등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음. 상급단체, 지역조직 등과 관계 등을 감안하면 종교단체와 노조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서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 즉 현행 노조회계공시제도는 노조보다는 종교계에 더 절실한 제도임.

예산전체내용에서 봤을때 R&D예산은 감소했으나 종교행사예산은 증가했고, 특히 금년엔 개신교예산이 증가했음. 결과적으로 보면 과학예산은 감소하고 종교예산은 늘어난 셈임. 종교예산내에서만 보아도 종교내 갈등 및 종교간 갈등만 유발하여 국민통합에 악영향을 미치는 배타적 종교행사 예산은 증가했고, 오히려 평화와 통합을 위한 종교예산은 감액되었음. 종교행사의 경우 개별종교예산은 감액하고 보편적 행사예산은 증액할 필요가 있음.

사찰문화재관람료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되었음.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이 갖춰지지 않는한 해당 지출은 종교계의 쌈지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애초에 입법단계에서도 허점이 많아서 종교간 갈등도 유발할 수 있음. 사찰문화재관람료감면에 대한 지원은 감액하고 해당 법률도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부의 2024년 노인, 보육 예산안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음.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은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음.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음.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또한 대상자의 수를 제대로 추산하지도 않고 예산에 의해 사업규모가 결정되고 있음. 보육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음. 또한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과 같이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띠는 보육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기재부가 관리하는 지역균형특별회계로 이관한 것은 큰 문제임.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가정 양육을 위한 부모급여 예산을 대폭 확대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예산은 줄이고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정 내 돌봄으로 회귀하려 하는 의도로 보임. 진정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정부는 국가 책임 돌봄 인프라 구축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

■ 플랜 1.5

현 정부는 지난 4월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50 탄소중립,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국가 기후정책의 큰 목표를 확인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30년까지의 연도별, 부문별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음. 2024년 예산안은 그러한 기후정책 목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았던 첫 예산으로 주요한 감축 정책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담겨있어야 함.

그러나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주요 감축 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정부지출 축소 기조 속에서 상당 부분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되었음. 가장 감축이 시급한 전환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대폭 축소되었으며(전력기금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42.3% 삭감), 수송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주요한 정책 수단인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는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은 아직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전기차 보급률이 1.5%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에도 '2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후퇴하였음(6.5% 삭감).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의 추진과 관련한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 지원 예산은 확대되기는커녕 약 32억 원 가량 후퇴함(23.2% 삭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해 2022년부터 2조4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운영 중인 기후대응기금조차 부처별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은 100억 원 규모로 소극적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큰 그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국가 감축목표와 연계된 구체적인 감축 정책과 이에 수반된 예산 계획이 절실함.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자 약 소리나는 노동개약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취약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은 큰 폭으로 깎였음. 일용근로자와 예술인,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대거 삭감되었고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연구와 실태조사는 전액 또는 50% 삭감되었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는 호기로운 선언은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 전액 삭감, 연구 예산 50% 삭감으로 무색해졌음.

노동자가 매일 맞이하는 일터를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음. 장시간 근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한다는 '장시간 근로 개선 사업'은 70% 예산이 삭감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사측이 주도하는 근로시간에 맞출 수밖에 됨.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은 50% 이상 삭감되어 노동자는 일터의 어려움을 해결 해 줄 정부 시스템을 찾기 어려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신고 및 예방을 위한 예산은 일절 책정 되지 않았으며 직장 내 성차별을 상담할 수 있었던 고용평등상담실의 예산 및 기관도 대폭 축소됨.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해진 고용형태 및 업직종에 정부 사업 집행도 이제 막 구색을 갖추는 듯했으나 비정규직, 필수업무 종사자, 프리랜서·플랫폼·특고 노동자, 여성, 청년 노동자 등 우리 사회 취약노동자에 대한 예산과 시스템이 대폭 삭감 및 축소되면서 노동정책은 후퇴했음. 취약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의 예산과 시스템을 증액 및 원상복귀하여 노동시장과 일터를 개선시켜야 함.

■ 함께살기연구소

2024년 예산안은 작년에 이어 사회적경제 부문의 예산을 대규모 삭감해 존폐에 직결될 정도임. 이는 지난 20여 년 동안의 노고를 무위로 만들어 버리는 역사적 퇴보임. 그간의 제기된 문제들은 규제와 법적·행정적 처벌을 통해 해결해야지, 재정적 토대의 해체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임. 이와 유사하게, 마을 및 공동체와 관련된 예산 또한 많이 삭감되었다. 마을과 공동체를 강화하는 재정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강화하는 외부효과를 낳는다는 점에 사회적 의의가 있음에도, 이번 예산안은 이 의미를 크게 퇴색시켜 버렸음.

고용노동부의 주요 청년일자리에산도 30% 이상 삭감됨. 특히, 중소기업 청년 취업을 독려하던 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폭 삭감되어 사실상 폐지 수준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 미약하게나마 구직 청년들의 안전망 역할을 하던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23.1% 삭감되었고 대학일자리센터나 공공기관 인턴, 해외취업 등의 예산은 일부 증액됐으나, 삭감된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애초에 한시로 설계되었다는 이유로, 청년들의 주거현실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급하게 종료된 반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목돈이 필요한 공공분양 예산을 늘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

주거와 일자리는 청년문제의 핵심 의제임. 윤석열 정부는 청년정책의 방향으로 희망과 공정, 참여를 이야기했으나, 주요 정책들의 예산이 심하게 축소되어 버린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임.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서 많은 청년이 취업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음. 경제 상황마저 좋지 않은데 예산마저 줄인다면, 청년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함.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라고 일컬었던 만큼 정책에서도 청년을 위한 실질적 노력, 즉 과감한 예산 확대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기대와 너무나 동떨어져 버렸음.

이번 예산안은 보건복지분야에서 그나마 증액 양상을 보여주지만 증액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취약계층이나 의료 관련 R&D에 속함. 당장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위한 예산책정은 여전히 수용되지 않았음. 공공의료의 강화에는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고, 노동과 고용과 관련된 예산들은 가장 많이 축소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시민이 공통으로 갖는 필요에 대한 요구의 충족도 중요함. 하지만 지나치게 전자에 치우친 편협한 예산안이 마련되었고 후자를 위한 예산의 재배정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함.

기획재정위원회

부서	의견	사업	작성자	쪽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삭감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 (R&D)	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모임	033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증액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플랜1.5	034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증액	산업·일자리전환지원인프라	플랜1.5	035
기획재정부 각 부처, 기금	증액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기간제, 용역 등 비정규직 임금 관련 예산	공공운수노조	036
기획재정부 각 부처, 기금	증액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공운수노조	037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증액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함께살기연구소	038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비	회계공시대상에 종교단체 포함 등	종교투명성센터	039

국립공원 파괴하는 R&D사업 예산 전면 삭감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6431-405)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본예산(A)	요구안	정부안(B)	(B-A)	%	
산악벽지용친 환경전기열차 기술개발 (R&D)	7,203	7,203	2,328	2,328	△4,875	△67.7	

- 사업내용: 국내 산악지역 등의 이동 편의 증진.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환경 산악철도 시스템 개발 및 시범노선 구축.운영 추진

■ 문제점

- 본 사업은 시범사업 기간 중 지리산국립공원 인근지역에 시범노선을 설치한 후, 정식사업 시 남원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리산국립공원 정상부 인근까지 산악열차 노선을 설치하는 대표적인 국립공원 개발 사업임.
- 현재 지리산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정령치-성삼재까지 전기버스 예약제 등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여 탄소저감 노력을 하고 있어 별도의 산악열차 등 시설물 설치가 불필요해 짐.

■ 의견 : 전액 삭감

- 사업비 전액삭감 및 시범사업 백지화 통해 예산 낭비 방지

■ 담당 단체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02-961-6547)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6331-410)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계획	
		계획액	집행액	요구안	정부안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	-	1,600	1,200	3,100	2,422
-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	-	610	610		586
- 특구산업전환 지원	-	990	990		1,836

- 사업내용: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

■ 문제점

-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기구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였음.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업무를 산업·기업·노동·지역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조사, 연구, 훈련, 컨설팅, 지원 등으로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가 2023년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은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목적을 '지역별 맞춤형 산업구조 전환 지원'으로 제한하면서, 그 역할 역시 주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원과 관련된 업무로 축소함. 산업부는 2023년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전환센터를 개소하였다고 밝힘.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일개 부서인 지역산업단 지역산업육성실의 직원 2명(책임 1명, 연구원 1명)에게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을 담당 업무로 배정한 것에 지나지 않음.
-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의 기능별 분류에 따를 때,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특구산업전환 지원' 예산을 제외하면,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24%(2024년 예산 기준)에 불과함.
-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의 2023년 예산 계획액은 6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이마저도 집행률이 60%에 그쳐 집행액은 약 3.7억 원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의 2024년 예산은 2023년 예산에서도 감소되어 5.86억 원으로 편성됨.
- 이처럼 제한된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하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은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축소된 '특구 지원'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음.

■ 의견 :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 예산 증액

- 산업부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설치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가 산업 분야의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장하고 인력과 예산을 대폭 증대해야 함.

■ 담당 단체 : 플랜 1.5 (02-735-3565)

산업·일자리전환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해 법률이 규정한 업무 수행하도록 역할 및 예산 확대 필요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산업·일자리전환지원인프라(6332-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계획	
		계획액	집행액	요구안	정부안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인프라	5,700	7,180	4,974	7,027	7,027
- 산업·일자리전환 분석센터	1,100	1,535	1,305	1,134	1,134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	4,600	5,645	3,669	5,893	5,893

- 사업내용: (산업·일자리전환 분석센터)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동이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산업·업종을 조기에 포착하고, 맞춤형 지원 인센티브 등 개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기능 수행

■ 문제점

-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기구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였음.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업무를 산업·기업·노동·지역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조사, 연구, 훈련, 컨설팅, 지원 등으로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가 2023년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은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목적을 '지역별 맞춤형 산업구조 전환 지원'으로 제한하면서, 그 역할 역시 주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원과 관련된 업무로 축소함. 고용부는 2022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고 밝힘.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일개 부서인 산업·일자리전환팀('23년 7월 현재 정원 9명, 현원 8명)에서 '노동전환분석센터'와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음.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인프라' 사업의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산업·일자리전환 분석센터' 예산이 산업·일자리전환팀의 예산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사업의 약 16%(2024년 예산 기준)에 불과함. 산업·일자리전환팀의 2023년 예산은 15.35억 원에 불과하였음. 더욱이 이중에서도 약 86%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변동에 업무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노동전환분석센터의 예산이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예산은 터무니없이 낮은 2.2억원에 불과하였음. 산업·일자리전환팀의 2024년 예산은 2023년 예산에서 더욱 감소되어 11.34억원이 되었으며,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2024년 예산은 여전히 2.2억 원에 머무름.
- 이처럼 제한된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 산하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은 탄소중립기본법이 규정한 업무 범위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축소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원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음.

■ 의견 :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 예산 증액

- 고용부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설치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가 노동 분야의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장하고 인력과 예산을 대폭 증대해야 함.

■ 담당 단체 : 플랜 1.5 (02-735-3565)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질 임금 삭감 방지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일반회계 및 기금

■ 현황

- 관련예산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기간제, 용역 등 비정규직 임금 관련 예산

대상	해당 사업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 임금	기본경비·사업비 포함된 상용임금목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용역(자회사 포함) 임금	공공기관 출연, 보조 예산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기간제·용역·위탁 임금	자치단체 보조 예산

■ 문제점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70%가 넘는 숫자가 최저임금~최저임금 1.5배 수준(정액급여 기준)의 저임금 상태임.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등의 절반 수준이고 민간 상용직(100인 이상)의 70% 수준에 불과함.
- 저임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1~2024년 인건비 인상은 소비자물가상승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이 삭감되었음. 2024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2.5~2.7% 수준으로 2021~2024년 동안 5.4~7%의 실질임금 삭감이 발생 예상.

항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합계	
인건비 인상율	상용임금	1.4%	1.8%	2.2%	2.7%	8.1%
	그외	0.9%	1.4%	1.7%	2.5%	6.5%
소비자물가상승률	2.5%	5.1%	3.5%(추정)	2.4(추정)	13.5%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통계청

- 공무직위원회 논의 결과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에 한해 공무원에 비해 2021/2023년 0.5%, 2022년 0.4%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나 실질임금 삭감을 방지하기에도, 정규직과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그마저도 출연금·보조금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공공기관, 지자체 공무직 등은 제외.
- 최저임금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처우개선 명목으로 신설된 식대, 명절상여금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일부만 인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없는 예산편성으로 전체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하향평준화.

■ 의견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24년 인건비 증액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상용임금, 출연금, 보조금 명목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공무직, 기간제, 민간위탁 노동자 등에 지급되는 인건비 관련 예산 일체
- 인상 수준 : 지난 4년간 발생한 실질임금 삭감을 방지하는 수준의 인건비 인상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 (02-497-7888, kptu2011@gmail.com)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일반회계 및 기금

■ 현황

- 관련예산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기간제, 용역 등 비정규직 임금 관련 예산.

대상	해당 사업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 임금	기본경비·사업비 포함된 상용임금목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용역(자회사 포함) 임금	공공기관 출연, 보조 예산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기간제·용역·위탁 임금	자치단체 보조 예산

■ 문제점

- 직무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전체 노동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 수당의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함에도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수당 차별은 심각한 상황임.

<복리후생 관련 대표 3종 수당>

항목	공무원 기준	무기계약직 기준
명절휴가비	월봉급액 60%, 연2회(9급 기준 연210~410만원)	연 110만 원
복지포인트	기본급 40만 원*근속가산(1-30만 원)+가족가산(배우자 10만 원, 직계 존·비속 등 1인당 5만 원 등)	연 50만 원
가족수당	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3만원, 둘째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인당 10만원, 배우자·자녀외 가족 2만원	없음

<위험수당 차별현황>

구분	공무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중앙행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박물관(보존과학부)	월 5만원	없음
	환경부 4대강물환경연구소(연구실)	월 5만원	없음
공공기관	코레일-코레일네트웍스(역무원)	월 2만원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 등은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으나 차별 지속. 위험수당의 경우 공무원(정규직)과 동일한 위험 혹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무기계약직에게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

■ 의견 : 공무원/정규직과 차별 해소 예산 편성 : 약 2,000억 원 증액

- 위험수당 등 직무 관련 수당은 해당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지급.

-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 공무원 동일 기준으로 편성.

* 명절상여금을 10만명 기준 기본급 120%로 지급할 경우, 약 1800억 원 예상 : 10만명 × (302만 원(공무직평균임금)×80%(기본급비율)×120%-110만 원(현재 상여금)) = 179,920백만 원.

* 복지포인트 10만명 기준 근속(5년), 자녀 수당(5만원) 추가 : 10만명 × 10만 원 = 10,000백만 원.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 (02-497-7888, kptu2011@gmail.com)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6352-334)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복권기금	2,209	2,371		2,885	2,015

- 본 사업은 2023년 예산 23억 7천만 원에서 2024년 20억 천만으로 2억 6천만 원이 감액됨.
- 최근 아동의 정신적, 심리적 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 그런 이유로 정부도 5억 원 넘게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정과정에서 8억 원 이상이 감액됨.
- 본 사업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아동돌봄의 차원에서도 증액되어야 함. 아동들이 여러 외부적 여건으로 인해 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돌봄은 사회의 관심과 생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돌봄도 반드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문제점

- 본 사업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아동돌봄의 차원에서도 증액되어야 함. 아동들이 여러 외부적 여건으로 인해 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돌봄은 사회의 관심과 생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돌봄도 반드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하지만 2024년 안에서는 종합검사의 대상자를 지난해 1,000명에서 2024년 750명을 축소했고, 재활치료의 대상자도 1,650명에서 1,500명으로 축소했음.
- 더군다나 본 사업은 매년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만큼 현실에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향상되고 있었으나, 2024년 안은 이러한 맥락과는 정반대로 감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1,581	1,878	2,209	2,371	2,015

■ 의견 : 예산 증액

- 종합검사 대상자와 재활치료 대상자의 수를 1,200명과 1,8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
- 원래 관련부처가 요구한 28억 8천5백만 원을 수용하여 이에 맞도록 증액시켜야 함
- 오히려 심리검사와 심리재활치료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나 동행서비스의 추가 필요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노조는 쥐잡듯이 뒤지면서 거대종교는 나 몰라라?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 현황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	2024년		증감	
			요구안	정부안	(B-A)	%
(조세지출)						

- (노동조합회계공시제도의 시행) 정부가 새로 마련한 노동조합회계공시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됨. 결산서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노조비세액공제혜택을 주는 것이 기본 골자임.
- (정부의 입장) 정치적 의도는 차치하고라도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회계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그 목적임.

■ 문제점

- 문제는 종교단체의 경우인데 회계공시나 세법이행에 대한 보고의무에서 제외되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음.
- 공익법인에서 종교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넘어서는 상황이므로 사실상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에 있어서 현 제도는 반쪽자리 제도에 불과함. 또한 종교단체는 노조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운영하며 그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
- 또한 종교단체는 다른 공익법인에 비해 기부금단체의 인정요건이 느슨하여 교단안에만 있으면 제한없는 혜택을 누리게 됨

■ 의견 : 회계공시대상에 종교단체포함

- 종교단체도 노조의 연맹과 비슷한 교단소속을 필수요건으로 하여 세제혜택을 받으므로 노조의 회계공시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음. 즉 현행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확대하여 종교단체도 포함한다면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음.
- 노조는 보통 총연합회-연합단체-단위노조-지회 등의 구조를 가지는데 종교단체도 종파별로 다르긴 하지만 총회-지역조직-개별종교단체-지소(공소 또는 암자) 등의 구조를 가짐.
- 규모별로 어느 수준에서 공시할지를 차등규정을 두고 있어 개별 종교단체의 회계공시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 셈.

■ 담당 단체 : 종교투명성센터 02-6927-2503

환경노동위원회

부서	의견	사업	작성자	쪽
환경부	증액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모임	041
환경부	증액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모임	042
환경부	증액	무공해차 보급사업	플랜1.5	043
고용노동부	증액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44
고용노동부	복구 증액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46
고용노동부	증액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함께살기연구소	048
고용노동부	증액	청년일자리창출지원	함께살기연구소	050
고용노동부	증액	청년내일채움공제	함께살기연구소	051
고용노동부	삭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함께살기연구소	052
고용노동부	증액	취약계층취업촉진	함께살기연구소	053
고용노동부	증액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함께살기연구소	054
고용노동부	증액	국민취업지원제도	함께살기연구소	055
고용노동부	증액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함께살기연구소	056
고용노동부	증액	실업크레딧지원	함께살기연구소	057
고용노동부	증액	사회적기업 육성	함께살기연구소	058
고용노동부	증액	사회적기업 지원	함께살기연구소	059
고용노동부	증액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공공운수노조	060
고용노동부	증액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061
고용노동부	증액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062
고용노동부	증액 복구	근로조건개선지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063
고용노동부	증액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064

**국립공원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과 무장애 인프라를 위한
예산 증액, 불필요한 플랫폼 예산 삭감**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1831-301)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본예산(A)	요구안	정부안(B)	(B-A)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225,561	286,419	286,681	211,502	△74,917	△26.2

- 사업내용: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21개 국립공원의 보호·보전,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지역사회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 **문제점**

- 국가 최상위 보호지역인 국립공원 관리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26.3% 삭감됨. 현재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는 보호지역을 늘리고, 보호지역 내 훼손지역을 증량시키는 등의 전략이 이행되고 있으나, 이에 맞지 않게 예산이 후퇴하고 있음.

(단위: 백만 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141,899	233,647	225,694	286,419	211,502

- 특히 공원예산 중 공원자연보전 예산은 전년대비 48.7% 삭감되었고, 이중 '핵심지역보전(사유지매수)'가 55,000백만 원을 수준을 3년간 유지하다, 2023년 증액된 다음해인 내년 71.4%(20,000백만 원)으로 삭감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짐.

(단위: 백만 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핵심지역보전(사유지매수)	55,000	55,000	55,000	70,000	20,000

-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더불어 공원자연보존지구 등 핵심 보전지역 관리 및 국립공원 관리 정책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
-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국립공원 만들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장애탐방로 인프라 조성' 예산도 기존 2,062백만 원에서 1,827백만 원으로 삭감됨.

■ **의견 : 증액**

- 건물 등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프로그램인 '국립공원 생태 문화·교육플랫폼' 예산을 삭감하고, 해당 예산을 핵심지역 사유지매입과 무장애탐방로 인프라 조성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데 활용함.
- 특히 국립공원 핵심지역 사유지매입 비용은 매 해 증액하여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국립공원 관리에 있어 민원 등 갈등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확대 필요함.

■ **담당 단체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02-961-6547)**

**멸종위기종복원 사업 20주년에 맞는
예산 편성 및 계획 실행**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1831-304)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본예산(A)	요구안	정부안(B)	(B-A)	%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1831-304)	22,258	29,447	34,527	28,898	△4,665	△15.8

- 사업내용: 멸종위기 야생생물(반달가슴곰·산양·여우) 복원을 통한 생물종 다양성 증진 및 건강한 생태계 유지

■ **문제점**

- 2024년은 멸종위기종복원 사업 20주년이지만, 종복원 개체 안정화 이후 등의 대책 및 정책, 주민 인식제고가 요원한 상황임.
- 특히, 반달가슴곰 종복원사업 계획의 기준이었던 KM-53이 2023년 6월 폐사하면서 종복원 대상 개체의 관리 및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됨.
- 반달가슴곰 개체가 약 100마리(추정)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동 서식지 인근 주민과의 공존 방안 및 주민설명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견 : 증액**

- 멸종위기종복원예산 중 반달가슴곰 공존문화조성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조정함.

■ **담당 단체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02-961-6547)**

전기승용차 판매량 줄어드는데 보조금 감액하는 정부?

환경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계획	
		계획액	집행액	요구안	정부안
무공해차 보급사업	1,744,325	2,565,224	1,398,083	2,664,794	2,398,754
- 전기자동차 보급	1,446,291	1,918,000	1,228,200		1,764,000
- 수소차 보급	288,813	633,400	156,895		620,850
- 무공해차 운영비	9,126	13,824	12,988		13,904

- 사업내용: 전기자동차(전기승용차, 전기화물, 전기승합, 전기이륜차) 및 수소차(수소승용차, 수소버스, 수소트럭, 수소청소차) 구매 자금 지원, 무공해차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 등

■ 문제점

- 정부는 2023년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 수송 부문의 2030 NDC를 2018년(98.1백만톤) 대비 2030년(61.0백만톤) 온실가스 배출량 37.8% 감축으로 밝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2024년 예산안은 2030 NDC를 상향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액되었음.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2024년 예산(1조 7640억 원)은 2023년 예산(1조 9180억 원)에 비하여 약 8% 감액되었으며, ‘수소차 보급’에 대한 2024년 예산(6208억 원)은 2023년 예산(6334억 원)보다 약 2% 줄어들었음.
- 특히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올해 들어 8월까지 판매 대수가 67,564대로 전년 같은 기간(71,744대) 대비 5.7% 가량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3년 9월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대 정책을 부랴부랴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보조금 최대 지급 가능액은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종전 680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로 최대 100만 원 늘어났음. 정부가 연중에 보조금을 상향한 것은 전례가 없는 조치이며, 수송 부문 탄소중립의 핵심과제인 친환경차 보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방증함.
- 그러나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승용차에 대한 2024년 보조금(400만 원)은 2023년 보조금(500만 원)에 비하여 20%나 감액되었음. 보조금 액수를 줄이는 대신 지원 대수를 늘린다는 방침이기는 하나, 환경부 스스로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중에 보조금을 상향한 초유의 상황에서, 이처럼 대당 보조금을 감액하는 예산안은 앞뒤가 맞지 않음.

■ 의견 :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보급 예산 증액

- 수송 부문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구매 자금 지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기승용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에서 구매 보조금을 20%나 감액한 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담당 단체 : 플랜 1.5 (02-735-3565)

한참 부족한 근로지원인 예산, 수요조사는 왜 하나

고용노동부, R&D회계, 장애인고용관리지원(1452-306)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장애인고용 관리지원	210,671	232,998	-	256,918	248,006
- 근로지원인 지원	204,713	227,025			242,458

- 사업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제1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적 노동을 지원하고자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07년부터 장애인노동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오고 있음.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노동환경을 구성하는 주요한 기반이며,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근로지원인 예산을 편성하여 중증장애인 노동의 배경이 될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함.

[표] 고용노동부,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9 ~ 2023.07)

2019	고용관리비용 지원 513개(중복제외 193개) 사업체, 고용관리비용 관련자 1,507명 및 근로지원인 4,420명(장애인근로자 4,405명) 지원, 시설장비 145개소(713명) 지원
2020	고용관리비용 지원 443개(중복제외 191개) 사업체, 고용관리비용 관련자 1,137명 및 근로지원인 7,317명(장애인근로자 7,794명) 지원, 시설장비 151개소(877명) 지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3개소 운영
2021	고용관리비용 지원 473개(중복제외 214개), 사업체, 고용관리비용 관련자 1,177명, 및 근로지원인 11,203명(장애인근로자 12,407명) 지원, 시설장비 198개소(1,304명) 지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운영
2022	고용관리비용 지원 782개(중복제외 185개) 사업체, 고용관리비용 관련자 1,576명 및 근로지원인 13,800명(장애인근로자 15,015명) 지원, 시설장비 206개소(1,082명) 지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운영
2023 (*7월말 기준)	고용관리비용 지원 369개(중복제외 122개) 사업체, 고용관리비용 관련자 814명 및 근로지원인 11,544명(장애인근로자 13,943명) 지원, 시설장비 113개소(701명) 지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운영

- '23년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사업의 근로지원인 예산은 10,500명의 근로지원인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음. 하지만 현행 근로지원인 제도는 공급자 중심

으로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2023년 7월 기준 이미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근로자는 13,943명을 넘어 당해연도 사업에서 지원하는 인원을 넘어섰음.

- 이는 해마다 자연증가분이 반영된 수위에도 미달하며, 이로 인해 근로지원인 제도는 예산의 조기소진 문제를 피할 수 없음. 2021년, 2022년의 경우 상반기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편성한 근로지원인 예산은 대부분 소진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조기소진을 피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예산 소진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고용되었음에도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그럼에도 2023년 고용노동부는 불안정한 제도에 부족한 예산을 편성함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돌렸음. 현재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인구가 80만 명이 넘으며, 근로지원인에 대한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이는 턱없이 부족함.
- 근로지원인 예산의 확대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과 직결되며, 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이에 전장연은 고용노동부에 '24년 근로지원인 예산의 규모를 20,000명 이상 편성하여 중증장애인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함. 나아가 향후 지속적으로 전년대비 연 2,000명 이상 씩 확대하고, 현행 근로지원인 제도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중증장애인)의 이용기준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함.
- 더불어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 동시지원 확대(1:2→1:3)를 통해 부족한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공급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공급량에 장애인 노동자를 수 맞추어 지원하고 있음. 근로지원인 1명이 장애인 노동자 다수를 지원하게 될 경우, 장애인 노동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게 됨.
- 이에 전장연은 근로지원인의 동시지원을 확대를 우선적인 제도 개편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 노동자와 근로지원인의 1대1 매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지원 방향 수립할 수 있도록 현실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할 것을 요구함.

의견 : 2024년 정부안 예산 대비 282,542백만원 증액

- (1) 근로지원인 지원 인원 확대 : 11,000명 → 20,000명 (9,000명 ↑)
- (2) 근로지원인 지원 단가 증액 : 14,843원 → 17,500원 (2,657원 ↑)

- 근로지원인 지원 예산 2,852억원 증액
- 요구 예산 : 525,000백만원 (정부안 대비 282,542백만원 증)
 - ▶ 지원금(근로지원인 인건비) : 525,000백만원
 - 20,000명 × 17,500원 × 125시간 × 12개월 = 525,000백만원

■ 담당 단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2-739-1420)

윤석열정부의 장애인 정리해고, 유일한 직접지원사업마저 없애

고용노동부, 기금회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1452-316)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1,557	2,301	-	1,619	0

- 사업내용: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 참여 촉진

■ 문제점

- 2019년부터 시작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 지원 활동을 통하여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료성에 기반하여 지역 내 중증장애인의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행 중임.
- 이 같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사자의 실적 정도를 토대로 급여가 산출되는 실적제를 도입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속 심화되는 실적 미달 문제를 완화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로써 보다 적절한 형식과 집행체계를 갖추기 위해 민·관 및 공공기관의 논의가 수 차례 진행되었음. 지침 개선 과정을 거치며 실적제는 월급제로 전환되었고, 취업 연계 조건 완화로 민간 영역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로 인해 참여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향상되었음.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23년 지침 발취>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공단	(직접취업) 취업알선, 장애인인턴제 등	(지원고용) 공단 지원고용	(직업훈련) 맞춤훈련센터, 발달훈련센터, 직업능력개발원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진단·경로설정 2단계:의욕능력증진 3단계:집중 취업알선
민간	(직접취업) 장애인복지관 등의 취업알선	(지원고용) 민간위탁 지원고용, 장애인개발원 현장중심 직업재활 사업	(직업훈련) 공단 민간위탁 및 공공 훈련	(취업프로그램) 자치단체, 자립생활센터 취업 관련 프로그램

- 참여 당사자의 만족도 향상, 유의미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부족에 따른 위탁기관의 어려움은 지속. 본 사업의 경우 기본운영비 예산 내에서 동료지원가 인건비(퇴직금 포함), 운영비(참여자 상해보험가입 등), 활동비, 홍보비 등을 집행해야 하지만, 23년 책정된 기본 운영비 월 89만원은 동료지원가의 월 인건비도 낮은 금액으로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이 자부담을 출연해야 함.

- 이처럼 본 사업은 2019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러서야 동료지원가의 열악한 처우가 일부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공공영역 연계 방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서 이를 순감(사업 폐기)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이로 인해 23년 6월 기준, 전국 187명의 동료지원가가 해고 위기에 처하고 말았음. 중증장애인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80%를 상회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한 것임.

구 분	2022결산	2023계획액		2024년도		증 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
총 계	1,925,696	1,900,474	1,900,474	2,004,757	2,004,757	104,283	5.5
1452 장애인고용지원	539,603	598,244	598,244	665,531	638,605	40,361	6.7
장애인고용장려금 (1452-303)	269,790	297,747	297,747	325,640	323,371	25,624	8.6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452-306)	210,671	232,998	232,998	256,918	248,006	15,008	6.4
장애인취업지원 (1452-311)	30,630	33,488	33,488	39,011	34,011	523	1.6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지원 (1452-315)	20,600	21,018	21,018	31,567	24,701	3,683	17.5
중증장애인지역 맞춤형취업지원 (1452-316)	1,557	2,301	2,301	1,619	-	△2,301	순감

-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는 가시적 성과로써 담보될 수 없음. 동료성에 기반한 자기효능감 고취와 사회참여 촉진이라는 과정 자체가 정성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 가운데 중증장애인의 노동 및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견인되어야 함.
- 이에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서 순감(폐기)되어버린 본 사업의 복원 및 사업 취지에 적절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전향적 개편요구.

■ 의견 : 예산 복구 및 2023년 정부안 예산 대비 891백만원 증액

- (1) 동료지원가 1인당 참여자 수 : 20명 → 17명
- (2) 동료지원가(300명, 인건비 월 930,000원) 인건비 증액
- (3) 참여자 수당 : 5,000원, 15회 → 6,000원, 15회
- (4) 슈퍼바이저 인건비 : 50만원, 70명 → 93만원, 90명
(인건비 증액, 동료지원가 5인 이상 배정 시 1명 추가)
- (5) 참여자 상해보험료 : 0원 → 1인 20,000원
- (6) 동료지원가 업무추진비(활동비, 재료비 등) : 0원 → 1인 월 50,000원(인건비 분리)

■ 담당 단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2-739-1420)

질적 확대도 필요한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303)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청년고용지원 인프라운영	11,570	40,667	189,451	83,147	42,480	104.4

- 본 사업은 2023년 예산 406억 원에서 2024년 831억 원으로 약 2배 이상 증액됨.
- 본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기조 중 맞춤형 취업서비스 혁신의 큰 부분을 차지함. 특히 높은 대학 진학률을 감안하여 대학 내 일자리센터를 확충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임.

■ 문제점

- 본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면, 주로 양적 확대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2023년부터 대학 재학생 대상이었던 대학일자리센터에서 2년 이내 졸업생 및 지역 청년까지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개편되었으나 운영비는 2022년 단가인 개소당 2억원에서 늘지 않고 있음. 학생들이 대학 취업지원 조직 참여율이 2020년 12.1%, 2021년 11.7% 수준으로 낮고, 그 주된 이유가 '지원 내용을 잘 모른다'인 상황임. 대학 입장에서도 본 사업에 대한 어려움으로서 '학생의 저조한 인식 및 참여'와 더불어 '운영 인력 수 부족 및 인력의 전문성 미흡'으로 꼽고 있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2,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 중 절반도 안 되는 50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함. 나머지 기관들은 전년도와 다름없이 운영될 것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신규로 편성한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경우, 운영기관으로 20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인데 고교 재학생 대상 서비스를 대학이 담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02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증감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31,759	37,664	5,905	18.6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8,571	38,937	30,366	354.3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신설)	-	6,200	6200	100
2030 자문단 운영	67	67	0	0.0
운영비	270	279	9	3.3
총계	40,667	83,147	42,480	104.4

■ 의견 : 예산 증액

- 대학생 및 2년 이내의 졸업생, 지역 청년들에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 배정 필요.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에 대한 예산 배정 필요. 고용서비스에서 핵심은 청년들이 본인의 관심 및 직무영역에 맞는 정보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가임. 따라서 학생 개인의 특성과 관심사를 잘 알고 맞춤형 정보를 연결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상담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역시 주된 기능이 상담사를 통한 서비스 제공임. 게다가 센터의 대상 범위가 재학생 외 졸업생 및 지역 청년들까지 확대되었으나 이들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은 상담사의 역량에 기댈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전문 인력의 양성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필요함.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모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함.
-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실시기관은 학생들이 상시 접근할 수 있고, 각 직업계고 특성을 잘 아는 해당 고등학교가 되어야 함. 학교 밖 전문기관의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등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파견할 필요.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대안 없이 예산만 삭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49,034	△240,044	△27.0

- 본 사업은 2023년 예산 8,890억 원에서 2024년 6,490억 원으로 약 27% 삭감됨.
- 본 사업 예산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6,007억 원, 빈일자lich년취업지원금 483억 원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취업 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실업상태)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을 지급하는 사업
- 빈일자lich년취업지원금(24년 한시사업, 신설) : 건설·해운·수산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 문제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주요 청년채용장려금 사업이 2021년 일괄종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신설됨. 그러나 시작부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여 사업이 비효율성이 꾸준히 지적되었음. 특히, 일몰된 다른 채용장려금에 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상자를 '취업애로청년'으로 국한시켰고, 지원대상도 중견기업을 배제, 지원금도 훨씬 적은 금액임. 이같은 사업 구조로 인해 채용 성과가 나지 않아 예산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바꾸기보다는 지원금을 더 줄이고 있음(2022년에는 월 80만 원이었으나, 2023년 예산에서부터 월 60만 원으로 줄어듦).
-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주된 이유인 낮은 임금, 비민주적인 사내문화, 노동강도 등의 요인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취업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유일한 것으로 보임. 매년 11만명 이상이 본 제도를 통해 채용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을 줄이기 보다는 사업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청년들에게 직접 임금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거나 기업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향 등이 있을 것임.
- 빈일자lich년취업지원금의 경우, 빈 일자리 업종의 취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나 6개월 간의 지원금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가 고민임. 특히, 빈 일자리 업종으로 지정된 10개 업종은 이미 청년들이 기피하는 업종으로, 월 33만원 정도 되는 지원금으로 취업을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의견 : 예산 증액 및 구조조정

- 다른 대안이 없는 현 상황 속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지원금을 대폭 늘리거나 청년들에게 직접 임금 지원으로 나가는 등의 방식으로 청년들의 취업 및 기업들의 채용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이도 저도 아닌 금액으로는 예산만 낭비하고 채용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전 정권 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 수순인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 청년내일채움공제(1044-301)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841,878	429,586	159,965	148,988	△280,598	△65.3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388,682	210,693	84,670	70,715	△139,978	△66.4

- 본 사업은 2023년 예산 6,402억에서 2024년 2,197억으로 약 65.7% 대폭 삭감됨.
- 본 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정부/기업(고용보험기금)이 각각 일정액을 적립하여 2~3년 후 청년들이 1,600만 원~3,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문제점

- 본 사업은 청년들의 큰 호응을 받아, 매년 예상보다 조기 마감되었고, 2021년에는 예산 소진으로 추경 편성까지 이루어져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온 사업이었음. 예산 집행률도 99%임. 또한 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우수'로 평가받음. 특히 공제 가입자의 근속 비율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장기 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고용노동부, 2022/01/03 보도자료,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에도 7만 명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합니다'). 또한 참여 청년 및 기업 만족도도 각각 92.6점, 96.2점(고용노동부, 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로 높은 수준임.
- 그러나 2023년부터 청년 및 기업부담금이 상향 조정되었고, 신규가입인원은 2만명으로, 업종도 제조업 및 건설업종으로 제한됨. 2024년에는 신규 가입을 위한 예산이 전면 삭감됨. 중기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및 청년동행카드 폐지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한 상황임.
- 위의 성과들을 감안할 때, 그나마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연결시켜주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은 합리적이지 않음.

■ 의견 : 예산 증액

-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실제 채용은 줄이고 인턴만 양산하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1051-305)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56,356	126,293	288,384	238,213	111,920	88.6

- 본 사업은 2023년 예산 1,263억 원에서 2024년 2,382억 원으로 약 88.6% 대폭 증액됨.
- 본 사업은 노동시장 진입 이전 단계인 청년층에 대한 진로지도, 일경험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해 직무를 경험하고 관련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임.

■ **문제점**

- 본 사업에서 예산이 가장 크게 증액된 부분은 ‘청년일경험지원’ 프로그램임. 2023년 553억 원에서 2024년 1,663억 원으로 약 3배 이상 증액되었음. 세부항목을 보면 프로젝트형, 인턴십형 등 청년 인턴 인원이 각각 6,000명, 19,0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음
- 이는 작년 10월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의 기초에 따른 것임. 해당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청년 ‘체험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향이 담겨 있음. 즉, 채용과 연계되지 않은 일경험을 위한 단기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임.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3개월 정도에 그치던 인턴 일자리를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인턴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함. 그러나 이미 공공기관 인턴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직후, 잡코리아 등 공공기관 인턴 모집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모두 6개월에 한정된 인턴 일자리만 올라오고 있음. 즉, 단지 3개월 인턴이 6개월로 3개월 늘었을 뿐임.
- 또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을 대폭 축소하고 있음. 결국 질 좋은 일자리 채용은 줄이고, 단기 일자리만 ‘일경험’이라는 명분으로 늘려 채용실적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임.
- 신규사업인 281억 원 규모의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기존의 오프라인 청년센터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겹치는 내용들임. 특히, 정책 gateway로 활용하겠다는 것 역시 오프라인 청년센터 조성 당시에도 제시되었던 내용임. 결국 이름만 바뀌어서 하는 똑같은 사업이며 청년카페 역시 기존의 청년센터와 모두 중복되는 프로그램임. 청년카페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것은 청년들에게 혼란만 가중될 뿐임.

■ **의견 : 예산 삭감**

- 체험형 청년 인턴보다는 채용형 인턴, 공공기관 채용 자체를 늘리는 것이 필요함.
-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름만 바꾼 같은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기존의 청년센터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취약계층 외면하나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취약계층취업촉진(1070-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취약계층취업촉진	11,416	11,654	12,247	6,185	△5,469	△46.9

- 본 사업은 2023년 116억 원에서 2024년 62억 원으로 약 46.9% 대폭 삭감됨.
- 본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장기실업자, 고령자, 신용불량자, 저소득층 등)에게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 문제점

- 본 사업은 코로나 시기 이후인 2021년부터 참여자 수가 증가하여 2022년도에는 목표치를 훨씬 초과한 128%의 성과 달성을 보였으며, 참여자 만족도도 110점을 넘어섬.
- 그러나 2024년도 예산은 거의 절반으로 삭감됨. 주된 사유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단순 참여를 최소화하고 실직 스트레스가 높은 구직자 중심으로 상담 횟수 운영' 및 '고용센터 인력상황을 고려하여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일부 민간기관에 위탁'이라는 이유임.
- 그러나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의 특성상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은 일정 정도 스트레스나 정신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즉, 애초에 단순 참여 자체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님. 따라서 심리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을 설문지 몇 문항으로 선별하기보다는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함. 특히 민간 심리상담 기관들의 높은 가격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을 위한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은 공공에서 필요한 만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민간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질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있음.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줄이기보다 프로그램 내용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함.
-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본 사업 예산까지 감액한 것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보다 더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됨.

■ 의견 : 예산 증액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한 횟수와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질 좋은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 함.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저출생·고령화정책과 역행하는 여성일자리정책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1070-301)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1,438	12,030	11,668	11,668	△362	△3.0

- 본 사업은 2023년 120억 원에서 2024년 116억 원으로 소폭 삭감됨.
- 본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력단절여성 대상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문제점

- 본 사업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실적은 2021년 213%, 2022년 135%로 매우 높은 성과 달성률을 보임.
- 그러나 2024년도 예산 중 새일센터 운영비가 4억2,200만 원 감액됨. 특히 핵심적인 사업인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감액이 발생함.
-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사업 내실화 필요성에 대해 2019년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왔음. 그러나 매년 예산 변화가 미미하다가 2024년의 경우, 2020년 예산인 117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액됨.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한 전문 센터는 새일센터가 유일한 상황에서 새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여가위에서도 새일센터 프로그램의 질 및 직원들의 처우, 센터가 연계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직종의 처우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되어 온 바, 새일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예산도 증액하여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응정책의 핵심 분야로서 일·육아 병행을 내세움. 이를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노동시장의 안정적인 복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새일센터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기관으로서 적절히 역할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의견 : 예산 증액

- 새일센터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늘려야 함.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제도 개편을 위한 예산 확충을!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1234-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국민취업지원제도 (일반)	883,377	1,225,455	1,082,969	942,515	△282,940	△23.1

- 본 사업은 2023년 1조 2,254억 원에서 2024년 9,425억 원으로 23.1% 삭감됨.
- 본 사업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임

■ 문제점

- 본 사업 예산은 2023년부터 계속 감액되고 있음. 2023년도에도 18%, 올해는 23% 감액됨. 예산서를 보면, '사업의 최근 실적을 반영하여 목표 인원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이를 근거로 목표 인원을 줄이고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보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절차적 까다로움, 생계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으로 비판이 많았음.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역시 이전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 특히 청년들은 주로 민간위탁 운영기관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 기관들의 평균 직원 수는 3.9명, 직원 1인당 담당 인원은 약 77명으로 업무 부담이 큰 상황임. 또한 본 제도를 통한 취업률도 2021년 68.1%에서 2022년 54.4% 수준으로 하락했고, 본 사업을 통해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약 50%에 불과하는 점 역시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2회계연도 결산주요 사업 분석).
-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도입 당시 79~297만 명이 잠재적 대상자로 추정되었던 데 비해 실제 참여 인원이 2022년 기준 28.5만명에 불과하다는 데 대해 사업 전반의 내용을 점검해 보아야 함. 이는 예산서상 목표 인원이 과다 집계되었던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해당 사업 안에 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가구 소득 중심이고, 1인당 생계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 금액, 복잡한 증빙 서류 등 사업 전반의 내용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의견 : 예산 증액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 질, 상담사의 수 확충 등 사업 내용 개선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지역 일자리 줄이는 예산 감액

고용노동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1056-317)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32,667	147,504	183,524	101,162	△46,342	△31.4

- 본 사업은 2023년 1,475억 원에서 2024년 1,011억 원으로 약 31.4% 감액됨.
- 본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고용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임.

■ 문제점

- 본 사업에서의 주된 예산 감액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임. 사유로는 ‘지역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한 자치단체 지원 내역사업간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 폐지’인데, 구조조정의 이유가 되는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무엇인지 불분명함.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202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6,36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 대비 120.3%를 달성했고, 2차연도에도 9,815개의 일자리를 창출함(한국고용정보원, 2022,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선정 및 평가). 이중 절반 이상이 위기 근로자 일자리 창출 실적임. 양적 지표만으로 성과를 계산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질적 지표를 반영할 수 있게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등 개선이 가능함.
- 무엇보다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 구조 및 자원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파악·집중 지원하는 유의미한 사업임. 특히 선제대응의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의 사업체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상황 적응이 유리한 사업일 수 있음.
- 특히, 지자체의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의 지원 요건 대상이 되는 지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음. 따라서 5년짜리 한시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유지 및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의견 : 예산 증액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하여 지자체 일자리 창출 지원 필요.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취약계층의 연금 수급권을 위해 가입기간 확대 필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국민연금기금,
실업크레딧지원(1232-351)(1293-350)(7432-441)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실업크레딧지원(일반)	56,181	34,739	33,923	33,910	△829	△2.4
실업크레딧지원(고보)	55,918	34,474	33,658	33,658	△816	△2.4
실업크레딧 (국민연금기금)	56,804	35,500	34,619	34,582	△918	△2.6

- 본 사업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사업임.

■ 문제점

- 실업크레딧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현재 국민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취약한 계층의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 그러나, 실업크레딧 적용기간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 현재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짧은 가입기간임. 저소득층(소득하위 20%)의 평균 가입기간은 81.18개월(한겨레,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률 50%에 그쳐…가입기간도 고소득층 절반 수준”, 2022/06/13)로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높아져 수급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업크레딧은 저소득층의 연금 수급권 나아가 노후생활의 양극화를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저소득층의 가입기간 확보 및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크레딧의 적용기간을 12개월보다 더 확대되어야 함.

■ 의견 : 예산 증액

- 실업크레딧 적용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 혹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함.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선부르게 폐지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원상태로 복원해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회적기업 육성(일반)(1037-301)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사회적기업 육성	64,402	69,259	-	70,888	28,589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2003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24년 예산안에서는 폐지되었음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사업개발비, 업무담당자 교육, 성과공유대회, 모태펀드 등의 세세사업으로 구성. 특히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

■ **문제점**

-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성과지표에 있어서 100%를 항상 초과해서 달성해 왔음. 그럼에도 해당 영역의 주요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움
- 더군다나, 해당 사업은 지난 5년간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되었고, 이는 그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음을 의미함.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안)
사업비	22,352	21,245	22,245	21,738	24,621

- 중기재정계획에서도 본 사업은 향후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보여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중기재정계획 상의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중기재정계획	'21	'22	'23	'24	'25	'26
'21~'25	22,245	21,745	22,245	22,245	22,245	22,245
'22~'26	22,245	21,745	32,033	25,711	26,949	28,248

- 특히, 사회적기업에게 있어서 사업개발비는 회사가 현실에 안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본 사업을 폐지하면서 사업개발비가 담당하던 기능도 사라지게 됨. 이 기능을 대신해 주는 사업이 없음.

■ **의견 : 예산 증액, 폐지된 사업의 원상복구**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폐지될 사업이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할 사업
- 사업을 되살리고 이에 배정되었던 예산 또한 원상복구.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지난 10여년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예산 삭감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회적기업 지원(1037-311)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사회적기업 지원	64,402	69,259	70,888	28,589	△40,670	△58.7

- 본 사업은 2023년 692억5,900만 원에서 2024년 285억8,900만 원으로 58.7% 감소
- 본 사업은 2021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삭감은 다소 이례적임.
- 하지만 2024년 예산안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삭감되었다는데, 본 사업도 같은 상황에 놓임.

■ 문제점

- 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이미 단위사업으로 정착되어 수년간 계속사업으로 성장·구축됨.
- 사실, 사회적 경제의 핵심적인 법은 보수 정권에서 제정되었음. 사회적 기업의 토대인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이명박 정권인 2008년, 「협동조합기본법」은 박근혜 정권인 2013년에 제정되었음. 즉 사회적 경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사회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았음.
- 급격한 예산 삭감은 성공적으로 기반을 만들고 있던 사회적 기업들이 실패하는 결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대한 비판은 수용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예산의 대규모 삭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용인하지는 못함.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개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임.
- 사회적 기업이 이미 설정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대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사회적 가치의 창출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의 목적과 방식에서 나오는 것임. 근로 역량 상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재무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며, 발생한 재무적 이익을 사업주에게 귀속시키기보다는 회사 자체에 귀속시키는 것 등이 중요함.
-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외부의 재정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함.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임.

■ 의견 : 예산 증액을 통한 원상복구

-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보완책 필요.
- 2023년의 예산 총량을 유지하면서, 지원대상 사회적 기업을 적절한 과정을 통해 평가 및 구조조정을 하고, 동시에 구조조정이 된 기업 수만큼 새로운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배분.
- 재정적 지원을 줄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규제를 통해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교정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고용보험·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231-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046,594	1,076.405	-	1,200,000	837,516

■ 문제점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열악한 노동자들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해 왔음.
- 2012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 연금 수급권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의 경우, 전체 분석대상 중 10.5%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하지만 2018년 이후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축소하고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노동자(신규노동자)로 지원 대상을 제한. 이에 따라 입·퇴사를 반복하고 있는 중소영세업체 노동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2021년부터 기존가입자 지원이 중단되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 총액 역시 감소하고 있음.
- 2023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최저임금 120%에서 최저임금 130%로 일부 상향하였으나 지원 대상 사업장과 지원 기간은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음.

■ 의견 : 소규모 저임금 노동자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및 지원 기간 연장

- 지원 대상 사업장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기존가입자에 대한 지원 재개.
- 지원 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확대.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 (02-497-7888, kptu2011@gmail.com)

사회보험 사각지대 확대 및 확장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231-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본예산	2024년		증감	
			요구안	정부안	(B-A)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688,184	1,076,405	1,003,401	837,516	△238,889	△22.2

- 사업내용

- :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 지원
- : 10인 미만 사업의 저소득(월보수 270만 원 미만, '24년 기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10인 이상 사업의 저소득(월보수 270만 원 미만, '24년 기준)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 지원,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22.1월)

■ 문제점

- 일용근로자 △70%, 예술인 △41%, 플랫폼종사자 △56% 고용보험료 지원이 대거 삭감되었으며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됨
- 가사노동자의 경우 국회 지적이 있었으나 이미 실태조사 등 대책을 추진 중이었음. 오히려 인증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 책정이 더 필요한 실정임.

■ 의견 : 증액

- 사회보험료 지원 삭감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낮추고 사회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것임. 이는 취약계층을 더 늘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원상복귀해야함
-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되어 22년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무용지물이 됨. 가사근로자가 더 이상 사회보험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도록 예산이 시급하게 편성되어 사업이 진행되어야함.

■ 담당 단체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312-7488)

잘하고 있던 상담실 폐쇄한 차별권장정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1331-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본예산	2024년		증감	
			요구안	정부안	(B-A)	%
고용평등환경개선	2,805	2,480	2,421	1,790	△690	△27.8

- 사업내용

: (고용평등상담지원)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모성보호·일 가정 양립 등 피해근로자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및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연계·지원으로 신속한 권리구제 및 심리회복을 통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고용평등상담실은 2022년에 13,198건의 상담실적과 1,000회 달하는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1,000명에 달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착실히 사업을 집행함

■ 문제점

-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54.6% 삭감

2023년 본예산 1,215백만 원으로 책정됐던 금액이 551백만 원으로 54.6% 삭감됨. 21개소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운영되었던 사업이 8개소로 대폭 축소됨. 여성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놓아버린 것임. 이 사업에 대한 평가로는 상담 실적이 높고 수요가 증가하여 상담인력을 추가 배치 하도록 후속조치 평가가 내려짐.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노동자들에게 호응과 수요가 높음. 기존보다 증액되어야했으나 오히려 줄어듬. 그러나 추가 배치는커녕 상담실 개수를 줄이고 예산도 대폭 삭감.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증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 창고 운영과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하고 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한 무료강사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했던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았음.

■ 의견 : 증액

- 고용평등상담지원 사업의 원상복귀. 평가와 실정에 맞게 고용평등상담실을 축소하지 않고 기존대로 운영해야함.

- 익명신고 창고 운영과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함. 이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되어야함.

■ 담당 단체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312-7488)

최저임금 안주고 장시간 일해도 괜찮은 나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근로조건개선지원(3031-302)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본예산	2024년		증감	
			요구안	정부안	(B-A)	%
근로조건개선지원	15,421	16,675	19,723	11,896	△4,779	△28.7

- 사업내용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 장시간근로 문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4차산업과 현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지원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지원 : 기초노동질서 준수 인식개선,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제 등 관련 연구개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의 현장 확립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 「직장 내 괴롭힘」제도 안내(교육영상 제작·배포 등) 및 민간역량을 활용한 피해자 상담 지원으로 상호존중의 직장문화 정착

■ 문제점

- <장시간근로개선지원> 사업 이관 됐더니 1,100개소 운영 못해

일반용역비 중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전문가 컨설팅) 운영비의 1,440백만 원 순감. 일터혁신 컨설팅으로의 이관을 확인해본 결과 23년 대비 500건만 증가함. 기존에는 1,600개소가 대상이었음. 23년에 예산안 대비 집행이 덜 된 부분은 점검사항.

-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 최저임금 위반 만연한데 예산 전액 순삭!(순간삭제)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저하됐다고 평가하지만 수도권 외에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심각함. 특히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카페, 편의점은 더 열악함.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지도 및 홍보가 절실함에도 사업이 폐지됨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52% 삭감

23년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서비스 720백만 원, 상담센터 통합관리 20백만 원 전액 삭감.

■ 의견 : 증액, 폐지된 사업 복구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이 예년만큼 이뤄져야함.

-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를 위한 사업은 복구하여 예산을 책정해야함.

- 직장내 괴롭힘 상담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복구하여 예산을 책정해야 함

■ 담당 단체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312-7488)

‘덕분에’라더니, 내팽겨진 필수노동자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고용상 차별개선지원(3031-304)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본예산	2024년		증감	
			요구안	정부안	(B-A)	%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3,340	4,288	3,578	3,358	△930	△21.7%

- 사업내용

-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 재난 시에도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등 실시
- :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효과성 제고
- :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에 대한 우선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 유형별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보호·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등 파악

■ 문제점

- 비정규직 관련 연구 △50백만 원(50%) 삭감,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 △17백만 원 전액 삭감
-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실태조사 △150만 원(60%)삭감
-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재난 유형별 실태조사 △100백만 원(50%) 삭감, •지역별 사례 실태조사 △100백만 원, •해외사례 비교조사 △100백만 원 전액삭감
-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공고해지고 고용형태가 더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실태조사와 연구는 취약노동자 발굴 및 추적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가 됨. 실태조사와 연구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워짐

■ 의견 : 증액

- '비정규직 근로자, 특고·플랫폼 종사자, 필수업무 종사자 고용상 차별 개선 등 보호 방안 마련'이라는 향후 추진 목표에 맞게 비정규직, 비정형노동, 필수업무 노동자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현 예산 수준보다 증액 책정하여 사업을 집행해야함.

■ 담당 단체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312-7488)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서	의견	사업	작성자	쪽
산업통상자원부	삭감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 구축	플랜1.5	066
산업통상자원부	증액	유전개발사업출자	플랜1.5	067
산업통상자원부	증액	공공에너지 선도투자 및 신산업 창출 지원사업	플랜1.5	068
산업통상자원부	삭감	재생에너지지원	플랜1.5	069
산업통상자원부	증액	전력산업 홍보	플랜1.5	071
산업통상자원부	증액	기후대응기금 전출	플랜1.5	072
산업통상자원부	증액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R&D)	기후솔루션	073

국제 환경규제 대응예산을 삭감한 자리에 CFE 예산이?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
구축(3147-301)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 구축	1,921	1,921	-	2,798	1,341

- 사업내용: CFE 이니셔티브 기획·확산, 자원생산성 기반 구축

■ 문제점

-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명 하에 과거에는 유해화학물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등과 같은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올해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사업명과 전혀 다른 내용의 사업을 신규 편성함.
- 해당 자리에 편성된 CFE 이니셔티브 기획·확산 사업은 한국 주도 CFE 이니셔티브 추진에 필요한 국제 동향 및 대응 전략 기획·연구 및 주요국 공감대 확산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의 사업임.
- CFE 이니셔티브에서 표방하는 무탄소 전원의 24시간 사용은 RE100보다 한층 강화된 요구 사항으로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국제 표준화한다는 것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예산사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 의견 : CFE 이니셔티브 기획·확산 사업 예산 600백만원 전액 삭감

- 해당 예산은 기존대로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사용해야

■ 담당 단체 : 플랜 1.5 (02-735-3565)

유전개발사업출자 : 지금 이시점에 새로운 유전 개발을?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유전개발사업출자(5444-301)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유전개발사업 출자	37,609	30,130	-	69,219	48,140

- 사업내용: 에너지자립도 제고 등을 위해 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 및 생산광구 운영을 출자 지원

■ 문제점

-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39,290백만 원)을 국내 대륙붕 유망구조 탐사와 해외 유전(베트남) 확보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계획임.
- IEA는 이미 지난 2021년 Net Zero 보고서 발간을 통해 2050년 넷제로라는 전지구적인 기후 정책목표의 이행을 위해서는 더 이상 새로운 유전과 탄광 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신규 유전과 탄광 개발의 중단을 권고한 바 있음.
- 또한 새로운 유전 개발을 위한 투자는 그 성공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연의 리스크 역시 상당함. 에너지자립도 제고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유전 개발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달성 가능함.

■ 의견 : 유전개발사업 예산 39,290백만원 전액 삭감

-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유전개발 사업은 지양해야

■ 담당 단체 : 플랜 1.5 (02-735-3565)

에너지공기업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미래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공공에너지 선도투자 및 신산업 창출
지원사업(5804-322)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공공에너지 선도투자 및 신산업 창출 지원사업	5,848	4,212	-	179	179

- 사업내용: 에너지공기업이 신산업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구매 연계형 R&D 추진

■ 문제점

- 에너지공기업이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계획과 연계하여 실증인프라를 구축하는 R&D 사업으로 2021년 시작하여 매년 40~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해 왔으며 꾸준히 사업 성과를 내왔으나, 별다른 설명없이 관련 예산 거의 대부분을 삭감함

■ 의견 : 예년 수준으로 증액

- 에너지공기업이 에너지전환에 있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 생태계에서도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복원해야 할 것

■ 담당 단체 : 플랜 1.5 (02-735-3565)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42.3% 삭감,
점점 약화되는 에너지전환 의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재생에너지 지원(5202)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재생에너지지원(5202)	1,265,712	1,048,961	-	606,155	605,418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5202-302)	258,793	214,383	-	74,861	74,861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5202-303)	321,435	247,000	-	159,455	159,455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5202-308)	569,121	467,300	-	338,925	338,925
-풍력핵심소재부품엔지니어링센터구축(5202-308)	5,862	7,678	-	6,000	5,801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5202-315)	9,000	8,000	-	8,000	8,000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5202-317)	5,900	5,400	-	4,264	4,171
-해상풍력산업지원(5202-318)	7,400	16,450	-	14,650	14,205

- 사업내용: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발전차액지원, 보급지원, 금융지원)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촉진하고, 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과 대규모 발전단지 구축을 지원

■ 문제점

-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존 예산을 총액 기준 '23년 대비 42.3% 삭감함. 이에 따라 전력기금 전체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예산의 비중은 22.3%에서 13.5%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음.
- 이러한 예산 감소는 일부 발전차액지원사업을 2011년 종료하면서 신규사업자가 줄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축소된 효과(2,144억 원에서 749억 원으로 약 1,395억원 삭감)를 감안하더라도 자가소비용 태양광 확산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보급지원 사업(5202-303)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5202-308)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됨.

[표]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체 예산 구성

구분	2022		2023		2024요구	2024조정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전기안전관리	121,321	1.9%	129,745	2.8%	134,709	127,661	2.8%
전력수요관리	102,588	1.6%	100,138	2.1%	167,710	166,043	3.7%
전선로지중화지원	51,491	0.8%	52,480	1.1%	41,894	41,894	0.9%
재생에너지지원	1,265,712	19.5%	1,048,961	22.3%	606,155	605,418	13.5%
에너지신산업	82,958	1.3%	60,330	1.3%	28,546	27,646	0.6%
석탄수급안정및지역지원	14,785	0.2%	19,757	0.4%	19,757	15,911	0.4%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83,964	2.8%	231,459	4.9%	226,358	226,178	5.0%
농어촌전기공급지원	185,895	2.9%	132,638	2.8%	149,346	146,016	3.2%
전력공급기술	422,228	6.5%	423,033	9.0%	439,230	439,230	9.8%
전력수요기술	86,314	1.3%	103,019	2.2%	10,478	10,478	0.2%
기술정책	5,176	0.1%	4,938	0.1%	4,938	4,510	0.1%
기반구축	122,026	1.9%	92,221	2.0%	59,952	58,785	1.3%
국제협력	24,333	0.4%	21,149	0.5%	37,165	21,149	0.5%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인건비	3,973	0.1%	4,498	0.1%	4,611	4,611	0.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기금관리비	2,006	0.0%	1,946	0.0%	2,056	1,946	0.0%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	1,503	0.0%	1,432	0.0%	1,456	1,199	0.0%
전력산업정책개발및홍보	6,027	0.1%	9,957	0.2%	11,549	7,825	0.2%
전력해외진출지원	4,147	0.1%	7,745	0.2%	12,800	8,463	0.2%
전력산업기반조성	6,478	0.1%	8,889	0.2%	144,038	142,093	3.2%
회계기금간거래(에특회계)	1,311,821	20.2%	1,307,376	27.8%	-	1,307,376	29.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1,180,000	18.2%	100,000	2.1%	1,000,000	100,000	2.2%
기금간거래(기후대응기금)	200,000	3.1%	200,000	4.3%	-	200,000	4.4%
통화금융기관예치금	300,014	4.6%	-	-	166,976	166,976	3.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806,984	12.4%	634,344	13.5%	1,231,227	669,543	14.9%
합계	6,491,744	100%	4,696,055	100%	4,500,951	4,500,951	100%

■ 의견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금융지원 사업 예산 증액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할 것임.

■ 담당 단체 : 플랜 1.5 (02-735-3565)

원자력에만 치우친 전력산업 홍보비 책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전력산업 홍보(7401-301)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전력산업 홍보	5,662	6,907	9,407	10,999	7,330

- 사업내용: 전력시장교육, 전기절약 홍보, 신재생에너지홍보, 전기안전홍보, 에너지정보소통 등

■ 문제점

- 2019년 신재생에너지 홍보사업을 신규 내역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에너지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 활동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신재생에너지 홍보 예산은 전액삭감함.
- 에너지정보소통 사업계획에는 원자력과 관련한 국민소통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원자력에만 치우친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

■ 의견 : 신재생에너지 홍보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증액

- 에너지정보소통 사업 역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잡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내용 변경이 필요함.

■ 담당 단체 : 플랜 1.5 (02-735-3565)

기후대응기금 전출금은 그대로 유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기후대응기금 전출(9102-841)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기후대응기금 전출	200,000	200,000	-	0	200,000

- 사업내용: 수입이 부족한 기후대응기금에 일시적으로 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출

■ 문제점

-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해 2022년부터 약 2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2조4,867억원 규모로 증가한 바 있으나 2024년은 2023년과 유사한 2조4158억 원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입 계획을 수립함.
-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은 (1)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2) 교통개선 특별회계, (3)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기금, (4)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경매수입 등에서 이전된 전입금으로 구성이 되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2022년부터 매년 2천억원 가량을 출연해왔음.
- 기후대응기금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국가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촉진하고 전환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충분히 조성해야 할 것임. 유럽연합 혁신 기금('20년부터 10년간 100억 유로), 일본의 그린혁신기금('21년 약 2조엔) 등 해외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에서도 기후대응기금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의 육성은 물론이고 전환과정에서 화석연료 중심 산업과 지역경제 구조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 또한 기후위기 대응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출연금 규모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배출권 가격 폭락으로 단기적으로 유상할당 경매수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4년은 특히 전력기반기금 전출금 증액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의견 : 전출금의 지속적 증액 필요

- 충분한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출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음

■ 담당 단체 : 플랜 1.5 (02-735-3565)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친환경 선박기술 예산 유지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친환경중소형선박 기술역량강화(R&D)	3,280	5,298	897	897	△4,401	△83.1

- 사업내용: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3551-363)

■ 문제점

- 국제해사기구(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7. 3.~7. 7, 런던)'에서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함
-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총 배출량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상향하여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를,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순 배출량 '0'(Net-Zero)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 및 K-조선 재도약 전략에 따른 중·소형 조선소 친환경 선박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선형 및 설계기술 개발 지원 확대가 필요하나 '24 예산 편성지침의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감안, '23년 대비 4,401백만 원 감액이 예정됨
- 감액 시 중소형 조선소들은 앞으로 강화될 온실가스 및 환경규제에 대응을 할 역량이 약화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지역 고용 등 산업 관련 기반 요소들이 훼손될 심각한 우려가 있음.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	-	3,280	5,298	897

■ 의견 : '23년 수준으로 예산 증액

- 2024년 예산을 '23년과 동일한 수준(5,298백만 원)으로 증액

■ 담당 단체 : 기후솔루션 (02-6013-013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서	의견	사업	작성자	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	증액	말산업육성지원 말산업유성지원(용자)	동물권행동 카라	075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증액	가축사체처리지원	동물권행동 카라	076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유지	가축백신지원	동물권행동 카라	077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증액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동물권행동 카라	078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증액	가축방역대응지원	동물권행동 카라	079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감액	살처분 보상금	동물권행동 카라	080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유지 감액	원유소비활성화	동물권행동 카라	081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유지	축사시설현대화	동물권행동 카라	08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	감액	축산물수급관리	동물권행동 카라	083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유지	반려동물산업육성	동물권행동 카라	084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증액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지원	동물권행동 카라	085
해양수산부	감액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친환경선박 보급촉진	기후솔루션	086

말 복지 전무한 말산업육성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발전기금,
말산업육성지원 (3733-315)/말산업육성지원(융자) (3733-321)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말산업육성지원	21,677	19,725	19,725	21,060	16,482
·보조	21,437	19,605	19,605	19,824	15,383
·융자	240	120	120	1,236	1,099

- 사업내용: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 말산업 저변확대, △ 말산업 기반 조성, △ 말산업 경쟁력 강화, △ 말산업 역량강화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문제점

- 승마산업 규모, 승마시설, 승마산업 일자리는 2017년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말 사육두수 및 승마 산업 사업체는 유지된 상황. 생산되는 말의 생산 두수를 관리하고 그 수를 점차 줄여가야 함.

(단위: 백만 원)

	2022				2023('23.7월말)						2024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994	21,994	21,677 [18,531]	317	19,725	19,725	19,725	18,817 [8,146]	19,725	18,817 [8,146]	16,482
·말산업 저변확대	10,195	9,585	9,585 [8,310]	-	9,325	9,325	9,325	8,786 [4,554]	9,325	8,786 [4,554]	7,725
·말산업 기반조성	4,854	5,890	5,650 [4,509]	240	4,420	4,420	4,420	4,069 [979]	4,420	4,069 [979]	4,219
·말산업 경쟁력강화	1,024	1,195	1,153 [1,065]	42	1,150	1,150	1,150	1,132 [504]	1,150	1,132 [504]	1,078
·말산업 역량강화 지원	5,921	5,324	5,290 [4,646]	34	4,830	4,830	4,830	4,830 [2,108]	4,830	4,830 [2,108]	3,460

- 전체 16,482백만원 예산 중 경주퇴역마 활용지원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말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1,078백만원 배치돼 전체 말산업예산의 약 6.54%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경주퇴역마에 대한 인도적 고려가 전무함.

■ 의견 : 72백만원 증액

- 퇴역경주마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기반한 활용 측면보다 퇴역경주마 보호시설 등과 같은 '말 복지' 향상을 위한 재활 지원과 보호 예산의 추가 편성을 요구함.

■ 담당 단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02-3482-0999)

살처분된 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축사체처리지원 (3940-341)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가축사체처리 지원	8,355	9,769	-	2,930	2,930

- 사업내용: 매몰지 환경관리 강화 등을 목적으로 △ 가축사체처리지원,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문제점

- 수년 전 매몰됐던 가축 사체가 폭우 등으로 드러나는 경우 다수 발생하면서 침출수 우려도 큼. 매몰지 발굴 및 소멸율은 지속적으로 관리 필요.
-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처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렌더링 과정 모니터링 부실, 살처분 가축 불법 매립 의혹 등 여러 문제점 지적됨.
- 지난 3년간 부처 평균 집행율은 88.7%인데 반해 보조기관의 실집행률은 20%대로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장비 확대 (고정식 렌더링 기계 설치 지원), 매몰지 관리 소멸 절차 및 방법 구체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확보 필요.

■ 의견 : 증액

- 세부사업의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렌더링 과정 모니터링, 살처분 가축 불법 매립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 추가 확보 필요.

■ 담당 단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02-3482-0999)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책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축백신지원 (3940-342)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가축백신지원	49,810	49,917	49,917	49,535	49,535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47,900 [42,160]	48,198	48,198	48,198	48,198
말 예방백신 등 지원	1,910 [1,910]	1,719	1,719	1,337	1,337

- 사업내용: 구제역 발생 및 확산 방지, 체계적인 말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예방백신 및 전염병 모니터링 지원 목적으로 △ 구제역 예방백신 등 지원, △ 말 예방백신 등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문제점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의 보조금 지원 비율은 35~100%인데 비해 말 예방백신 등 보조금 지원의 지원 비율은 70%로 말 예방백신 등 지원에 대한 적절한 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검토 필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비용의지원) 제3항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구제역 발생의 원인이 비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않은 백신 배포 행위와 유통 문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제시되고 있음.¹⁾

■ 의견 : 유지

- 세부사업의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지원 사업 내 접종 시술비에 대한 사업비 증액 필요.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도입 검토 및 예산 확보 필요.
- 말 예방백신 지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 증가 필요.

■ 담당 단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02-3482-0999)

1) [구제역, 농가를 덮치다] “이원화된 백신 접종 시스템·유통 문제 개선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2023. 05. 19.)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89>

국민 인식 못 따라가는 동물복지농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6240-302)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1,070	980	980	980	802

- 사업내용 :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규 인증신청 농가 및 기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소비자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물의 홍보 등을 지원함.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는 '20년~'22년 1,095백만원으로 동일하나, '23년 980만원, '24년 802만원으로 점차 감소세임.

■ 문제점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추이를 보면, 산란계와 육계, 젓소, 한우는 인증 농장 수가 점차 증가세임. 반면 염소, 오리의 경우 각각 '15년, '16년 인증기준 마련됐으나, 실제 인증받은 농가는 한 곳도 없음.

<표 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실적

(단위: 개소)

연도	2020	2021	2022	2023
산란계	168	190	223	233
육계	97	131	145	148
양돈	19	16	18	20
젓소	13	26	31	31
한우	-	1	6	6
누계	297	364	423	438

-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는 인증농장의 생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그 밖의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24년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축소됨.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23년 3월 16일 공개한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70.7%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91.6%가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구매를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함. 반면 양돈농가의 경우 동물복지농장 전환에 있어 어려움으로 초기비용 부담(75.3%), 판매처 확보 어려움(32.1%) 등을 들어 판로 확보와 함께 농가 시설전환 지원 필요.

■ 의견 : 대폭 증액, 장기적인 예산 투입 필요

- 동물복지와 동물권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과 요구에 맞춰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폭적 지원, 동물복지인증 컨설팅 비용 및 홍보,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예산 전년수준 유지 필요.

■ 담당 단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02-3482-0999)

농장동물 전염병 최선의 대응은 ‘예방’!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축방역대응지원(3940-335)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가축방역대응지원	111,614	128,741	99,463	97,789	96,433
.긴급방역비	3,983 [3,983]	4,000	4,000		4,000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45[45]	61	61		53
.수의사 연수교육 등	2,010 [1,748]	3,458	3,458		-
.예방약품 등 지원	81,179 [75,177]	77,124	77,124		78,630
.방역장비 등 지원	13,934 [5,891]	9,785	9,785		8,555
.소독자원 지원	10,303 [10,299]	5,035	5,035		5,195

- 사업내용 :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 긴급방역비, △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 예방약품 등 지원, △ 방역장비 등 지원, △ 소독자원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문제점

- 2024년도 가축방역대응지원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예방약품 등 지원'으로 총 예산의 약 80%를 차지함. 구제역과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살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시기에 따라 정확한 접종이 요구됨. 그러나 2023년 5월 국내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며 방역 소홀이 문제로 지적됨.
-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도입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응답자 277명 중 83.7%가 살처분 작업의 노동 강도가 힘들거나 매우 힘든 수준이라 답했으며, 살처분 이후 작업과 관련된 정신적, 육체적 치료나 상담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0.2%였음.²⁾ 수천만 마리 동물이 살처분 당하는 현장에서 함께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심리 치료비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현재 20명분에 불과함.

■ 의견 : 3,030백만 원 증액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동물과 농가, 살처분 참여자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년 수준 예산 편성 필요

■ 담당 단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02-3482-0999)

2)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2월 26일,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살처분은 정답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살처분 보상금 (3940-337)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살처분보상금	74,389	50,215	50,215	100,215	100,215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주 목적으로 △ 살처분 보상금, △ 기립불능 가축 폐기 보상금, △ 폐업지원금 등으로 이뤄져 있음.

■ 문제점

-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살처분 제도는 살처분 결정 및 집 행상의 문제, 살처분 참여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문제, 방역을 위한 예산 및 자원 배분 등에 있어서의 왜곡 발생, 농촌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이 문제로 제기됨.³⁾ 무엇보다 농가와 농장동물이 입는 피해가 심각함.
- 정밀한 역학조사 없이 과도하게 추진된 예방적 살처분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2018년 국내 ASF 발생 초기 김포, 파주, 연천의 행정구역 내 모든 돼지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하였고 2020~2021년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km로 광범위하게 고수하며 지급된 보상금은 예산액 기준 2020년 75,000백만 원, 2021년 59,930백만 원으로 상당하나 2022년 55,795백만 원, 2023년 50,215백만 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반면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액돼 살처분 보상금의 연도별 실적행 내역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공장식 축산 시스템 아래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이나 가축전염병 발생 시 대규모 살처분 한계는 여전히 정부의 전향적이고 장기적인 관련 정책 마련 필요.

■ 의견 :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 필요

-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적·과학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과도한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은 줄여나가야 할 것.

■ 담당 단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02-3482-0999)

3) 함태성, 2019,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 살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2(1), 535-539

국제경쟁력 확보하려면 원유소비 대신 비건소비로 전환해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FTA기금, 원유소비활성화 (3730-310)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원유소비 활성화	9,000	9,000	9,000	9,000	7,000

- 사업내용 : 국산 원유를 사용한 치즈 등 유제품 생산 활성화로 FTA확대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원유 수급 안정, 국산 유제품 생산 사업의 육성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100% 용자 지원 사업

■ 문제점

- 1인당 음용유(우유) 소비량은 2001년 36.6kg에서 2021년 31.9kg으로 감소한 반면 치즈, 발효유, 버터 등 가공 유제품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63.9kg에서 86.1kg으로 증가함. 증가하는 가공 유제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유제품 수입량은 2001년 65만톤에서 2021년 251만톤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하였는데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치즈나 버터 등 유가공품 생산에 불리한 국내 낙농업 특징에 있음.
- 이에 정부가 올해 1월 치즈와 버터 등 유담백 함량이 높은 저지(Jersey)소 수정란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국내산 원유를 이용한 유가공품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함. 해외 유제품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래종을 유입, 사육한다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안인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채식 인구는 약 250만 명(21년 기준)으로 비건 식품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대체유제품 시장이 큰 EU와의 FTA 체결로 경쟁력에 도전받는 가운데 원유소비활성화 사업 자체에 대한 재고와 추세에 따른 전략 변화가 불가피함.4)
- 사업 평가 면에서 202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미흡(78.4)으로 나오면서 예산의 10% 감액 결과가 제시되었다는 것은 사업 집행률뿐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한 사업이라는 평가로 볼 수 있음. 그간 90~100억 원에 달하는 나라 재정이 투입된 본 사업 자체의 전환이 요구됨.

■ 의견 : 유지 또는 감액

- 70억 원 예산 유지하면서 대체유제품 생산 목적으로 제품 개발 및 R&D 비용에 포션을 늘리거나 기존 원유소비활성화 사업을 전면 재고하면서 공격적 감액이 요구됨.

■ 담당 단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02-3482-0999)

4) 대체유제품 선두국가 독일의 경우 '21년 기준 902백만 달러로 한화 1조원 수준의 규모. "유럽 비건 시장의 현황 및 한국 식품 진출전략",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파리지사, 2022. 8

동물복지농장에 시설지원 비율 50% 이상 편성하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FTA기금, 축사시설현대화 (3760-332, 346)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축사시설현대화	170,949	148,525	148,525	165,173	139,643
민간경상보조	6,246	6,981	6,981	9,787	6,716
자치단체자본보조	51,136	42,817	42,817	34,957	32,932
기타민간융자금	113,567	98,727	98,727	120,429	99,995

- 사업내용: △ 축사시설 현대화,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 젓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사업을 주축으로 하며 국가보조 30~100%, 융자 30~80% 지원하는 사업.

■ 문제점

- 축사시설 개선 사업은 대체로 사료 자동 급이기, 음수 관리기 등 “생산성 향상” 중심의 장비 보급이라는 점에서 악취 저감, 질병 예방 등과 연계가 부족함.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악취의 주된 원인 통계에서 ‘축사’가 전체의 55%를 차지함.(22년 기준) 또한 ICT 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현실에 고도의 기술을 지닌 노하우와 지식을 전수할 컨설팅 인력풀이 협소하고 컨설팅 자체도 장비 소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축산업에도 동물복지 강화를 표명함에도 공장식 관행 축산 형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관행 축산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설 지원이 본 사업을 통해 주되게 이루어짐.
- 정부는 <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동물복지기준에 따른 사양방식, 축사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22년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로 511억 원 이상, 민간융자금으로 1천 13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으나 동물복지 측면의 개선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등 그 결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음.
- 주요 외부지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감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이 안전, 환경,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방식을 전면 전환해야 함.

■ 의견 : 유지

- 내역사업 별 지원 대상 농장에서 동물복지농장 비중을 늘리고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축산 농가들의 동물복지농장 전환율을 높이는 유인책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담당 단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02-3482-0999)

무용론 고조되는 정부의 우유급식 대폭 감액하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실, 축산발전기금, 축산물수급관리 (3731-303)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축산물수급관리(보조)	103,774	93,920	96,043	117,147	101,949

- 사업내용: 축산발전기금 사업으로 △ 축산물수급관리(보조),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 낙농통계관리시스템운영, △ 학교우유급식, △ 계란유통센터시설현대화, △ 비육용암소시장육성, △ 가축사육제한보상금지원 등 지원

■ 문제점

- 우유급식 학생수는 지난 2012년 3,538천명에서 2022년 1,541천명으로 2배 이상 감소하였고, 학교별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82.2%(`12)에서 38.3%(`22), 중학교는 34.3%(`12)에서 20.3%(`22), 고등학교는 23.6%(`12)에서 17.4%(`22)로 감소했음.⁵⁾
- 내역사업 별로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학교 우유급식 사업의 포션이 가장 큼.

<표> 축산물수급관리 내역사업

(단위: 백만 원, %)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안)	지원 비율(%)
낙농통계관리시스템	보조	낙농진흥회	600	100%
축산물수급안정(경상)	보조	낙농진흥회	43,257	100%
	보조	농협경제지주	200	100%
축산물수급안정(위탁)	위탁	농협, aT	200	100%
생계 및 소득안정	보조	지자체	1,100	70%
학교우유급식	보조	지자체	46,508	60%
계란유통센터 시설현대화	보조	지자체, 농업법인	4,456	30~100%
비육용암소시장육성	보조	지자체	1,200	30%
가축사육제한보상금지원금	보조	지자체	4,628	50%

- 학교 현장에서 학생수 감소와 더불어 우유를 마시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교사, 영양사 등이 본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여전히 강제적으로 우유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우유 생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젖소의 반복적인 강제 수정, 임신, 출산 등 비 인도적 방식에 대한 사회 반감이 고조되고 있고, 아몬드, 귀리 등을 이용한 대체식품 소비가 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정부의 우유급식 제도와 관련 사업을 재고해야 함.

■ 의견 : 감액

- 본 사업의 학교우유급식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함은 물론 정부의 학교우유급식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촉구함.

■ 담당 단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02-3482-0999)

5)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

예의주시해야 할 반려동물 인프라의 시작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농어촌구조계선특별회계,
반려동물산업육성 (3741-344)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반려동물산업육성	-	400	-	5,250	3,810

- 사업내용: 2023년 신설된 사업으로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 반려동물산업육성,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운영, △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함.

■ 문제점

- 반려동물산업육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의 경우 증가세인 맹견 사육인구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으로 신규 도입되는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제도 안착을 위한 사업임. 맹견의 위험성 및 물림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하는 제도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목적의 적극적인 정부발 홍보가 필요함.
- 도입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및 동물보건인력 자격 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맹견관리, 동물의료체계 등 반려동물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야 할 것.

■ 의견 : 유지

■ 담당 단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02-3482-0999)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로 유기·유실견 발생 방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지원 (3741-333)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지원	11,020	12,328	12,328	12,742	12,742

- 사업내용: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한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유실·유기동물 보호 관리 제고,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동물복지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전반의 사회 문화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 문제점

	2022					2023('23.7월말)							2024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 기능별 분류 *(합계)	11,020	11,020	9,592 (8,162)	-	1,428	12,328	12,328	6,362 (1,117)	12,328	6,362 (4,467)	-	-	12,742
.반려동물문화 국민인 식개선	2,711	2,711	2,711 (2,706)	-	-	3,318	3,318	1,117 (1,117)	3,318	1,117 (1,117)	-	-	2,366
.동물보호관리 시설환 경개선	1,800	1,800	372 (163)	-	1,428	1,800	1,800	144(-)	1,800	144(-)	-	-	2,160
.유실·유기동물관리수준개선 지원	1,589	1,589	1,589 [1,257]	-	-	1,650	1,650	1,155 (764)	1,650	1,155 (764)	-	-	1,650
.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	3,420	3,420	3,420 [3,135]	-	-	3,820	3,820	2,674 (2,035)	3,820	2,674 (2,035)	-	-	4,742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	1,500	1,500	1,500 [943]	-	-	1,560	1,560	1,092 (551)	1,560	1,092 (551)	-	-	1,404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	-	-	-	-	-	180	180	180(-)	180	180(-)	-	-	420

- 전년도에 비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고양이 군집에 대한 고강도의 TNR 시행 필요성을 반영하여 922백만 원 증액된 반면,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 지원'은 156백만 원 감액되었음. 소위 마당개들이 제대로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자견을 번식할 경우 유기·유실견 내지 들개화 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큼.
- '반려동물문화 국민인식개선'의 경우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부문에서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예산을 감액했으나, 이는 지자체 간 동물복지인식 및 동물관련 업무 수행능력의 편차가 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를 고려해, 정책적 노력 강화와 함께 교육 예산 증액을 통한 교육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필요함.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여 변화되는 동물복지 정책 및 인식 개선에 발맞출 필요 있음.

■ 의견 : 1,108백만 원 증액

- 감액된 사업들에 대한 전년도 수준 예산 편성 필요

■ 담당 단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02-3482-0999)

제해사기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상충되는 LNG 항목 제외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 현황

- 선박에서 사용되는 기존 중유·경유 등의 에너지를 전기·LNG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감축 노력을 유도
- 사업내용: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6133-328), 친환경선박 보급촉진(6332-315)

■ 문제점

- 국제해사기구(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7. 3.~7. 7, 런던)'에서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함.
-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총 배출량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상향하여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를,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순 배출량 '0'(Net-Zero)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제해사기구는 화석연료로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달성할 수 없음을 명시함.
"Research and development will be crucial, as the targets agreed in the 2023 IMO GHG Strategy will not be met using fossil fuels"⁶⁾
- 또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연료의 온실가스의 전생애 주기를 고려해야 함.
"The levels of ambition and indicative checkpoint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well-to-wake GHG emissions of marine fuels"⁷⁾
- 해수부가 지원한 보고서에 따르면, LNG는 화석연료이며, 전생애주기를 고려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는 불분명함.⁸⁾

■ 의견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6133-328)과 친환경선박 보급촉진(6332-315) 내 LNG 관련 예산 삭감

- 해당 사업에 LNG 관련 사업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LNG 항목 제외
- 그린 수소와 그린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예산의 증액

■ 담당 단체 : 기후솔루션 (02-6013-0137)

6) IMO(2023), "[2023 IMO Strategy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7) IMO(2023), "[Guidelines on life cycle GHG intensity of marine fuels \(LCA Guidelines\)](#)"

8)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해사안전연구, 탈탄소화 국제해사 동향(2023.03. Vol. 05) (해양수산부 지원)

국토교통위원회

부서	의견	사업	작성자	쪽
국토교통부 교통개선특별회계	삭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088
국토교통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복원	녹색건축물보급활성화지원 등	플랜1.5	089
국토교통부	증액	PSO 보상	공공운수노조	091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증액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공공운수노조	092
국토교통부 교통특별회계	증액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공공운수노조	093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	벽지노선지원, 도시형교통모델(지역자율)	공공운수노조	094
국토교통부 교통특별기금	증액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95
국토교통부 R&D회계	증액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97
국토교통부	증액	주거급여지원	빈곤사회연대	098
국토교통부	증액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함께살기연구소	099

추가 예산 및 개발이 불가피한 사업 예산 전액 삭감으로 자연과 국민 안전 도모

국토교통부, 교통개선특별회계,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3538-302)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정부안(B)	(B-A)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 (불용)	7,100	6,390	6,390	△710	△10

- 사업내용: 흑산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으로 교통복지 증진, 관광수요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영토 수호·해양자원 관리에 기여

■ 문제점

- 지방공항 14개소 중 11개소가 적자인 상황에서 흑산공항 등 지방공항 추가 건설은 불필요함.
- 현재 국내 항공사에서 더 이상 50인승 항공기 운영을 하지 않음에 따라, 공항 계획이 기존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확대됨. 이에 따라 소형공항 사업이 아니게 되어 추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조사 절차를 추가 진행이 필요하여 예산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임.
- 80인승 항공기로 변경되어도 시계운항을 해야하는 등 탑승객 및 주민 안전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추가 어떠한 대안 마련도 없음.
- 활주로 너비 증가 및 80인승 항공기로 확대되어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민피해 또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의견 : 전액 삭감

- 흑산공항 사업 백지화 및 예산 전액 삭감

■ 담당 단체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02-961-6547)

뒤로 가는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 예산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녹색건축물보급활성화지원(6133),
 국토교통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그린리모델링활성화(6133-301),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육성(6132-310)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계획	
		계획액	추경	요구안	정부안
녹색건축물보급활성화지원(6133) (A)	4,752	4,604	-	4,483	-
-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6133-303)	598	605	-	484	-
-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 (6133-312)	4,154	3,999	-	3,999	-
특별회계: 그린리모델링활성화 (6133-301) (B)	7,596	9,084	-	8,600	6,772
기후대응기금: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 (6132-310) (C)	-	-	-	3,745	3,745
총계(A+B+C)	12,348	13,688	-	-	10,517

- 사업내용: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 총량제의 시행과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관련 제도 운영비 지원 사업을 의미하며, 그린리모델링활성화 사업은 기존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의미함.

■ 문제점

- 건물분야 탄소배출은 5,210만톤(전체 7%)로 '30년까지 32.8% 감축하겠다는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절실한 상황임.
-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서도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이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핵심정책으로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였음.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해당 예산을 확대하기는커녕 동일하게 요구하였으며,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옮겨서 6.4% 축소 편성함.
- 이외에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하에 편성된 그린리모델링활성화(6133-301) 사업의 경우 '23년 약 90.8억원 편성되었던 예산을 67.7억원으로 '23년 대비 23.1% 삭감함.
- 그 결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을 활성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 지원 관련 전체 예산은 약 105억원 규모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이전보다 확대되어 마땅한 상황에서 '23년 대비 약 32억원 가량 후퇴함(23.2% 삭감).
- 건물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난방 퇴출 및 재생에너지 난방 확대를 위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며, 신규 건물과 관련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확대 시행은 물론이고 모든 기존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계획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

물의 임대·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 진단서비스, 그린 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단계적인 추진계획과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예산 계획의 후퇴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큼.

■ **의견 : 제로에너지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관련 삭감된 예산의 복원 및 확대**

-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 예산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예산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확대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담당 단체 : 플랜 1.5 (02-735-3565)**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 국비 보조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PSO보상 (2736-301)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PSO보상	384,474	397,896	-	361,240	361,240

■ 문제점

-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며, 코로나 충격과 코로나 충격 이후에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원가 이하로 요금을 유지하며 당기손실이 증가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가 가중되고 있음
- 정부의 정책과 법령에 따라 '84년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승차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이후 국가유공자('85년), 장애인('91년) 등으로 확대되었음.
- * 법 시행 초기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9%에 불과해서 운영기관의 부담을 주지 않았으나 '20년 기준 15.7%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무임승차 인원이 늘면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승차 누적 손실액이 25조를 넘어가고 있으며 이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구조적 재정적자로 이어지고 있음
- * 노인 인구 비중 : '80년 5.9% ⇨ '20년 15.7% ⇨ '25년 20.3% ⇨ '30년 25.0%.
- 이로 인해 도시철도 개통 후 30년 이상이 경과(서울, 부산 등)된 노후 전동차와 노후 시설물 개량을 위해 막대한 재투자 비용을 필요함에도 제때 투자를 하지 못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의견 :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액 국고 지원

- 현재 철도공사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국고 지원 대상을 도시철도로 확대.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 (02-497-7888, kptu2011@gmail.com)

도시철도 노후 시설·차량 개선 지원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3031-332),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3031-351)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도시철도노후 시설개선지원	53,402	74,854	-	82,339	58,423
도시철도노후 차량개선지원	79,538	65,920	-	58,100	58,100

■ 문제점

- 무임수송 손실, 원가에 못미치는 운임 등으로 누적된 적자와 코로나19로 심각한 재정위기 봉착 → '20년까지 누적 적자 16조 684억 원.
- 최근 4년간 노후시설 등 투자필요액은 1조 3,865억 원이었으나 투자재원 확보 실패로 6,200억 원(약 44% 수준)만 투자. 그 중 국비는 1,380억 원으로 총소요금액의 10% 수준임.
- 시설물 성능평가 결과 위험수준인 C·D등급 비율 증가 추세('18년 평가기준).
- (1~4호선) 73.8%, (5~8호선) 62.2% → 현시점 성능 재평가시 시설 노후도 더욱 심화.
- 향후 1조 6,942억 원의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나 투자비 확보 불가로 개선물량 축소 및 사용기간 억지연장 ⇨ 시민 안전위협.

■ 의견 : 국비지원을 상향, 지원 대상 확대

-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사업 : 국비지원을 30% → 50% 상향, 지원 대상 확대. 국민 안전에 직결된 궤도·건축·구조물 분야 추가.
-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사업 : 국비지원을 25%/30% → 40% 상향.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 (02-497-7888, kptu2011@gmail.com)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 확대 위해 예산 대폭 확대해야

국토교통부, 교통특별회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4931-354)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	-	-	57,321	51,641

- 2024년 신설 사업

■ 문제점

- 정부는 기존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개선하여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 K-패스)을 2024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임.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출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임.

구분	일반	청년	저소득
적립률	20%	30%	53.3%
1회당 적립액*	300원	450원	800원
월 최대 적립액(60회)	1만8000원	2만7000원	4만8000원

*요금 1,500원 기준

- 이용 인원을 180만 명으로 추정하고 서울시는 40%, 그 외 지자체는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516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경제활동과 이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교통으로서 더욱 이용이 확대되어야 함.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와 고물가 대응을 위해 여러 국가와 대도시들에서 교통요금을 파격적으로 할인 및 무상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 지원에 인색하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20% 수준의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낮음.
- 또한 이미 주요 지자체가 대중교통 요금을 20% 이상 인상하였고 이후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 고물가 상황에서 교통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동차 이용자의 수요 전환을 위해서는 좀 더 적용 대상의 범위와 폭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 의견 : 적립률과 이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1,000억 원 수준의 증액 요구

- 적립률을 평균 2배 상향하면, 50,944백만 원(전체 예산 중 운영비 제외) 예산 증액 필요
- 이용대상 또한 180만 명에서 2배 수준으로 확대하면 추가로 500억 원 예산 증액 필요
- 승객 증가에 따른 대책(필요 시설 증가 및 인력 증원 등) 및 지자체 예산 지원을 명시화하여 운영 기관에 손실로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 보완 필요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 (02-497-7888, kptu2011@gmail.com)

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예산 대폭 확대해야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벽지노선지원(4539-601), 도시형교통모델(지역자율)(4546-301)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벽지노선 지원	32,516	33,680	-	37,537	37,537
도시형교통모델(지역자율)	22,850	28,920	-	36,036	32,799

■ 문제점

- 매년 실시하는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현황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사각 및 취약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 코로나19 이후로 버스수요 감소에 따른 버스운행 감축이 심각해지면서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대중교통이 더욱 열악해졌음. 코로나19는 사라졌지만 한 번 타격을 입은 버스운행체계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지역의 버스예산인 벽지노선 지원과 도시형교통모델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19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예산 규모를 보이고 있음.
-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자동차 이용 증가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버스교통의 복원 및 확대가 시급함.
- 중앙정부는 대중교통 사각 및 취약지역 개선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 유지에 급급하고 있음.

■ 의견 : 국비지원을 상향 및 배정 예산 확대

- 벽지노선 지원 사업 : 국비지원을 30% → 50% 상향, 지원 예산 확대
- 도시형교통모델(지역자율) : 국비지원율은 50% 유지하더라도 지원 예산 확대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 (02-497-7888, kptu2011@gmail.com)

유예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이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108,743	224,560	-	302,105	231,267

- 사업내용: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이용차별 철폐를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문제점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 및 운행범위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이하 ‘교통약자법’). 이에 따라 24시 광역운행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2023년 7월 19일부터 발효, 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 그러나 (사)전국장애인동권연대가 2023년 7월 19일 실시한 9)‘교통약자법 이행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차에서 24시 광역운행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힘.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이에 대한 주된 사유는 차량 운전원 및 인건비 부족에 따라 관내 이동 수요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유.

<표 1> 지역별 차량 1대당 운전원 수 및 인건비 규모 (2022년 기준)

지역	차량 1대당 운전원 수	1인당 운전원 인건비	전체 예산 중 운전원 인건비 비율
평균	1.16	3401만원	0.56
서울특별시	1.17	4103만원	0.46
인천광역시	1.14	4553만원	0.42
광주광역시	1.06	-	-
대구광역시	1.04	4956만원	0.35
대전광역시	1.21	4852만원	0.61
세종특별자치시	1.24	3302만원	0.31
울산광역시	1	5132만원	0.43
부산광역시	0.96	4213만원	0.41
제주특별자치도	1.26	5045만원	0.5
강원도	1.13	3628만원	0.6
경기도	1.11	3379만원	0.44
경상남도	1.15	3615만원	0.69
경상북도	0.98	3159만원	0.62
전라남도	1.16	2998만원	0.53
전라북도	1.03	3322만원	0.6
충청남도	1.01	3811만원	0.65
충청북도	1.05	3269만원	0.46

- 현재 전국 평균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운전원 수는 1.16명으로, 이는 차량 운전원의 범

9)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되는 2023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총 38개 지역 86명이 참여한 이용자 모니터링. (사)전국장애인동권연대는 이와 함께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24시 광역운행 여부 및 미이행 사유를 별도로 요청하여 자료를 생산함.

정휴무일을 고려할 때 이미 확보된 특별교통수단도 매일 운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개념적으로 일일 운행시간을 살펴보면 차량 1대당 일 평균 8시간만 운행하고 나머지 16시간은 차고지에서 대기. 이로 인해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0년 실시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모니터링에 따르면 평균 대기시간은 약 50분. (사)전국장애인동권연대에서 2022년 실시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 시간은 다음과 같음.

<표 2> 지역별 평균 대기시간 (2022년 기준)

지역	신청-탑승 평균 대기시간	시간대별 평균 중 최대 대기시간	자료 미수집 지자체
평균	27.7	48.6	-
서울특별시	36	45	-
인천광역시	23.6	39	-
광주광역시	30	45	-
대구광역시	23	40	-
대전광역시	27	39	-
세종특별자치시			X
울산광역시	22.5	23	-
부산광역시			X
제주특별자치도	26	38	-
강원도	18	34	7/18
경기도	33	46	18/31
경상남도	39	62	12/18
경상북도	26	64	13/23
전라남도	32	67	5/22
전라북도	21	24	8/14
충청남도	27	45	8/15
충청북도	17	19	5/11

-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을 16시간으로 상향하기 위해 차량 1대당 8시간 근무 운전원 2인 편성을 요구하고 있음. 차량 1대당 8시간 근무 운전원 2인 확보 시, 현재 대비 2배 이상의 일일 가동률 향상이 가능
-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운영비)를 편성할 때 기획재정부 반대에 부딪혀 차량 운전원 인건비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특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운영비 국고 지원 항목을 삽입할 때 인건비 관련 조항은 제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차량 유지 및 관리비만 근거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 교통약자법 개정 취지 역행.

■ 의견 : 증액

- (1) 8시간 근무 차량운전원 2인 고용(휴무시간 포함)
- (2)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

<input type="checkbox"/>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운영비 지원 예산: 지역 간 이용차별 철폐를 위한 운영비 <input type="radio"/> 요구 예산 : 335,000백만 원 ▶ 8시간 근무 차량운전원 2인의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 지원: 335,000백만 원 - 100백만 원(차량운전원 인건비, 유지비, 유류비) × 5,000대 × 보조율 67%

■ 담당 단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2-739-1420)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장애인 이동권 공약, 또다시 후퇴하나

국토교통부, R&D회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4158-318)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R&D)	-	4,000	-	886	886

- 사업내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좌석형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의무도입 이행을 위한 관련 모델 개발

■ 문제점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 됨. 단, 좌석형 저상버스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시 필요한 안전장치 개발이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2027년 1월까지 의무 도입이 유예된 상황임.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안전장치가 설비된 좌석형 저상버스 개발을 위해 2022년도부터 R&D사업을 실시 중이었음. 그러나 돌연 과학기술부 및 기획재정부의 삭감안에 따라 당초 필요한 60억원 대비, 14.7% 정도 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
- 이로 인해 시행령상 예정되어있는 2027년 의무도입의 연기도 불가피한 상황.

■ 의견 : 2024년 정부안 예산 대비 5,264백만 원 증액

- 당초 계획되어 있던 6,150백원이 편성되어야 예정대로 R&D를 완료, 의무도입 가능

■ 담당 단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2-739-1420)

주거유지 어려면 힘들지도 모를 예산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주거급여지원(1034-302)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주거급여지원	2,252,628	2,572,266	2,572,266	2,742,436	2,742,436

- 사업내용: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구)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자가가구)

■ 문제점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유일하게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히 폐지되고 근로능력평가와 분리해 운영하는 개별급여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 하지만 여전히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48%로 낮고 최대 보장수준인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간의 격차가 있음.
- 정부는 2020년 8월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서 선정기준을 빈곤선인 5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계획했으나, 2024년도에 2%포인트 부족한 상황임. 더불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빈곤선일 뿐 주거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거빈곤가구를 포괄하는 선정기준의 개선 및 확대가 필요함.
- 현행 기준임대료는 가구원 수와 지역별로 최대금액을 달리하고 있음. 한국도시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¹⁰⁾ 2024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1급지와 3급지에서 실거레가와 10만원 내외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2022년 기초법공동행동의 수급가구 가계부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5가구 중 관리비가 부과되는 가구 21가구, 최소 8,850원에서 최대 350,005원을 자부담하고 있었음. 주거급여에 관리비 포함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최종에서 제외되었음.
- 마지막으로 주거급여는 법에서 '주거 상향'을 목표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임차료 보조에 그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정책과의 적극적인 연계 운영이 필요함.

■ 의견 : 제도개선을 위한 증액

- 관리비 등 주거유지에 필수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실제 임대료 전액을 포괄하는 수준의 기준 임대료를 책정하여 예산을 증액해야 함.

■ 담당 단체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 (02-778-4017)

10) 기초법공동행동, 20230905, 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방치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1034-311)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2,149	44,200	10,351	10,351	△33,849	△76.5

- 본 사업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22.8월부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24년 12월까지 지급)하는 한시사업임.

■ 문제점

- 본 사업은 2023년 8월로 신규 모집이 종료되었고, 2024년 예산은 신규모집 없이 기존 지급인원을 위한 잔여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전년도 기준 76%가 삭감되었음.
- 본 사업은 초기 시행 당시부터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실질행률이 2022년 14.2%, 2023년 16.4%로 매우 낮아 예산이 꾸준히 삭감되었음.
- 그러나 본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지나치게 협소한 대상 요건으로 비판을 받았음.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함. 게다가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서 거주해야 함. 그러나 서울시내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천만원 기준 69만원(아시아경제, “서울 원룸 월세 평균 69만원…1년 만에 24.3%↑”, 2023/09/14)이며, 대학가의 경우 더 비싼 곳들도 허다함. 결국 본 사업은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에 저조한 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 코로나시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취업난이 여전하고, 심지어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일상에서 가장 많은 비용부담은 주거비임. 주거부담은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와도 연관됨. 윤석열 정부가 주요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공공분양은 사실상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현실에서는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의견 : 예산 증액

- 대상자를 중위소득 150%까지 높이고 주거비 요건 완화, 지원대상 기간 연장 등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함.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보건복지위원회

부서	의견	사업	작성자	쪽
보건복지부	증액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공운수노조	102
보건복지부	증액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공공운수노조	103
보건복지부	증액	국민연금기금 전출(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공공운수노조	10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증액 신설	국민연금기금 전출(출산크레딧급여)	공공운수노조	105
보건복지부	증액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공공운수노조	106
보건복지부	복원 증액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공공운수노조	107
보건복지부	증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공공운수노조	108
보건복지부	증액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보건의료단체연합	109
보건복지부	증액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보건의료단체연합	110
보건복지부	삭감	비대면 진료기술개발(R&D),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R&D),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	보건의료단체연합	111
보건복지부	증액	생계급여	빈곤사회연대	112
보건복지부	증액	해산장제급여	빈곤사회연대	113
보건복지부	증액	의료급여	빈곤사회연대	114
보건복지부	증액	긴급복지	빈곤사회연대	115
보건복지부	증액	자활사업	빈곤사회연대	116
보건복지부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17
보건복지부 균형특별기금	증액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20
보건복지부	증액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22

보건복지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	노인요양시설 확충	참여연대	124
보건복지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참여연대	125
보건복지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 이관	어린이집 확충, 기능보강	참여연대	126
보건복지부	제도 검토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참여연대	127
보건복지부	증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함께살기연구소	128
보건복지부	증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체계구축	함께살기연구소	129
보건복지부	유지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함께살기연구소	130
보건복지부	삭감	해외환자 유치지원	함께살기연구소	131
보건복지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함께살기연구소	133

국제 기준 상병수당 신속 도입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4931-309)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8,351	20,433		17,115	14,605

■ 문제점

- 한국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나라임. 현 정부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음.
- 2022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나, 보장 수준이 최저임금의 60%로 낮고 보장기간도 최대 4개월로 너무 짧아 국제 최저 기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지속되었음. 또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기에는 보상수준이 너무 낮아 제도적으로 신청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 예산 집행률도 낮음.
- 2024년부터는 3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 의료이용일수모형을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전환하고 상병수당 사업비 예산도 29.5% 삭감되었음.

<ILO 상병급여협약(제130호) 상병급여권고(제134호)와 3단계 시범사업 모델 비교>

항목	ILO 기준	3단계 시범사업 모델		
		모형A	모형B	모형C
대기기간	- (130호) 개별국가에 위임 - (134호) 대기기간 폐지	7일	14일	7일
급여기간	- (130호) 모든 기간 원칙, 최저 52주 이상 - (134호) 모든 기간	120일	150일	150일
급여수준	- (130호) 이전 소득의 60% 이상 - (134호) 이전 소득의 66.7% 이상	최저임금 60%('24년 일47,565원)		

■ 의견 : 국제 기준에 맞는 시범사업 위해 11,888백만 원 증액

- 급여수준을 최저임금이 아닌 실제 소득의 최소 60% 이상 보장 필요.
- 2023년 상반기 기준 임금근로자 임금총액은 3,937,884원으로 최저임금의 1.9배. 이를 고려하여 상병수당급여 예산을 현 13,051백만 원에서 24,939백만 원으로 118억8천8백만 원 증액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02-497-7888, kptu2011@gmail.com)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2008-206)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13,262	38,214	-	66,202	39,947

- 사업내용 : 지역 납부재개자에 대한 최대 12개월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시행 중

■ 문제점

-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완화* 및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영세자영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함.

*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적용제외자(주로 무소득배우자)까지 포함시 2020년 12월 기준 18~59세 인구의 약 40%에 달하고 있어, 보험료 지원을 통한 적극적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지역 납부재개자에 대한 최대 12개월 지원 사업이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로 국한하고 있음. 사각지대의 가장 많은 부분을 구성하는 적용제외자나 경제적 사유 외 납부예외자 또는 보험료 고지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을 배제하고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 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성실 납부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지원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대상 협소의 문제로 인해 불용 예산 132억 6,100만원이 발생하여 '기초연금지급' 예산*에 이용('22.11.26.)된 바 있음

* 보호보상금의 일부를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자 증가
- 지원제도의 적용대상이 협소한 문제점 이외에도 지원대상 기준소득월액을 납부재개자 평균 인정소득 89.3만원으로 낮게 설정하고, 지원 기간 역시 12개월로 하여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의견 : 지원대상, 지원 대상소득, 지원기간 확대위한 26,255백만 원 증액

-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을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라는 좁은 범위에서 전체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고지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까지 확대

- (지원 기준소득월액 및 지원 기간 확대)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월액 상향(농어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수준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기준), 지원 기간 역시 12개월에서 36개월로 상향.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02-497-7888, kptu2011@gmail.com)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부담 확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전출(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8420-841)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국민연금기금 전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10,000	10,000	-	55,000	10,000

- 사업내용 : 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 문제점

-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거한 공적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관리운영비 대부분을 가입자들이 조성한 '기금전입금'에 의존, 국민연금 가입자 및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100억 원 정액지원으로 국고부담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1988년~1991년까지 국고전액지원이었으나 지원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부터 100억 원만 지원 중임.
- 국민연금 관리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였다면 가입자가 부담한 금액은 기금운용을 통해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했을 것임. 2022년 말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한 관리운영비는 총 7조 8,779억 원에 달하며, 1992년부터 2020년 말까지 가입자가 부담한 7조 8,779억 원의 금액을 기금의 연평균 누적수익률인 5.11%로 운용했다면 2022년 말까지 총 11조 6,771억 원의 기금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었음. 만일 이 가입자 부담금 7조 8,779억 원을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른 기금소진연도인 2055년까지 연평균 누적수익률인 5.11%로 운용한다면 약 67조 원이 되어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임.

■ 의견 : 관리운영비 10% 국고 부담 위한 약 450억 원 증액

- 국가사무로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을 높이며, 후세대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리운영비 국고부담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우선적으로 2023년 관리운영비 5,515억 원의 10% 수준인 550억 원으로 국고부담을 확대하고 점차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02-497-7888, kptu2011@gmail.com)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전출(출산크레딧급여)(8420-842)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국민연금기금 전출(출산크레딧급여)	338	525	-	1,501,114	1,114

- 사업내용 :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로 인해 필요한 재원 국가부담(30%)

■ 문제점

- OECD 국가의 출산 크레딧 중 유일하게 둘째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후진성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며, 지원기간 또한 둘째부터 12개월, 셋째까지 30개월 등 아이 한 명당 4년을 지원하는 스웨덴이나 3년을 지원하는 독일, 2년을 지원하되 아이가 10세에 이르기까지 추가적 지원을 하는 프랑스 등 타국 대비 매우 미흡함.
- 군복무 크레딧 역시 6개월만 지원하며, 지원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100%를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과 달리 A값의 50%만 지원하여 실제 급여 상향효과가 적음.
-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가 많고 20, 50대에 빈번한 실업 상태에 노출되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업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강화할 필요성이 큼.
- 제도 문제 이외에도 재정적 문제의 해소가 필요함. 현 시점에서는 출산크레딧으로 소요되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산입('사후지원')하며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특성상 출산크레딧 적용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미래에는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함.
* 국민연금공단 추계에 따르면 2083년까지 총 199조 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같은 방식으로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에 소요되는 재원은 아직 지급사유가 미 발생한 상황이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미래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함.

■ 의견 :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아이당 24개월 사전지원
- 군복무 크레딧은 군복무 전 기간으로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야 하며 군복무 크레딧 산정시 기준소득월액도 출산크레딧과 유사하도록 제고.
-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02-497-7888, kptu2011@gmail.com)

실업크레딧 확대 및 국고지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실업크레딧 지원사업(7432-441)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7432-441)	56,804	35,500	-	55,000	34,582
실업크레딧지원(일반) (1232-351)	56,181	34,739	-	55,000	33,910
실업크레딧지원(고보) (1293-350)	55,918	34,474	-	55,000	33,658

- 사업내용 :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 희망시 본인 25%, 재정 75% 부담(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25% 각각 부담)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산입

■ 문제점

- 실업크레딧은 불안정 노동자의 실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에만 지원하여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며, 지원 역시 25% 자부담으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하여 필요한 국민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지원기간 역시 생애 12개월로 확대 필요.
- 또한 매년 예산편성 기준 크레딧 신청자보다 실제 크레딧 신청자가 초과되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기금 미납액이 432.7억 원이 발생하는 등 국민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에만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에 2022년에 누적된 미납액을 해소하려 증액 지출되었음.

■ 의견 : 실업크레딧 지급대상, 지원기간 확대 및 충분한 예산배정 요망

- 실업크레딧을 비정규직, 청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에 크레딧 부여(6+6개월 100% 국고지원)
- 생애 최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을 현행 70만원에서 최저임금의 50%로 상향.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02-497-7888, kptu2011@gmail.com)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639-307)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2,891	30,219	30,219	32,478	17,731

■ 문제점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예산 중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예산(49%에 해당) 미편성. 사회서비스 펀드 조성에 1백억원을 투입, 별도로 편성되었던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조사 항목(3억원)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산으로 편입.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에의 57% 수준
-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 절대다수가 국가 및 지자체 예산(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보육-기관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단가)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과의 현격한 질 격차 발생. 따라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예산 확보 필요.
- 따라서 사회서비스펀드 조성사업으로 민간지원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설립확충을 위한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공공돌봄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를 신규설치하는 것이 필요

■ 의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지자체 보조) 예산 복원 및

종합재가센터 신규설치 및 운영 사업 : 75,784백만 원 증액

- 전년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지자체 보조) 예산: 14,834백만 원
-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 설립 및 이를 통한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아이돌봄(정부위탁사업 직접 수탁)서비스 제공 확대: 60,950원

○ 종합재가센터 신규설치 및 운영: 60,950백만 원

- 시설비: 200백만 원 × 106개소 × 100% = 21,200 백만 원

- 인건비: 30명 × 24,000천원 × 106개소 × 50% = 38,160백만 원

- 사업·운영비 : 30백만 원 × 106개소 × 50% = 1,590백만 원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02-497-7888, kptu2011@gmail.com)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차별 해소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영유아보육료 지원(3133-331)/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3140-404)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영유아보육료 지원	3,178,111	3,025,145	3,025,145	2,673,100	2,673,100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705,941	1,750,362	1,750,362	1,891,723	1,869,081

■ 문제점

- 국공립·법인, 취약보육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2023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고 국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보육교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76만원 수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균 월급은 301만원, 민간 어린이집은 253만원으로 50만원 가량 차이.
- 전체 보육교사 중 71%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해당함. 이 중 90%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임. 2021년 보건복지부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를 최소 국공립 인건비 기준표의 1호봉으로 하라는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제한적일 뿐 아니라 권고에 불과하여 현장 적용에 한계가 많음.

■ 의견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국공립 인건비 기준 적용, 기관지원금과 인건비 분리

- 임금 차별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 후 필요 예산 산출하여 항목을 개설하고 예산에 반영.
- 권고 수준을 넘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보육료 내 인건비를 포함하여 교부하는 것을 개선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3133-331)’내 인건비성 예산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3140-404)’로 통합하여 편성하고, 어린이집에서 지출할 때에 인건비로만 지출하도록 관리.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02-497-7888, kptu2011@gmail.com)

공공병원 예산 삭감해 경영위기·존폐기로 내모는 정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09)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정부안(B)	(B-A)	(B-A)/A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176,227	953,079	14,764	12,610	△940,469	△98.7

■ 문제점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은 대부분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었음. 정부는 이를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77.1% 삭감, 내년도는 2023년 대비 98.7% 삭감했음.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됐다는 명분임. 하지만 여전히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적자에 허덕이며 경영위기를 겪는 데 대해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으며 존폐위기로 내몰고 있음.
- 공공병원은 코로나19 3년 간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시민 생명의 보루 역할을 해왔음.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은 전체 병상 대비 9.7%에 불과하지만, 2020년 3월 감염병전담 병상의 81.2%를, 2021년 1월 92%를, 2021년 11월 49.8%, 2022년 3월 26.8%를 담당하였음.
- 수년 간 코로나19 진료에만 매진해 일반 진료기능이 중단되면서 공공병원의 의사 인력, 진료건수, 수술건수, 필수진료과 개설율 등은 감소하였고 의료수익은 크게 감소하였음. 35개 지방의료원 당기순이익은 2019년 292.7억 흑자였으나 2023년 2938.6억원 순손실이 예측됨. 병상가동률은 2019년 78.4%에서 2023년 8월 53.0%에 그침. 35개 지방의료원 모두 2019년 대비 환자수가 1/2 또는 2/3으로 현저히 떨어졌음.
- 지난 3년 간 정부의 요구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느라 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의무임. 정부가 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지방 공공병원을 의도적으로 고사시켜 단계적 폐쇄조치를 하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임.

■ 의견 : 공공병원 회복·정상화를 위한 예산 신설 또는 손실보상 연장

- 코로나19 전담 공공병원이 기능을 회복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가 나서서 충분히 지원해야 함. 이를 위한 예산을 신설하거나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함.
-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필수의료와 공익적 활동을 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공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정부가 책임지도록 정책과 예산을 제도화해야 함.

■ 담당 단체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건강보험 무너뜨리려는 정부, 또 축소 편성한 국고지원 비율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4931-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정부안(B)	(B-A)	(B-A)/A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8,684,293	9,149,408	10,526,202	10,526,202	1,376,794	15.0

■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즉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함.
- 하지만 정부는 매년 법정 국고지원 규모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도 국고지원도 예상 수입액 대비 일반회계에서 12.2%,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2% 도합 14.4%만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는 정부가 추계한 내년도 예상수입액의 20%와 비교하면 무려 4조8,400억 원을 덜 편성한 것이며, 일반회계만 따져도 1조5,738억 원을 덜 편성한 것임.
-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이라며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함.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한국의 경우 GDP의 4.8%로, OECD 평균인 6.6%에 비해 크게 못 미침.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의무를 대놓고 어기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OECD 최저의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정상화가 시급함.
-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프랑스는 50%가 넘고 가까운 일본도 39%이며 대만은 국고지원을 36%를 법제화했음. 이에 비해 한국은 14%에 불과함. 이처럼 한국의 국고지원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만큼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만 높은 상황임.

■ 의견 : 건강보험 국고 지원 정상화 및 30%까지 증액

- 정부는 법을 미준수하며 미납하는 국고지원을 정상화해야 함. 20%를 넘어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전체 건강보험료의 최소 30% 이상이 되도록 증액해야 함.

■ 담당 단체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복지는 축소하면서 의료민영화 예산 크게 늘린 정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정부안(B)	(B-A)	(B-A) /A
비대면 진료기술개발(R&D)(3031-501)	-	5,550	5,961	5,961	441	7.4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3031-510)	-	6,250	8,333	8,333	2,083	33.3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3031-511)	-	7,500	13,500	13,500	6,000	80.0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R&D)(3031-534)	-	-	3,720	3,720	3,720	순증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정보화)(3034-304)	14,002	9,694	12,164	12,164	2,470	25.5

■ 문제점

-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및 지원,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에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부족하게 편성한 반면, 기업들이 의료로 돈벌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민영화 지원 예산은 크게 늘렸음.
-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는 영리 플랫폼이 의료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이며 이는 과잉진료 문제 심화,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낭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이어질 것임.
- '마이데이터'는 건강보험공단 등에 축적된 개인정보, 개인의 병원 진료기록,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수집된 건강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 등을 한 데 모아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겠다는 플랫폼임. 건강정보를 넘기는 것이 가져올 손해를 정확히 따져보기 힘든 개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개인이 쉽게 이러한 정보를 기업에 넘기도록 장려하는 것임. 기업들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종 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개인들은 정보인권 침해의 입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이런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사에 의료행위를 허용해주는 의료민영화인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임.
- 정부는 '디지털 헬스' 혹은 '혁신의료기술' 등의 평가규제를 완화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들을 손쉽게 허가해주려 하며, 검증하기 전에 환자에게 '실증'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는 근거 중심 의학을 흔들고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의료민영화·규제완화책임.

■ 의견 : 의료민영화 예산 전액 삭감

- 의료공공성을 저해할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확대와 의료공공성 강화에 써야 함.

■ 담당 단체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예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생계급여(1131-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7,541,072

- 사업내용: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 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문제점

-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생계급여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시킨 것을 두고 ‘약자복지’ 대표정책으로 꼽기도 함. 그러나 이렇게 오른 기준중위소득 인상분에 생계급여 기준 인상, 더불어 1인가구에 대한 추가 증가폭을 모두 고려하여도 2023년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71만원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보장수준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생계급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 생계급여에는 식료품·생필품·의복·가전/가구 구입비에 더해 전기·가스·수도·관리비 등 주거유지비와 비급여 진료·약제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기초생활보장법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계비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생계급여는 충분한 영양섭취도 하기 어려운 수준임. 2022년 기초법공동행동의 수급가구 가계부조사¹¹⁾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5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는 205,186원, 외식비는 53,370원으로 하루 평균 8,618원을 식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체소득의 29.6%에 달했음.
-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음. 첫째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체 국민 소득 중앙값보다 약 3년 정도 뒤쳐져있음. 둘째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전체 국민 소득 중앙값의 32% 인지에 대한 근거 없음. 빈곤선은 국제적으로 중위소득의 40~60%, 한국의 경우 50%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이에 한참 미달함.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전체인구 대비 약 3%로 빈곤 인구의 20%만을 포괄하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음. 예산안에서 밝힌 내년도 예상 수급자 수 162만 명 역시 전체인구 대비 3.1%에 불과함.
- 더불어 자동차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한 예산 증가분이 소폭 담겼으나

11) 기초법공동행동, 2022,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여전히 낮은 기본재산액과 일반·금융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은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 역시 폐지 되지 않은 채 남아있음.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재난적 상황은 2024년에도 계속될 예정임.

■ 의견 : 제도개선을 위한 증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에 법률 개정사항 아니며 정부의 의지를 통해 가능함. 선정기준이자 최대 보장수준을 빈곤선에 맞춰 예산을 증액해야 함.
-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본재산액과 재산의소득환산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예산을 증액해야 함.

■ 담당 단체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 (02-778-4017)

가난하면 장례와 출산 하지 말라는 예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해산장제급여(1131-303)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해산장제급여	50,841	38,210		43,416	42,613

- 사업내용: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 문제점

-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평균 장례비는 1,380만원에 달함. 현행 장제급여 80만원은 최소한의 애도할 공간인 빈소조차 마련할 수 없이 낮은 수준임.
- 해산급여는 1인당 70만원으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필수 병원비를 감당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 의견 : 제도개선을 위한 증액

- 최소한의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며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장례와 출산을 할 수 있게, 현실적인 비용을 책정하여 예산을 증액해야 함.

■ 담당 단체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 (02-778-4017)

빈곤층은 아파도 그냥 참으라는 예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의료급여(1132-302)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의료급여	7,884,031	9,908,368		8,937,713	8,937,713

- 사업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법령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문제점

-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등 선정기준을 완화했음에도 올해 대비 1.8% 삭감된 예산안임. 의료급여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비급여 등으로 인한 수급자의 의료 미충족 문제가 있음.
- 지난 10월 9일 한겨레 보도¹²⁾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가 91%에 이르지만 27.8%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함. 이는 지난 정부들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기 부담을 확대하며 계속 심각해지고 문제임.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9%로 의료비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비용 부담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비율이 높'다고 밝힘. 만성질환의 경우 비급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필수치료를 포기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며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선택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임.
- 의료급여 수급자 수 역시 전체인구 대비 3%대로 빈곤 인구의 20%만을 포괄하고 있음. 지난 10월 8일 전해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¹³⁾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세대가 93만 1000세대, 이중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세대가 76%에 달했음. 정부는 이번 부양의무자기준의 재산기준을 연 소득 1억, 재산 9억으로 완화한 대상에 중증장애인만 포함.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된 협소한 제도개선으로 의료 필요도는 장애의 유무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

■ 의견 : 제도개선을 위한 증액

- 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경험하고 있는 만성질환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 또는 최소화하고 있는 비급여 치료 및 약제에 대한 급여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함.
- 빈곤에 처한 이들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최소한의 기초 치료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인구학적 기준이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반영된 예산을 증액해야 함.

■ 담당 단체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 (02-778-4017)

12) 한겨레, 20231009, [단독] 빈곤가구 91% "만성질환자 있다"... 28%는 "치료 포기"

13) 연합뉴스, 20231008, '수월 세모녀' 또 나올라... 71만세대는 건보료 월5만원도 못내

빈곤, 위기에 개입할 의지 없다는 예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긴급복지(1133-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긴급복지	290,957	315,486		361,587	358,494

- 사업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빈곤계층으로의 유입 방지

■ 문제점

- 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6% 큰 폭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액으로 약 430억 증액에 불과함.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현저히 부족함. 예산 부족의 문제는 현장에서 홍보의 부재와 구두거절 등 선별이 강화되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 지원 후 조사',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여 빈곤을 예방한다는 제도의 목표를 훼손하고 있음.
- 더불어 코로나19 시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제도개선 및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됨. 소득과 재산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고 빈곤에 대한 원인을 실직이나 중한 질병 및 부상, 화재와 같은 재연 재해 등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음에도, 2020년도와 2021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결산액은 각 769,219억, 681,544억으로 2024년도 예산안의 2배에 달했으며 이마저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었음.

■ 의견 : 제도개선을 위한 증액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집행률이 높아 매년 추경을 반복하는 제도임.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이 예산을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함.
- 낮은 소득/재산기준의 현실화 개선을 반영한 예산을 증액해야 함.

■ 담당 단체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 (02-778-4017)

빈곤층 일 하라면서 일자리는 없다는 정부 예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자활사업(1137-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자활사업	696,392	693,573		772,416	748,440

- 사업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 빈곤 예방

■ 문제점

- 자활사업 예산은 일자리 참여자들의 임금(단가)로 인해 매년 자연증가분이 발생하는 구조이며 내년도 임금(단가)는 2.5%인상,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6만 6천 명에서 6만 9천 명으로 3천 명 증원하는데 그침.
- 자활사업은 실제 노동할 수 없는 이들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근로능력평가’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최저임금 미적용, 일자리 수의 부족과 참여 기간 제한(최대 5년), 이전의 노동경험과 연관된 일자리가 없는 등 탈빈곤 지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빈곤층의 일자리 참여를 통한 자존감과 관계 회복이라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에 유용함.
- 자활사업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찾는 일자리인데, 몇 년 전부터 일자리 수 부족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대기 기간이 길고 몇몇 자치구에서는 ‘3개월 이상 대기가 발생할 시 알아서 일자리를 구하라’는 서류에 서명을 받는 폭거가 발생함.

■ 의견 : 제도개선을 위한 증액

-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단가)책정과 전국 자활센터의 대기자 수를 파악하여 인원 증원을 반영한 예산을 증액해야 함.

■ 담당 단체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 (02-778-4017)

예산이 아니라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에 맞춰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장애인활동지원	1,745,014	1,991,879	-	2,284,604	2,284,604

- 사업내용: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

■ 문제점

-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 261만명 중 일상생활 전반에 타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14.9%로 약 38만명으로 추정.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장애서비스이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장애인활동지원의 수급자는 2023년 6월 기준 142,143명에 불과(최혜영 의원실).
- 정부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라는 판정체계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음. 2019년 7월 31년간 의학적 기준에 따른 획일적 판정 도구였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며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의학적 기준과 기능제한에 맞춰진 판정 도구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환경과 필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 같은 가운데 해당 판정 도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142,143명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4시간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급여 등급별 시간 또한 매우 부족한 수준에서 설계. 급여 등급별 시간부터 수급자의 등급별 판정결과(2024년 정부안 평균 시간 131시간, 일 5시간 미만 수급 인원이 83.3%)에 이르기까지 제도 자체가 예산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의 실상은 예산 맞춤형 제도 개편에 불과했음.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원천적으로 65세 노인과 노인성 질환으로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한 장애인에게서 신청자격을 배제했던 바, 2020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개선 권고와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선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는데, 장애 당사자의 사회서비스 선택 권리라는 원칙은 배제된 채, 높은 선정 기준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보전급여)하고 있으며, 65세 도래에 따른 서비스 시간 감소, 제공인력 미매칭, 높은 자부담 등의 문제가 돌출되고 있음. 이미 2023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제도의 급여 계산 방식의 위법성을 판결한만큼 당사자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전적으로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용자의 바우처 사용 금액이 기관으로 지급되면, 기관은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를 직접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통해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인데, 현행 단가가 이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활동지원사와 제공기관 모두 열악한 조건에 놓인 채 갈등을 피하지 못하고 있음.

[표] 종합조사 15구간별 수급자 현황

구간	점수	구분			수급자 수	
		월 한도액	월 제공 시간	하루최대 이용시간	인원	비율
1구간	465점 이상	7,475,000원	480	16	24	0.01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7,007,000원	450	15	180	0.1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6,541,000원	420	14	882	0.6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6,074,000원	390	13	1,924	1.4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5,607,000원	360	12	304	0.2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5,140,000원	330	11	1,091	0.8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4,671,000원	300	10	2,193	1.5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4,205,000원	270	9	1,530	1.1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3,738,000원	240	8	3,778	2.7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3,271,000원	210	7	4,315	3.0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2,804,000원	180	6	7,434	5.2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2,336,000원	150	5	19,860	14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870,000원	120	4	39,822	28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1,403,000원	90	3	43,686	30.7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936,000원	60	2	14,111	9.9
구간외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734,000원	47	1.5	1,009	0.7
계	-	-	-	-	142,143	100%

- * 산정특례자 14,621명 포함
- * 산정특례 : 인정조사 수급자가 종합조사 이후 급여가 감소한 경우 종전 인정조사급여 지급
- * 출처 : 최혜영 의원실 자료제공, 한자협 재구성

- 2024년 정부안 단가 16,150원의 경우, 수가 대비 최저임금 9,860원에 따른 법정수당과 인건비성 경비(4대 보험 사업자 지출) 지출 비율이 95%를 상회. 오랜 시간 중개 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처우를 보장할 수 없었으며, 2021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수당 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온전히 못함으로써 많은 중개기관이 범법기관으로 내몰리고 있음. 제도 시행 주체인 정부는 운영과 관련한 책임을 떠맡긴 채 적절한 지원조치 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해 기관의 불안정성은 해가 갈수록 증대되고, 활동지원사의 노동 조건은 '최저임금 시간제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제공인력의 과소공급에 따른 미매칭 문제가 방치되고 있음.

[표] 2024년 정부안 바우처 단가 16,150원 대비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지급 비율

구분	산출 근거	금액(원)
최저지급	2023년 최저지급 9,860 (A)	9,860
주휴수당	9,860÷5 (B)	1,972
연차수당	15일 기준, 15÷260×9,860 (C)	566
유급휴일 수당	17일 기준, 17÷260×9,860 (D)	640
퇴직(적립)금	(A+B+C+D)÷12	1,086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국민연금	(A+B+C+D)×4.5%
	건강보험	(A+B+C+D)×3.545%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81%
	고용보험	(A+B+C+D)×1.15%
	산재보험	(A+B+C+D)×0.75%
활동지원사 인건비 소계 (가)		15,477
2024년 바우처 단가 소계 (나)		2024년 정부안 바우처 단가 16,150
수가대비 인건비 차액 소계		(나)-(가)
수가대비 인건비 지급율		95.84%

* 1일 8시간 기준

- 이에 더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노인장기요양('23년, 3시간 기준 19,640원), 가사 간병 방문('23년16,400원) 등 유사 서비스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근속 년수에 따른 인센티브 등 가산 체계가 없는 단일 단가구조로 더욱 열악한 일자리로 여겨지고 있음. 일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산급여를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시간당 3,000원으로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사들의 매칭 기피가 심각한 가운데 이 또한 단일 단가구조에 선정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피가 심한 발달장애인 등의 매칭 활성화에 있어 실효성이 미비. 이에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가산수당의 금액 자체를 인상하고, 대상자 기준을 하향(성인기준 x1 426점 → 360점)해야 할 것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핵심 과제는 서비스 사정 절차 내 장애 당사자의 권리와 권한을 강화하고, 동시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원칙하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판정체계의 전향적 개편을 통해 장애 당사자의 자기주도적 사정 절차를 확립하여야 하며, 획기적 예산 확대 및 선제적 편성을 통해 대상자의 수와 평균 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동시에 활동지원사와 중개기관의 불안정한 지위 및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제공인력의 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수적임.

■ 의견 : 정부 예산안 대비 1,052,543백만 원 증 증액

○ 활동지원급여 : 3,135,921백만 원

- (1) 기본급여 : 3,092,586백만 원
 - 대상자 123,715명 → 140,000명
 - 시간당 단가 16,150원 → 17,500원
 - 평균 시간 131시간 → 157시간
- (2) 산정특례 : 0원
 - 산정특례 폐지 및 기본급여 안에 반영 (종합조사 구간 반영)
- (3)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43,335백만 원
 - 대상자 500명 → 2,000명
- (4)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활동지원 : 0원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보전급여 폐지, 당사자 선택권 보장 (기본급여 대상자)

○ 가산급여 : 176,880백만 원

- 대상자 10,000명 → 20,000명
- 시간당 단가 3,000원 → 5,000원
- 평균 시간 190시간 → 220시간

<p>□ 기초서비스로써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권리 보장 : 1,052,543백만 원 증액</p> <p>○ 요구 예산 : 3,337,147백만 원 (정부안 대비 1,052,543백만 원 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여) : 3,092,586백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140,000명 × 17,500원 × 157시간 × 12개월 × 60%(보조율)) ▶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43,335백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2,000명 × 17,500원 × 154시간 × 12개월 × 67%(보조율)) ▶ (가산급여) : 176,880백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0명 × 5,000원 × 220시간 × 12개월 × 50%(보조율)) ▶ (위탁사업비) : 23,844백만 원 (정부안 동) ▶ (사업운영비) : 502백만 원 (정부안 동)
--

■ 담당 단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2-739-1420)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해야

보건복지부, 특별회계(균형특별기금),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1542-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2,154	4,834	-	6,741	5,982

- 사업내용: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정보제공과 의뢰, 자립지원금, 주거, 주거유지서비스, 자립생활 경험 등에 기반하여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하기 위함

■ 문제점

1) 2022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 인권적 모델에 근거한 로드맵 보완
 - 장애 의학적 모델의 요소를 장애 인권적 모델의 원칙으로 대체
- 시설화 관련 법률 조항 폐지 및 시설화 금지
 - 자타해위험과 손상에 근거하여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한민국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과 정신건강복지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 조항을 폐지
 - 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시설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
- 긴급상황을 포함한 UN 탈시설가이드라인(2022) 기반 탈시설이행강화
 - 성인 및 아동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강화
 - 비상시에 장애인 탈시설 방안을 채택하고 지역사회 거주 지원
 - 폭력 및 학대 피해에 대한 독립적인 진정 절차 등 적절한 구제방안 마련

2)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하여, △자립생활 원칙 명문화 및 탈시설전환 관련 정보고지 의무화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 계획 수립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임시거주훈련 프로그램 및 초기정착 주거공간을 확대할 것을 각 권고함.
 - 자립주택은 현재 14개 광역 시·도에서 시행 중
 - 활동지원 추가시간 보장 : 장애 및 소득기준 상관없이 활동지원시간 보장 필요
 - 자립정착금 : 현재 12개 광역시·도에서 시행 중.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에게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탈시설 정착금 지원
 - 지역별 전달체계 구축 및 탈시설장애인 지원인력 확충

3) 시범사업 탈시설장애인의 초기 정착 및 전달체계마련 예산 구축 필요

-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시범사업의 명칭에서 '탈시설'용어를 삭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도 등 윤석열정부의 시설화 확대기조로 중앙정부차원의 시범사업 지속 여부 불분명

-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에 역행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국고지원 확대 추진
: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거주시설 예산의 0.9%

■ **의견 : 2024년 정부안 예산 대비 24,796백만 원 증액**

- (1)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명칭 복구 및 본사업화
- (2)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월 240시간 추가지원
 - 지원유형에 따른 40시간/200시간 지원 → 월 240시간
- (3) 자립정착금 도입
 - 1인당 0원 → 1인당 2,000만원
- (4) 주거유지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 강화
 - 지원인력 150명/탈시설장애인 4인당 자립지원인력 1인 → 30개 기관, 지원인력 280명/탈시설장애인 2인당 자립지원인력 1인
- (5)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치료·상담지원비 확대
 - 장애인 치과치료비 및 심리상담지원비 추가
- (6) 보조기기 및 IoT 지원비 확대
 - 장애인 거주시설 기준 IoT보급 및 유지보수비
- (7) 시범사업 제도개선 연구 추가
- (8) (*별도항목)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주택공급계획 마련 및 지역별 물량 확보

□	시범사업 지속성 보장 및 UNCRPD 권고 탈시설이행 예산 마련
○	요구 예산 : 30,778백만 원 (정부안 대비 24,796백만 원 증)
▶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 6,000백만 원 - (정착금 20,000천원 × 600명 × 50%(보조율))
▶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반영 : 12,600백만 원 - ((단가 17,500원 × 400명 × 240시간 × 12개월 × 50%(보조율)) + 단가 17,500원 × 200명 × 240시간 × 6개월 × 50%(보조율))
▶	자립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 8,835백만 원 - ((인건비 4,193,800원 × 280명 × 12개월 × 50%(보조율))+(인건비 4,193,800원 × 140명 × 6개월 × 50%(보조율)) = 8,805백만 원 - ((운영비 (2,400,000원 × 20개기관 × 50%(보조율)) + (2,400,000원 × 10개 × 0.5년 × 50%(보조율)) = 30백만 원
▶	탈시설장애인 건강검진 및 치료지원비 : 1,320백만 원 - (건강검진비용 600명 × 400,000원 × 50%(보조율)) = 120백만 원 - (치과치료비 600명 × 2,000,000원 × 50%(보조율)) = 600백만 원 - (심리행동지원비 240명(전체인원의 40%) × 5,000,000원 × 50%(보조율)) = 600백만 원
▶	IoT 보급 및 유지관리비 : 473백만 원 - (기기보급 12,500,000원 × 30개소 × 100%(보조율)) +(유지비 80,000원 × 20개소 × 12개월 × 50%(보조율))+(유지비 80,000원 × 10개소 × 6개월 × 50%(보조율)) = 473백만 원(거주시설 동일기준적용)
▶	주거환경개선비 : 600백만 원 - (주거환경개선비 200명 × 6,000천원 × 50%(보조율)) = 600백만 원(정부예산안 동일적용)
▶	보조기기 지원 : 300백만 원 - (주거환경개선비 200명 × 3,000천원 × 50%(보조율)) = 300백만 원(정부예산안 동일적용)
▶	제도개선연구 및 교육비 : 650백만 원 - 주거서비스 제도개선 연구개발비 = 150백만 원 -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비 = 250백만 원 - 자립지원사 교육비 = 250백만 원

■ **담당 단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2-739-1420)**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및 차별철폐 위한 기반 확충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1542-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8,924	7,325	-	7,448	6,836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4,762	4,825			4,928

- 사업내용: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상담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 지원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지원

■ 문제점

- 2000년, 최초 2개의 자조모임 형태로 설립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3년 현재 전국에 약 300여 개소(미지원 센터 포함 추정치)로 확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이동권, 활동지원, 탈시설, 보조기기, 노동권 등 자립지원 정책의 확산을 추동해왔으며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들의 등장과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요구의 확산은 200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법률화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명시되었음.
- 이후 장애계와 학계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단체의 대안적 성격에 주목하며, 지원 강화를 위한 거시적 논의가 발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직원 구성과, 인력의 급여체계, 예산 지원 강화와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서의 역할 강화 방안을 도출하였음. 이에 정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탈시설 지원의 민간 인프라로 공인하고, 기능 강화 및 개소수 확대를 추진해왔음.

[참조]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1-4-1)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 강화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	- 장애인자립생활지원개소수 연차별 확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3년</td> <td>'14</td> <td>'15</td> <td>'16</td> <td>'17</td> </tr> <tr> <td>40개</td> <td>45개</td> <td>50개</td> <td>55개</td> <td>60개</td> </tr> </table>	'13년	'14	'15	'16	'17	40개	45개	50개	55개	60개
'13년	'14	'15	'16	'17								
40개	45개	50개	55개	60개								

[참조]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추진('18년 62개소 → '22년 90개소)

* '18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52개소 중 62개소에만 국비 지원

- 하지만, 정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대안적 성격과 그에 따르는 역할을 꺾지.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른 제반 제도의 강화를 시책하지 않았음. 그 결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필수 직원구성의 기준은 2008년 4명(소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행정담당 각 1인)에서 2023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이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은 2005년 1억 5천에서 현재까지 약 1천만원 밖에 확대되지 않음(2023년 개소당 지원금은 160,833천원). 인건비 및 물가인상률조차 반영되지 않아 센터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
- 중요한 것은 탈시설 지원에서의 역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전국 각지에서 탈시설 운동을 통해 지자체별 탈시설 계획을 견인했으며, 개인별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각종 사회서비스를 연계. 이처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탈시설과 관련한 물질적 토대 구축을 넘어,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직접 참여와 운영, 권리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시설화' 요인을 견제하고 탈시설 당사자의 자력화 도모라는 측면에서 장애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왔음.
- 탈시설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논의를 추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현장성과 지원 양상은 조명받지 못했으며, 2021년 8월 발표된 국가의 탈시설 로드맵이 거주시설의 소규모화와 기능개편으로 절충되는 경향 안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소외되는 실정.
- 이에 일각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열악한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명문화를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상기 언급한 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과는 대조적 경향을 띄며 독자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무엇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공간이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운영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는 점, 그 역사와 이념에 비춰 당사자 중심의 조직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성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전달체계로써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되어 인력 및 설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기 운영중인 센터와 미지원·신생 센터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요인이므로 매우 위험.
- 그렇지만, 현재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준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 수준과 방식은 하향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반 제도의 정비의 필요하며,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탈시설 장애인을 비롯한 지역사회 중증장애인 지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의견 : 2024년 정부안 예산 대비 4,072백만 원 증액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 9,000백만 원
 - 인건비 지원 인력 확대 4명 → 6명
 - 운영비 확대 23,600천원 → 39,052천원
 - 개소수 확대 75개소 → 90개소

<p>□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 9,000백만 원 증액</p> <p>○ 요구 예산 : 9,000백만 원 (정부안 대비 4,072백만 원 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인건비) 지원 : 7,594백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35,158천원 × 6명 × 90개소 × 40%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1,406백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39,052천원 × 90개소 × 40%
--

■ 담당 단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2-739-1420)

노인을 위한 미래는 어디에

보건복지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노인요양시설 확충(2232-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본예산	요구안	정부안	(B-A)	%
노인요양시설확충	-	54,765	46,764	21,711	△33,054	△60.4

- 사업내용

-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대응한 공립 요양시설 지속적 확충 및 장기요양기관 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을 통해 시설 입소(이용) 노인 인권 보호 및 개선
-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장기요양요원(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교육·건강관리 지원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로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 발생 및 사망자 발생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23년~'25년)

■ 문제점

- 2024년 노인요양시설확충 예산은 2023년 548억 원에서 무려 60.4%가 삭감되었음. 2024년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신축은 8개소에 그침.
- 노인요양시설의 98%를 민간이 차지하는 기형적 공급구조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서비스의 질이 하락했다는 비판이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음. 그러나 예산안에서 이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요양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요양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에서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담긴 정부의 의지는 확인되지 않음.

■ 의견 : 증액

- 노인요양시설확충 예산의 삭감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담긴 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전혀 조응하지 않음. 민간 시장의 질을 견인하고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는 국가 책임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

■ 담당 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가

보건복지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2134-303)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본예산	요구안	정부안	(B-A)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35,975	501,981	579,989	546,105	44,124	8.8

- 사업내용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예방
-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등을 관리) 운영지원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관리) 일반수용비, 여비 등 사업관리를 위한 비용

■ 문제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은 전년 대비 8.8%가 증가한 5,461억 원으로 조정됨. 전담 사회복지사가 2,149명에서 2,292명으로, 생활지원사가 34,375명에서 36,667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것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노인 인구 증가율의 5.3%도 반영하지 못한 채 2023년과 같은 55만 명으로 책정됨. 이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중 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구성비는 2023년 5.8%에서 5.5%로 감소함. 노인 1인당 서비스 단가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난해와 동일한 6,000원으로 책정됨.
-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의 규모는 매년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의견 : 증액

- 가속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독거가구, 거동불편 노인 등 안전관리와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노인 인구 증가율을 제대로 반영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서비스 단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함.

■ 담당 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보편적 복지를 지역에 떠넘기지 말라

보건복지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어린이집 확충(3134-344), 어린이집 기능보강(3134-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본예산	요구안	정부안	(B-A)	%
어린이집 확충	49,520	49,170	41,654	41,654	△7,516	△15.3
어린이집 기능보강	-	-	7,384	7,384	7,384	순증
어린이집 기능보강(세종)	-	-	71	71	71	순증
어린이집 기능보강(제주)	-	-	185	185	185	순증

- 사업내용

- : (어린이집 확충)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
- : (어린이집 기능보강)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성이 높은 기존 어린이집의 노후한 시설에 대해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을 지원

■ 문제점

-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음. 특히 신축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예산에 따라 2024년 어린이집 확충 목표가 일반신축 신규 33개소, 지속 33개소, 장애아전문 신축 신규 2개소, 지속 2개소에 불과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435개소에 달함. 이는 공공보육이용률 50% 이상 달성과 지역별 공공보육이용률 편차 완화라는 사업 목표에 충실하지 못한 예산 편성임.
-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자율, 세종, 제주)은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크게 증가함. 자율계정의 경우 74억 원으로 전년도 개보수 대상 어린이집이 218개소에 2024년 518개소로 지원대상을 크게 늘렸는데, 지원대상 선정방법 및 확대 근거자료는 충실히 제시되지 못함.
- 보육 사업은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띄는 일반예산 사업임에도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예산이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지역균형특별회계로 이관됨. 최근 복지부의 상당수 일반회계 사업이 균특회계 그리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관되고 있는데 복지의 지역격차 뿐 아니라 재정분권 없는 사무분권으로 인하여 복지사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지역 현실을 고려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균특회계 이관은 재검토되어야 함.

■ 의견 : 증액, 일반회계 이관

- 공공보육이용률 50% 달성 목표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 또한 보육은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관리되어야 함.

■ 담당 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가정양육으로 회귀하길 강요하는 예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3143-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본예산	요구안	정부안	(B-A)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41,751	1,621,454	2,895,813	2,888,694	1,267,240	78.2

- 사업내용

: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확대

■ 문제점

- 이 사업의 실질적 효과는 가정양육 확대로 유추됨. 부모급여는 영유아보육 바우처와 중복되지 않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전히 100만 원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지원 54만원을 제외하고 46만 원을 지원받음.
-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방식은 시설보육에 집중된 공적 지원을 줄이는 목적인데, 이는 정부의 예산 절감 측면에서 가정양육이 보다 유리하기 때문임. 보육은 보육료 지원 외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인건비미지원시설의 보육료 지원도 0세 117만원으로 부모급여보다는 낮음.
- 부모급여의 국고지원비율은 68.34%로 전년보다 소폭 낮아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매칭부담률이 높아짐. 이는 기초연금, 아동수당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전국적 보편적 현금급여의 경우 전액국고사업으로 전환을 포함한 재정분권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의견 : 제도 검토

-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수년 동안 이루어진 공보육에 대한 투자로 크게 상승함. 그럼에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부모급여 등 가정 내 현금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마련해야 할 공공보육시설 인프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정 내 돌봄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담당 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사각지대 없는 자립수당을 만들어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1331-303)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26,663	43,745	49,670	45,402	1,657	3.8

- 본 사업은 최근 자살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 본 자립수당은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 수당지급기간이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수당의 액수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음. 하지만 2024년 예산안은 40만원의 수당액을 50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지급대상자를 1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축소.

■ 문제점

- 연구에 따르면, 매년 4,000명 이상의 보호대상아동 발생, 이 중 7~80%가 보호조치. 2021년, 4,741명이 보호대상자 중 3,657명이 가정으로 복귀 못하고 보호시설 등의 조치를 받음
- 하지만 본 사업은 2023년에 12,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4년에는 10,000명으로 축소. 대상자의 축소는 현재 존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수에 못미치는 수준임.
- 특히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매년 제시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것(2017년-2,593명, 2018년-2,606명, 2019년-2,587명, 2020년-2,368명, 2021년-2,102명)으로, 그 외 아래의 최소 2가지 유형은 온전히 반영하지 못함. 즉 사각지대가 적지 않게 발생함.

<표. 다양한 자립준비청년 유형>

관련법령	담당기관	자립준비청년 성격
「아동복지법」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양육시설 등	해당 기관에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보호종료 5년차 이내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등	해당 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자립준비청년
「소년법」	청소년자립생활관 창업비전센터 등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출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자립생활관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자립준비청년

- 청년의 삶은 우리 사회에 중요함. 인구감소의 경향은 이러한 중요도를 더욱 부각시킴.

■ 의견 : 증액

- 인상된 수당액(매달 5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12,000명을 최소치로 하고 모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삼아야 함. 그리고 그에 준해 예산을 배정해야 함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자립지원체계의 완전한 구축으로 기회보장을 보장해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체계 구축(1349-306)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6,709	14,706	22,116	17,721	3,015	20.5

- 본 사업은 2021년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된 후 2022년에 도입
- 현 정부의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은 '취약청년 출발 지원'이란 세부사업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실태 파악과 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확대를 명시

■ 문제점

-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수당을 이미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예산이 제대로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자립과정 중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행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사후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함.
- 이런 맥락에서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의 예산액을 221억을 요구했음. 하지만 대폭 조정된 177억이 최종안으로 결정됨
- 특히 본 사업은 국정과제이므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의 요구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전담인력 인건비 중 기존의 인력은 12개월 치이지만 신규 인력 50명은 6개월 치만 배정.
- 사각지대 발굴이 사업 내용에서는 제외됨. 이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운용하기 위해 전담인력이 더 확보되어야 함.
- 사례관리의 지원규모가 전체 10,000명 중에 2,750명임. 전체 중 적어도 30% 이상에게 구체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그뿐만 아니라, 자립수당 수급자가 예산안이 상정한 10,000명이 아니라 12,000명 이상이라 가정했을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규모는 확대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례관리비도 더 늘려야 함

■ 의견 :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예산액(22억 1,600만 원) 복원(증액)

- 전담인력을 230명을 넘어서도록 더 충원하고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10개월의 인건비 책정
- 사례관리 지원규모도 2,750명에서 3,000명 이상이 되도록 확대
- 사각지대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발굴 작업 강화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가장 슬픈 죽음, 고독사를 예방하는 예산은 아직도 부족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2639-302)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고독사예방관리 체계구축	875	1,315	4,490	2,862	1,547	117.6

- 본 사업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취약가구 등을 발굴하여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을 해줌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사업.
- 2024년 예산(안)은 2023년(13억 2천만 원)에 비해 117.6% 인상된 28억 62백만 원 배정.

■ 문제점

- 고독사는 가장 슬픈 죽음. 이를 해소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어야 하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은 회피되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1인 가구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의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음. 이는 그만큼 고독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변화의 폭을 따라잡기에는 부족.
- 2024년 예산안은 고독사 위험군(집중관리 대상자)을 21년 고독사 사망자의 약 3.5배수로 추정하여 예산액 산출. 하지만 이러한 점진적 방식은 당장의 고독사 위험에 대응에 부적합.
- 또한 본 사업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이 대부분임. 하지만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팽배해 있고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음. 그리고 이 사업은 지역주도형이며 이미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에서는 이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즉 시범사업의 규모가 커도 무방한 상태임
- 2023년 5월18일 공개된 '고독사 위험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인 가구의 약 21.3%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함.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 152만 5,000여 명이 위험군에 속함.
- 2023년에 발표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이 목표로 정한 '전체 사망자 100명당 0.85명'을 달성하려면 시범사업이 아니라 당장 정규사업으로 전환해야 함
- 예산 세부내용을 보면, 고독사 위험에 처한 분들을 사회관계망으로 끌어내는 시스템을 구상·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제외됨.

■ 의견 : 보건복지부 요구안(44억 9천만원) 복원(증액)

-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44억9000만 원을 요구했음. 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복원해야 함.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국민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힘들데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해외환자 유치 지원(3037-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해외환자 유치지원	4,820	4,864	5,299	4,354	△510	△10.5

- 외국인환자 유치와 병원 해외진출은 2000년대 초부터 신성장동력사업으로 강조되었음.
- 2022년 「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 발표됨
- 2023년 5월29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

■ 문제점

- 일반적으로 외국인 환자가 유입되는 이유는 2가지임. 하나는 '명품의료'로, '의료의 질'이 높아 높은 의료비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유입됨. 다른 하나는 '낮은 의료비용과 부대비용'으로, 환자가 자국에서의 의료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나라로 유입됨.
- 최근의 의료관광은 태국이나 인도와 같은 저개발국 병원들이 저렴한 가격(특히 낮은 인건비)과 양질의 서비스를 무기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의료소외계층을 파고들며 성장하는 양상 보임. 우리나라가 이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낮춰야만 가능. 하지만 인건비 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낼 수 있음
- 의료윤리 차원에서 문제점이 됨. 외국인 환자의 유치는 의료를 통한 수익 창출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설정. 이 목적 자체가 의료윤리에 부적합함. 인류애의 차원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해외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이 치료해 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일에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우리나라 의료상황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부적합함. 국내 의사의 수가 OECD 국가에서 가장 적으며, 2023년 현재 부족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주요 아젠다인 상황. 이런 현실에서 해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의료인력과 의료자원 배분에 불합리함을 초래함
- 해외환자가 자발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가 개입하고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함. 해외환자가 우리나라 의료를 찾는 것은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사안임.
-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4년 예산안은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소액이나마 감액했다는 점임. 그러나 감액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함.

- 높은 질로 경쟁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할 수 있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국가가 나서서 유치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환자가 스스로 우리나라를 찾게 됨. 과거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미국이나 일본의 병원을 스스로 찾아간 것과 동일함.
- 결국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은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함

■ 의견 : 예산 전면 삭감, 사업 폐지

- 본 사업의 예산은 전면 삭감해야 하며, 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함
- 다만, 외국인 환자의 출입국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며 병원 이용에 대한 관리는 필요함.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이 아님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지역거점병원, 미운오리새끼가 아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건복지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2743-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65,788	151,115	159,227	141,605	△9,510	△6.3

- 외국인환자 유치와 병원 해외진출은 2000년대 초부터 신성장동력사업으로 강조되었음.
- 2022년 「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 발표됨
- 2023년 5월29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

■ 문제점

-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음. 이동 수단의 발달은 이를 더욱 부추겨, 현재 우리나라 지역의료는 거의 붕괴 직전임.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지원은 크게 변한 것이 없이 땀질 정도만 가능한 수준으로 주어지고 있고 이번 예산안은 감액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의 수는 전체의 5.7%에 불과하고, 지역의료의 중심을 맡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으로 구성되며 총 41개에 불과. 지역의료 강화와 지역간 의료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최소한 전국에 70여 곳에 지역 책임의료기관 공공병원을 구축해야 하는데, 현재 확충의 노력은 너무 미미한 수준. 공공병원 개수를 늘리기 위한 예산이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함.
-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매년 예산에서 소외되고 있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과 장비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항상 부족.
- 지방의료원은 취약한 규모와 장비, 부족한 의료인력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음.
- 지역거점병원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함. 하지만 현재의 위치들은 대부분이 외진 곳임. 이 좋은 곳에 지방의료원을 위치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위치들을 재수정해야 함.
- 2000년 말부터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위한 재정지원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필수 장비는 상당 수준으로 갖춰진 상태. 하지만 아직도 지역의 필수의료로 책임지기에 아주 부족함. 공공병원의 작은 규모와 부족한 시설·장비는 진료 범위의 한계와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획기적인 공적재정의 투여가 필요한 상황.
- 병원의 운영 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음. 하지만 이는 지자체별 지원 수준 차이에 따른 편차를 낳고 지역간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됨. 더군다나, 의료는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지기에 큰 영역이며 보통 선진국에서는 광역단위에서 책임을 짐. 그럼에도 운영에 대한 비용은 중앙정부가 일정 이상 책임을 져야 불평등이 최소화됨. 따라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함.

■ 의견 : 예산 증액.

- 본 사업의 예산은 감액이 아니라 대규모의 증액이어야 함.
- 국민건강증기금을 지역의료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확충'만이 아니라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필요
- 공공의료에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의 도입하여 '착한 적자'에 대한 대응책을 구축해야 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로 명시함으로써 재원마련을 제도화해야 함.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교육위원회

부서	의견	사업	작성자	쪽
교육부	증액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36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보장

교육부, 일반회계, 국가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 설치·운영(4131-303)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국가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 설치·운영	2,919	7,554	-	8,410	5,534
- 장애인평생학습도시	1,500	5,300			

- 사업내용: 지역중심의 장애인 역량개발 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 문제점

- 일반 평생학습도시는 195개('23년 기준)로 매년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없어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국회 및 현장의 요구 증가
- 일반 평생교육에 비해 매우 열악한 장애인의 평생학습 여건에 대한 차별 철폐 주장 등 현장 요구 반영 시급

<현장 및 국회 요구 현황>

- (국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장애인 접근성 환경 개선 요구('8.11.국회 예결위)
- (지방자치단체) 서울시('18.4.20), 의정부시('18.10.16), 군산시('19.3.7.)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요청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지역연계체제 구축 예산 요구('19.3.14.)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지역 연계체제 구축 예산 요구('19.3.15.)
- (언론보도) '평생교육센터가 또 다른 보호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19.1.8., 한국일보)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천명하였으나 시범 시행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사업예산은 1,500백만 원으로 동결된 상황으로 지역기반의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큰 폭의 예산 확대가 필요

- ※ ('20) 5개×300백만 원=1,500백만 원
- ※ ('21) 15개×100백만 원=1,500백만 원
- ※ ('22) 15개×100백만 원=1,500백만 원

-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추가 지정을 통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대학교, 장애인 단체(기관), 기업 등 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업무 협업 강화
 - 탈시설 장애인 프로그램 및 비장애인과 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지역 장애인의 직업역량, 취·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의견 : 2024년 정부안 예산 대비 13,000백만 원 증액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별·대상별 교육 불균형 해소
- 일반 평생학습도시에 준하는 사업확대를 위해 대규모 신규 지정 필요
-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속적 운영과 안정적 관리 기반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금 계속 지원 추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산출내역>

○ 요구 예산 : 13,000백만 원

- (산출내역) 100백만 원 × 130개 지자체* = 13,000백만 원 * 계속지원 68개 + 신규지정 62개

<국고보조금 소요 추계('22년~'24년)>

(단위: 백만 원)

지정 지자체	2022년	2023년	2024년
'22년 지정(32개)	46.8×32개	79.1×67개 *계속지원 32개 + *신규지원 35개	100×65개
'23년 지정(68개)			
'24년 지정(130개)			100×65개
누적(개)	32개	67개	130개
국고보조금 총계	1,500백만 원	5,300백만 원	13,000백만 원

■ 담당 단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2-739-1420)

행정안전위원회

부서	의견	사업	작성자	쪽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함께살기연구소	139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	마을기업육성사업	함께살기연구소	140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함께살기연구소	141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함께살기연구소	142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함께살기연구소	144

지역일자리사업 이제는 적절한 부처로 재배치되어야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3131-303)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A)	요구안	조정안(B)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39,345	199,353	81,500	75,650	△123,703	△62.0	

- 본 사업은 청년(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의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청년일자리 창출함. 2023년 예산 약 1,994억 원에서 2024년 757억 원으로 약 62.0% 대폭 삭감됨.

■ 문제점

- 본 사업이 62%나 축소되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지난 몇 년 동안 집행률은 99.9%였고 2018년~2022년에 총 14,95만명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지자체 중심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의 결과>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참여인원	1.1만명	3.6만명	3.6만명	3.3만명	3.2만명
중도포기율	12.6%	19.1%	20.0%	17.7%	19.5%

-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지속적으로 상승 중임.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및 도 지역의 고용창출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도 기여
- 이러한 성과를 보건대, 본 사업이 62%나 축소되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 다만,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관장하기보다는 일자리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다른 청년 일자리 사업들과의 체계적인 구성을 구축할 필요 있음

■ 의견 : 예산 증액

- 청년일자리 확보 방안 중 지자체가 주도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활성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사업.
- 예산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증액해야 함. 다만, 청년일자리의 창출 및 지역활성화라는 기능이 행정안전부가 수행하기보다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에 의해 수행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행안부에서의 예산이 축소될 여지는 있지만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축소될 이유가 없음. 오히려 해당 기능은 다른 부서 특히 지역활성화가 이뤄지는 각 영역을 담당하는 부서(고용, 사회복지, 농수산, 경제, 유통 등)에서 행안부의 해당 감소된 예산을 받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요컨대 예산 자체는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부서로 재배치·재분산되어야 함.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마을공동체 형성에 핵심인 마을기업은 더 늘려야 정상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마을기업육성사업(3131-301)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마을기업육성사업	6,589	6,965	8,035	2,695	-4,270	-61.3%

- 본 사업은 지역주민이 주도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2023년 66억에서 2024년 27억으로 약 61.3% 감액. 보다 상향된 예산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오히려 큰 차이로 감액
- 2023년부터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일반회계)'과 '마을기업 육성사업(균특회계)'을 '마을기업 육성사업(균특회계)'로 통합 편성

■ 문제점

- 형식적으로는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일반회계)'과 '마을기업 육성사업(균특회계)'이 '마을기업육성사업(균특회계)'로 통합편성되었음. 하지만 실제 세부 내역을 보면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용은 모두 폐지되었고, 기존의 '마을기업 육성사업'만 예산액이 축소된 상태로 존속.
-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만,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의 도구적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해야 함

■ 의견 : 예산 증액

- 마을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예산과 더불어, 기 결성된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되어야 함. 이를 위해 예산은 증액되어야 함
- 마을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예산도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삭감되었음. 이를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원상복구 시켜야 함
- 마을기업에 대한 비판, 즉 정부의 재정지원 이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역량 강화는 예산 축소를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강화를 위한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함. 즉 마을기업의 예산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각 마을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조치를 가미해야 함
- 마을기업을 사회서비스, 방과후돌봄 또는 방과후수업 등과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충분한 예산 배정과 더불어 사업계획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예시를 제공해야 함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지역사회 활성화의 기반을 허무는 예산감액은 당장 수정돼야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3131-301)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예산안		증감 (B-A)	(B-A)/ A
			요구안	조정안(B)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3,476	9,165	9,165	6,186	-2,979	-32.5

- 본 사업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때문에 전국에 산재해 발생한 공공 유휴·저활용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저성장·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하고자 2018년부터 시민주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
- 도입 후 3년간 확대되다가 2022년에 큰 폭으로 축소되었고 2023년에 다시금 확대. 하지만 2024년 예산안은 다시 91.6억 원에서 61.9억 원으로 32.5% 매우 감소.

■ 문제점

- 여전히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에서도 도시화의 정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공공의 유휴 및 저활용 공간이 상당히 많음. 반면 지역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은 부족한데 지원이 줄어들었음
- 사업도 20년부터 매년 24개, 20개, 9개, 9개로 축소되다가 2024년(안)에는 6개로 축소
- 주민들의 활동거점이 다양할 필요가 매우 큼. 마을공동체의 공동의 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만 아니라, 공동의 사업을 하거나 공동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함
- 현재 본 사업은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변경하였음. 하지만 리모델링은 건물과 공간의 상황에 따라 개축보다 더 고비용일 수 있음(평당 비용이 개축보다 대략 1.5배 더 높음). 따라서 현재 배정한 비용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과 개축은 전문가의 적절한 평가에 의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 지역소멸대응기금과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의 공동작업을 위한 공간 확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함. 지나치게 소멸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원이 몰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의 소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임

■ 의견 : 예산 증액

- 지역사회 활성화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의 방책으로 공공의 유휴공간이나 저활용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정책임. 더 나아가, 민간 소유의 공간을 매입해서라도 필요한 활동공간을 마련해야 함. 향후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자생적 창조역량은 합당한 예산과 프로그램 있어야 가능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1938-301)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24,126	22,231	19,275	19,275	-2,956	-0.13

- 본 사업명은 신설된 것이지만, 사업의 내용들은 2023년도 예산안의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사업의 주요 내용들이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사업으로 변경된 것임
- 감액의 폭은 13%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원'은 자치적 창조역량 강화라는 본 사업의 본연의 기능과는 거리가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을 제외하면 감액폭은 매우 큼.

<표.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사업과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사업 비교>

(단위: 백만 원)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실패 자산화 및 제도적 문화 확산	1,490	재도전 문화확산 및 지역활력 지원	-
디지털 기술활용 지역문제 해결사업	1,400	테이터 기반 지역활성화 사업	1,400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운영	2,200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청년자립 및 활력 지원	7,515	청년주도 균형발전타운 조성	7,515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9,171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4,200
과학기술 기반 현안 해결	455	과학기술기반 현안해결	1,160
-	-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원	5,000
총액	22,231	총액	19,275

■ **문제점**

- 본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에 속한 사업임. 그럼에도 감액되었음.
- 위 표가 보여주듯,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 현재 지역문제는 단일 주체가 단일 공동체 내에서 해소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임. 주체 간 그리고 마을공동체 간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이 네트워킹을 위한 플랫폼 구축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이를 위한 예산은 삭감이 아니라 확대가 절실한 상태임.
-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원'은 국토부의 주요 사업과 매우 유사함. 특히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과는 무관함
- 청년주도 균형발전타운은 현재 '청년마을'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 '청년마을'은 24개가 아니라 더 많이 구축돼야 함. 매년 24개의 규모는 현재의 인구소멸과 청년인구 이탈현상의 속도를 결코 늦출 수 없음.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 의견 : 예산 증액

-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로 증액. 2024년 예산안이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최소화하더라도, 국정과제에 속한 사업들에는 예산이 할애되어 현 정부가 상정한 변화들이 추진되어야 함. 그럼에도 본 사업은 축소되었음.
- 지역의 청년 이탈은 인구감소의 핵심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청년주도 균형발전타운은 더 확대되어야 함. 이를 위한 예산 배정도 확대
- '빈집경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원'은 자생적 창조역량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이며, 행정안전부 사업이라기보다는 국토부에서 담당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국토부로 이관. 대신 이 사업에 배정된 50억은 본 사업의 다른 세세사업에 재배정해야 함.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주민사랑을 받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전액 복원돼야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750,300	352,500	0	0	-352,500	-1.00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역 내에서 구매 시 일정 금액을 환급받거나 액면가보다 할인(최대 10%까지)해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중앙정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사랑상품권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를 지원했음.
-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며 발행지원을 전면 폐지 시도. 하지만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전년도의 절반이 3525억이 한시적 사업의 명목으로 재설정되었음.
- 2024년 예산안에서는 2023년에 상정된 발행지원 예산이 전면 삭감되어 사업 자체가 폐지됨

■ 문제점

-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코로나19 사태 기간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를 내려보낸 건 당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 때문이었음. 하지만 현재의 지역 경제는 코로나 시국보다 나은 바가 없으며, 여전히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이런 상황임에도 발행지원을 폐기하는 것은 문제임
-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 지자체에 있음은 명확함. 하지만 그 주장에는 한 가지 조건, 즉 지자체의 재정분권이 제대로 이뤄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임.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에 대한 권한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있고 지자체는 재정상의 자율성이 심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유용성은 이미 지난 10여년 동안 실증된 것임. 좋은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임에도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오류
- 더군다나, 2024년에는 쪼그라든 세수로 인해 교부제도 큰 폭으로 줄어들기에 발행지원마저 없어진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유지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의견 : 2023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예산 책정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의 한시적 운영을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는 데까지 연장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서	의견	사업	작성자	쪽
문화체육관광부	삭감	종교문화활동지원 중 4차로잔대회	종교투명성센터	146
문화체육관광부	증액	종교문화활동지원 중 종교평화문화프로그램지원	종교투명성센터	148
문화재청	삭감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중 문화재관람료감면비용지원	종교투명성센터	149

과학예산은 삭감하고 종교예산은 증액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종교문화활동지원(1131-300) 중 4차로잔대회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본예산	2024년		증감	
			요구안	정부안	(B-A)	%
종교문화활동지원	20,695	22,597	29,576	25,163	2,566	11.4

- 종교문화활동지원예산은 전년대비 11.4%증가했음. 크게 다음의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됨.
 ①국제종교교류협력 ②종교의 사회통합기능 ③공직자종교차별예방 ④종교문화행사지원
-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문화행사지원은 31%증가했음
 (2023년) 15,454 (2024년) 20,200
- 종교문화행사지원은 주로 3대종교가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데 2024년은 특히 개신교의 예산이 119%로 두배이상 증가했음. (2023년) 2,351 (2024년) 5,151
- 개신교종교문화행사에서 가장 큰 부분이 2024년 신규편성된 4차로잔대회로써 정부예산 30억원이 편성됨.

■ 문제점

- 매년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종교문화행사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모호함. 매년 “전통문화의 보존과 장려를 강조하는 VIP의 지침”이 반복되는데 이미 수년전에 퇴임한 VIP의 지침이 계속 언급되고 있음.
- 금번 정부예산안은 R&D예산의 대거삭감으로 일찍부터 논란이 되고 있음. 이 와중에 종교행사예산이 증액된다면 결국 과학예산은 삭감하고 종교예산을 늘리는 모양새를 갖게됨. 그렇다면 현 정부는 과학은 포기하고 종교는 우대하는 정권이 되는 셈인지?
- 로잔대회는 기본적으로 개신교계의 선교대회임. 초교파적이고 국제적인 대회이긴 하나 결과적으로는 개신교의 배타적 선전전략을 모색하는 선교대회라는 기본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음.
- 예산편성의 근거로 삼은 것이 WCC부산대회인데 사실 이 대회도 개최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음. 당시 유력한 개최후보지로 시리아가 거론되었었는데 한국교회의 실력행사로 대한민국개최를 성사시켰고 결국 잘사는 나라가 힘을 과시하여 개최하게 된 사례가 되어버림.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한국교계내에서도 소위 잘사는 일부 교회의 실력행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지금도 한국교회는 해당 부자교회가 사회적으로 일으킨 파장의 여파에 허덕이고 있음(PD수첩에서 집중보도됨).
- 대형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일부분 국위를 선양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가난하고 열악한 교회를 돌봐야 할 선진국교회인 한국교회가 굳이 이 시점에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게 과

연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음.

- 한국개최 그 자체를 인정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공적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국의 종교계에 정부예산이 투입되는게 과연 정당한지 납세자의 입장에서 의문임.
- 그리고 이렇게 배타적 종교행사에 매년 번갈아가면서 예산을 집행하여 종교계를 달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결국 각 종교계는 정부예산을 잘 유치하는 지도자들이 전면에 서고 카리스마를 행사하는 경향을 만들어내어, 종교내에서는 종교의 개혁을 가로막고 종교외에서는 정교유착을 강화하고 있음.

■ 의견 : 전액 삭감

- 정부예산지원이 건강한 의사소통을 가로막아 종교내에 동맥경화를 일으킬 우려가 큰 바,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정부의 예산절감기조에 맞춰 종교문화행사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되, 특히 4차로잔대회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함.

■ 담당 단체 : 종교투명성센터 02-6927-2503

왜 종교평화를 축소하나?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종교문화활동지원(1131-300) 중
종교평화문화프로그램지원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	
	결산	본예산	요구안	정부안	(B-A)	%
종교문화활동지원	20,695	22,597	29,576	25,163	2,566	11.4

- 전술한 종교문화활동지원 예산의 4가지 카테고리 중 ②종교의 사회통합기능의 예산은 12억원이 감소하였음 (2023년) 4,199 (2024년) 2,994
- (종교평화문화프로그램지원) 예산감액 과정에서 그나마 종교평화문화프로그램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입안되어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됨.

■ 문제점

- 종교의 사회통합기능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건 좋은 방향이긴 하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준비되지 않은 급조된 모양을 보임. 예산지원의 대상이 기존의 유명한 문화재 위주로 편성되었고 전국적으로도 고르게 편성되지 않아 지역편향이 심함.
- 만일 이대로 진행될 경우 기존의 문화재관광코스외의 재탕이 될 우려가 있어보임.
- 첫 번째로 각 종교간 화합과 통합의 사례나 대립과 반목의 사례를 주제별로 발굴해낼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에는 남한산성과 천진암을 중심으로 가톨릭과 불교, 그리고 개신교의 교류의 스토리텔링을 엮어내려는 시도를 했고 실제로 연구용역까지 진행했으나 행정적 한계 등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음. 제주도의 경우에는 조선말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갈등의 첨예한 대립이 벌어졌던 대표적인 장소임. 좀더 디테일한 지역중심의 사례발굴을 할 필요가 있어보임
-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종교계를 넘어서는 지역연구자나 역사연구자들과의 협업으로 사전조사와 사례발굴을 하는데에 예산지원을 먼저 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보임.

■ 의견 : 증액

- 종교예산은 사회통합기능은 강화하고 개별종교지원기능은 축소해야 하는 바 사회통합예산의 규모를 작년수준으로 유지하는 틀에서 종교평화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증액이 필요함.

■ 담당 단체 : 종교투명성센터 02-6927-2503

문화재관람료지원, 정교유착의 블루오션인가?

문화재청, 일반회계,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1131-301) 중
문화재관람료감면비용지원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본예산	2024년		증감	
			요구안	정부안	(B-A)	%
문화재관람료감면비용지원		42,100	55,442	55,442	13,342	31.7

- 문화재를 보유한 기관을 중심으로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로써 2023년 중에 법안이 마련되어 2023년부터 예산이 집행됨

■ 문제점

- 사찰문화재관람료의 무리한 징수가 수년간 사회적이슈가 되자 사실상 조계종의 실행행사로 법안이 급박하게 통과되어 시행된 제도임. 이 과정에서 제도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2023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됨. 해당법안의 내용도 문화재관람료의 징수를 일부 혹은 전부 포기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바, 소득의 지원인지 비용의 지원인지 모호해짐.
- 징수의 포기에 따른 손해를 지원한다고 했으나 가격하락에 따른 소비증가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실제로 조계종은 관람객증가에 따른 제반비용증가분까지 추가로 청구하고 있음. 관람객의 수를 측정할 객관적인 방법도 모호함. 설사 관람객 수를 객관적으로 조사한다고 해도 애초에 징수위치가 문화재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관람의사가 없는 순수 등산객의 숫자도 포함될 여지가 많음.
- 이후 인플레이션 적용 등을 감안하면 관람료를 징수했던 당시의 기준자료가 지속적으로 인용되는건 두고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여의치 않은 경우 문화재보유기관은 지원액의 부족을 이유로 언제라도 감면을 철회하고 자체징수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음.
- 애초에 징수했던 관람료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문화재와는 상관없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는 진술이 많으며, 일부는 조계종 중앙 등 상급단체에 상납된 정황도 존재함.
- 앞으로 새로 발생하는 종교문화재 관람객 사업과의 형평성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상대적으로 기존 종교문화재가 많은 불교계는 기존 관람료에 대비하여 지원을 받게 되지만 애초에 징수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새로 종교문화재로 편입되어 새로 관람객을 받게 되는 후발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근거가 없어, 종교편향의 논란도 야기될 수 있음.
- 근본적으로는 투명한 회계공시가 되고 있지 않은 종교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해당 비용은 언제라도 다른 용도의 지출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전용될 수 있어, 부분적인 지원사업은 오히려 전체적인 회계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의견 : 전액 삭감

- 사용처 및 산출근거가 부족한 문화재관람료감면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해야함.
- 우선 종교계의 전반적인 회계공시대책을 마련하고 관람료지원에 대한 법률의 입법미비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담당 단체 : 종교투명성센터 02-6927-2503

정무위원회

부서	의견	사업	작성자	쪽
금융위원회	사업 보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함께살기연구소	151

청년들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예산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	367,801	605,677	499,994	132,193	35.9

- 본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청년정책으로 청년들이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정부 기여금 및 은행 금리와 합쳐 최대 5천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

■ 문제점

- 지난 6월 출시된 이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자 수는 매월 감소.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않는 한, 5년간 꾸준히 납입하기란 쉽지 않음. 게다가 카드실적 등 은행의 각종 우대금리 등을 감안하면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임. 심지어 국세청 신고소득이 없는 청년들은 가입하지 못함. 즉,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대상이 되지 않음.
- 자산형성사업은 근본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됨.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경우, 당장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목돈을 꾸준히 적립하기란 쉽지 않음. 실제로 이전 정부의 비슷한 자산형성정책인 청년희망적금도 초기에는 각광을 받았으나 납입금이 적을수록 중도해지율이 2명 중 1명에 이름.

<청년희망적금 납입금액대 별 중도해지율>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40만원 미만	40~50만원 미만	50~60만원 미만
49.2%	48.1%	43.9%	40.3%	17.3%	14.8%

(연합뉴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현황”, 2023/06/21)

- 이 사업은 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청년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목돈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역진성이 강한 제도임. 청년들 간 자산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음.

■ 의견 : 사업 내용 보완

- 역진성 보완 및 저소득층 포괄하는 제도로 개선 : 국세청 소득증빙이 없는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 확대, 저소득층 청년들의 가입 및 중도이탈 방지 위한 지원책 마련
- 청년들의 양극화를 유발하는 자산형성사업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현물 혹은 현금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음.

■ 담당 단체 : 함께살기연구소(010-2790-6107)

시민이 분석하는 2024년 나라예산 '2024년 예산안, 기후·인구·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있나?

발행일 2023. 11. 01.

발행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후솔루션, 동물권행동 카라,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플랜 1.5,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살기연구소
국회의원 김주영·민형배·양경숙·윤미향·이소영·장혜영·정태호

담 당 김은정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welabtax@pspd.org

시
민
이

분
석
하
는

2
0
2
4

나
라
예
산

토
론
회